

교육개발

1998

통권 116호

특 집 / 새 학교 문화 창조

우리의 학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권두칼럼 / '한 지붕 모래알 가족' · 함종한

시 론 / 교육연구의 토착화에 관한 하나의 생각 · 감태중

교육연구 / 초·중등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 연구동향 · 서희진

동 향 / 교육법학 연구의 동향 · 고 전

경제적 근본주의와 지구화가 남긴 공교육의 과제 · 성일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

기획조정실 홍보출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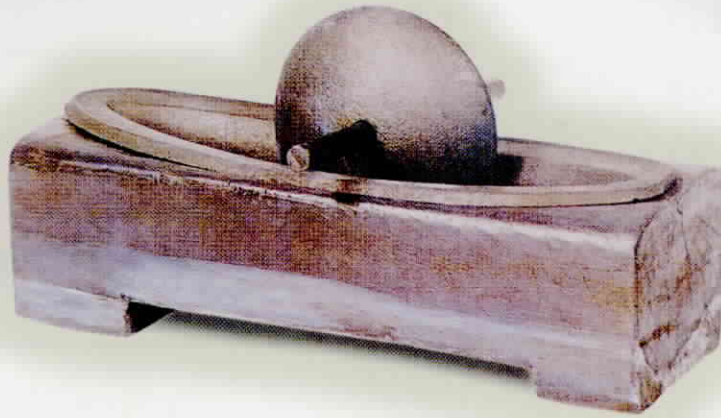
TEL (02) 3460-0233, 0234, FAX (02) 577-5117

홈페이지 주소 : www.kedi.re.kr

E-mail : keditor@ns.kedi.re.kr

라이팅 : kedi1225

천리안 : kedipr



약 연

藥 碾

한방에서 약재를 가루로 빻거나 즙을 내는 기구.

넓은 의미로는 약재를 가루로 만들던 기구인 연석(碾石), 멧돌, 절구, 유발, 약연, 분쇄기 등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배[舟] 모양의 약연만을 가리킨다.

가운데 홈이 팬 배같이 생긴 그릇에 약재를 넣고, 축을 끼운 주판알형의 연알을 앞뒤로 굴려서 빻는다.

약연의 명칭은 우리 나라에서는 한자로 '藥碾'과 '藥研'을 병행하여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모양이 배같이 생겼다 하여 약선(藥船)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약연(藥研)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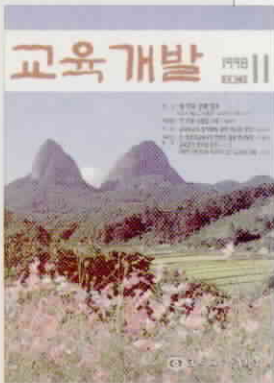
재료는 돌, 나무, 청동, 놋쇠, 청자, 백자, 오지, 무쇠, 유리 등 다양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약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달리하였으며, 은, 옥, 마노(瑪瑙) 같은 값진 재료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 자료 해설 : 정경아
- 사진 촬영 : 정택호

목 차

- 화제의 사진
약연(藥硯) 1
- 권두칼럼
'한 지붕 모래알 가족'/함종한 4
-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34
한국 한의학 교육의 뿌리/김남일 6
- 시론
교육연구의 토착화에 관한 하나의 생각/강태중 10

- 지상중계
한국 교육 비전 2020 : 교육전략 14
- 발언대
"믿어 주세요"/남미숙 20



특 · 별 · 기 · 획

새 학교 문화 창조 : 우리의 학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의미/고원영 26
- 학생이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정창현 30
- 우리의 학교, 무엇을 해야 하나?/서길원 35
- 학교가 아이들의 힘을 믿어 주는
공동체였으면 한다/김정금 39
- 학교 문화, 이렇게 바꾸자!/이세일 43

- 발행인/곽병선
- 출판심의위원장/공은배
- 출판심의위원/김정자, 김지순, 김흥주,
구차익, 이종태, 유현숙,
최돈민
- 홍보출판팀장/이희수
- 기 자/정경아, 정태호

*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본지는 비매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 연구동향/서희전 47
- 교육법학 연구의 동향/고전 53
- 경제적 근본주의와 지구화가 남긴 공교육의 과제/성일제 61



◀ 학교탐방

바다를 눈발으로 일구는
진정한 해양인을 육성하는 학교/최돈민
- 제주 성산수산고등학교를 찾아서 -

보고서 중계

-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 활성화 방안 86
- 학교 개혁의 실현을 위한 전략 탐색 88
-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 고찰 89

알아봅시다

- 전자도서관 이용법
- 자료검색을 중심으로 - /김정자 107

◀ 원고를 모집합니다/85

해외교육

- 일본의 교육통계 체계/박재운 93
- 국제기구의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 동향
/한유경 99
- 예능교육 개선을 위한 '링크센터'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가원 104

● KEDI 연구뉴스 74

●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112

‘한 지붕 미래알 가족’

함 종 한

국회 교육위원장

도쿄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에리카(여, 17세)는 오늘도 학교를 마친 뒤 오후 4시쯤 시부야 거리로 간다.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구스삭스를 신고 교복 치마를 허리까지 접어올려 초미니 스커트를 만들었다. 에리카는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한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도 없는 집은 따분할 뿐이다. 그래서 거리를 배회하지니 돈이 부족하다.

부모에게 타내는 한 달 용돈은 고작 6천엔. 매달 1만엔 이상되는 휴대폰 전화요금도 안 된다. 그래서 에리카는 오늘도 ‘아저씨’를 만나기로 마음먹는다. 아저씨를 만나면 단번에 3~4만엔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10대 여학생들의 소위 ‘원조교제’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다. 최근 일본 총무청 조사에 따르면 여고생의 4퍼센트가 용돈을 벌기 위해 ‘아저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다. 일본의 전체 여고생 수가 2,263,000여 명이니 90,000여 명의 여고생이 ‘원조교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여중생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 관계자의 얘기로는 여고생보다 여중생의 탈선율이 더 높다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 청소년 사회에도 ‘원조교제’가 성행하여 여학생들 둔 학부모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도 아이들의 철부지 높음은 확산일로에 있다.

최근에 어느 책임 있는 방송사에서 우리 나라 여고생들의 ‘원조교제’ 상황을 집중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반 친구 50명 중 약 20명 정도가 유흥가, 전화 사서함, 전화방 등을 통해 원조교제를 한다.”는 어느 여학생의 생생한 증언이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었다. 그 여학생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도 용돈의 유혹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어린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중벌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에도 그와 유사한 법률이 여러 개 있었고 꾸준히 단속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지만 청소년 생활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만 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개인적이지 않고 집단적이고 연대적이라는 것이다. 폭력서클, 약물서클, 가출서클 등 수없는 불량 서클이 청소년들의 생활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여학생들의 집단자살 사건에서 보듯 목숨을 끊는 일마저도 연대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조사에 의하면 ‘원조교제’와 같은 비행도 또래끼리 연대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바이러스성

전염병처럼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한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다른 행위와 달리 법률 적용이 예민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가정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들은 복잡한 사회구조를 내세워 가족끼리의 유대감이나 관심갖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를 이해하는 자녀가 드물고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드물다. 가족은 가정이라는 지붕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서로의 무관심 속에 생각도 따로 행동도 따로인 '한 지붕 모래알 가족'이 태반이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래알 가족'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비행이 늘어가고 가정의 비극이 늘어가고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가족의 무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정과 무관심은 아이들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고문이며 학대다. 이웃과 가족에게 무관심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따분하고 고독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있어서야 오죽하랴. 청소년 비행의 90퍼센트가 가정의 무관심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여학생들의 신종 아르바이트라는 '원조교제'만 해도 따분한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집이 따분하면 거리를 방황하게 되고, 길거리에 넘실대는 소비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학비를 축내게 되고, 축낸 학비를 보충하기 위해 '원조교제'와 같은 비행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 회의를 이겨내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게 되고, 심하면 자살까지 결행하고 마는 것이다.

일선교사들의 얘기로는 억제되지 않는 소비욕구로 부모에게 받은 학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학생이 전체의 20퍼센트가 넘으며, 이러한 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한 비행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한다. 더욱이 IMF 체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용돈이 줄어든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평소의 씀씀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원조교제나 유흥업소의 퇴폐적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이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니뭐니해도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모래알 가족'이 너무 많다.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병들어 신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학교에 전가시키고 사회에 전가시키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

비교해서 안됐지만 서구의 부모들은 이웃끼리 연대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감시하고 청소년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청소년환경보호연대활동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청소년의 탈선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또래끼리 집단화되고 연대하는 일에 익숙해졌으며 언제든지 무모한 짓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처럼 위험한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지붕 모래알 가족'을 청산하고 집안 분위기를 환하고 따뜻하게 바꾸는 도리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아이들의 엉뚱한 소비욕구는 가정의 높은 관심으로 차단하고 모자라는 용돈을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대체시켜 주는 지혜만이, 청소년 사회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원조교제'나 '집단지살'과 같은 비극을 막는 길이라 생각한다. 



한국 한의학 교육의 뿌리

글 ● 김남일

한국의 한의학 교육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의학은 한때 서양의학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존재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지만, 그 끈질긴 생명력, 국민들의 애호심, 그리고 여러 선각자들의 노력 등으로 이를 잘 극복하고 현재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한의학이 현대에도 한국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한국인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학으로 제몫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근세 이후 근대적인 한의학 교육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 여러 선각자들의 공로 때문이다.

개항 이후 서양의학이 들어와 의료제도와 의학 교육이 서양의학 중심으로 바뀌기 이전 한국의 의학교육은 수천 년 동안 한의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한의학 교육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의학(醫學)'이라는 교육기관을 꼽는다. '의학'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직관지에 보인다. 그 내용은 효소왕 원년(692년)에 '의학'이라는 의학교육기관을 두어 박사 2인이 학생에게 「본초경」, 「갑을경」, 「소문경」, 「침경」, 「맥경」, 「명당경」, 「난경」(이상은 고대에 쓰여진 한의서적들) 등을 가르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백제에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직접 시행하

는 자에게만 부여하는 '박사(博士)'라는 호칭이 붙은 '의박사(醫博士)'라는 관직이 존재하였음을 볼 때 삼국시대부터 이미 한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관하여는 이 이상의 자료가 없기에 더 이상의 추론이 불가능하다.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한의학 교육은 그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의사과거제도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 한의학 교육은 더욱 체계성을 얻게 된 것이다. 958년(광종 9년)에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로 실시된 과거제도에는 제술과나 명경과와 같은 문관을 뽑는 분야도 있었지만, 기술관을 뽑는 잡업(雜業) 속에 의업(醫業)을 포함시켜 의학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제시된 의사고시의 응시자격은 품관, 이속(품관이 아닌 자로 중앙관직자), 향리, 일반서민 등으로 신분적인 제한이 비교적 적어 의술에 능력 있는 자라면 의사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의사고시는 여러 과목을 통달해야 하였으므로 쉽게 급제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과거 이외의 특전이나 군공(軍功) 등에 의해 의사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의학교육은 그대로 의료현장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향약(鄉藥)'이라는 국산 약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형태가 토착화한 것이다. 향약이란, 한국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한국인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민족 주체적인 의학을 말한다. 고려후기가 되면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鄕藥方)」, 「향약고방(鄕藥古方)」,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 등 향약이라는 호칭이 붙는 의서들이 다수 간행되는데, 이 의서들은 국산향약재로 일반 백성들을 치료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처방서들이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한의학 교육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백성들을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어진 정치를 펴는 것이 제왕된 자의 의무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삼고 있는 조선사회였기에, 여러 제왕들은 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의학 교육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태조는 1393년에 각 도마다 의학교수관이라는 의학교육자를 1인씩 파견시켜 이들로 하여금 「향약해민경험방」을 강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의학교육을 강화시켰다. 세종대왕은 의사고시에 사용할 교재와 시험제도를 법으로 제정하였는데, 이 때 거명된 의사고시용 교재가 25종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세종대왕의 의학교육에 쏟은 정성을 느끼게 한다. 세조는 의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의서습득관이라는 관직을 두어 의사들이 의서를 공부하도록 제도화하였고, 또 세조 자신이 의사들에게 친히 의학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종은 세종 때 편찬을 마친 「의방유취」를 비롯한 다수의 의서를 간행하도록 하여 의학 교육을 부흥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의학교육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조선 중기에 「동의보감」이라는 민족의학의 보물이 나올 수 있게 하였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인체, 질병, 약물에 대해 체계적인 신이론을 구성해 내어 세계 만방에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동의보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우수성이 돋보인다. 체계적인 항목 선정과 논리 전개, 가

난한 백성들이 저렴한 의료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단방요법(單方療法: 하나의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 약물에 대한 한글표기를 실친 하여 한의학 보급에 힘쓴 점 등이 그러하다. 제대로 된 인성을 지닌 의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의학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현대사회에서 바라볼 때, 허준과 같은 인물이 조선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의학교육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동의보감」이 나온 이후 한의학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 교육되게 되었다. 특히 식자층에 속하는 사대부들이 개인적 수양의 차원과 부모님의 질병, 지역 백성들의 질병 구료 등을 위해 한의학 학습에 몰두하게 됨에 따라 한의학 교육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되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한의학 교육은 개항이 되어 서양의학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민서 같은 한의학 교육기관이 폐지되고 그 재원으로 광혜원(후에 제중원) 같은 서양식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서양의학 교육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에 의해서 서양식 의학교육만 옹호되고 한의학 교육이 부재하게 된 것은 한의학 존립 자체의 위협이었다. 이에 1904년 장용준, 홍철보, 김병관 등 민간 한의사들이 강필주, 조동호 등의 발기와 협조로 대한한의학교를 설립할 것을 고종에게 주청하였다. 고종은 이에 현 당주동




봉상사 남문골에 있는 내담사 관사에 설립하도록 인허하여, 학생수 40여 명, 고서관 홍철보, 장용준, 이학호, 교사 이기영, 이교육, 송태환, 조용환 등으로 구성된 동제의학교(同濟醫學校)가 설립되도록 도와 주었다. 그러나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됨에 따라 개교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후 1909년에 한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회(大韓醫士會)가 임원회를 개최하여 한성부의 한의사들을 소집하여 동서의학강습소(東西醫學講習所)를 만들어 한의학 교육의 부흥을 꾀하였다. 1912년 10월에는 수문동 보광학교 자리로 이전하여 경성부의 인가를 얻어 공인 의학강습소라고 칭하고, 그 후 익선동 전선의회회관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가, 회의 해산과 함께 다시 제동 홍종철의 집으로 이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919년 홍종철이 서거하여 폐소되고 말았다. 그 후에 한의사 단체인 동서의학연구회(東西醫學研究會)가 1922년에 창립되어 부속의학강습원을 설치, 한의학 교육의 명맥을 잇다가 경기도립의생강습소(京畿道立醫學生講習所)가 만들어져 1938년부터 경기도청 강당을 빌려 강의를 시작하여 매년 50명씩 6년간 300명을 양성하였다. 이 때 배출된 한의사들은 광복 후 한의학 교육의 초석이 되었다.

광복이 되면서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한의사회와 한의학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1945년 10월 조선의사회(朝鮮醫士會)라는 한의사단체를 창립한 후에 제일 먼저 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러 인사들의 노력으로 1948년 드디어 인문학과와 동양의학과의 2개과로 된 수업연한 4년의 을종(乙種)대학으로 동양대학관(東洋大學館)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 학교가 바로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신이다. 1951년에 한의사체도가 창립됨에 따라 한의학 교육은 더욱 힘을 얻게 되어 동양대학관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1953년에 동양대학관은 문교부의

허가를 받아 서울한의과대학으로 승격하게 되고, 1955년에는 다시 동양의약대학(東洋醫藥大學)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한의학 교육기관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듬해인 1962년 포고된 학교정비령에 따라 1학년의 모집이 중지된 것이다. 이에 한의사협회에서는 호소문으로, 학생, 교수 등은 당국자와의 간담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드디어 1964년 6년제 한의과대학으로 승격되게 되었다. 이어 동양의약대학은 1965년에는 경희대학교에 흡수 병합되어 한의과대학 한의학과가 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경산대, 대전대, 경원대, 상지대, 세명대, 동신대, 동의대, 전주우석대 등 11개에 달하는 한의과대학에서 3,500여 명의 한의학도를 교육시키고 있다. 한의과대학을 거쳐 사회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인원만도 1만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한의학에 입문하고자 한의과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날로 상승하고 있다. 한의과대학에서의 한의학 교육도 양과 질에서 모두 발전하고 있다. 한의학 교육의 전성기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에서 이와 같이 한의학 교육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한의학 교육의 뿌리 깊은 전통을 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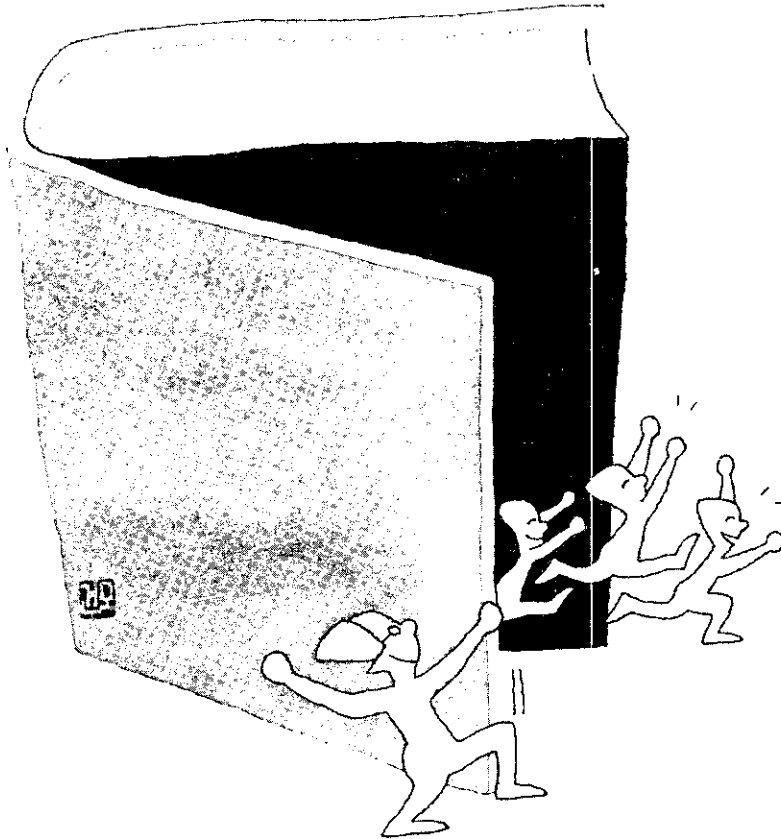
김남일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사학 전공, 박사)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교수 (의사학교실)
-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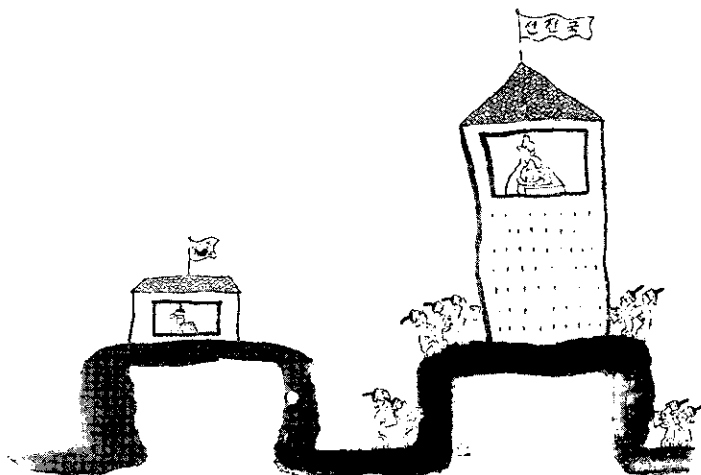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의 토착화에 관한 하나의 생각

강 태 중



1 어떤 학문 영역에서건 연구가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일일지 모른다. 연구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이며 학자의 관심이나 배경 등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나 학자들의 모임 등에서 드물지 않게 연구 경향을 정리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영역에 따라 중요한 연구 흐름들이 있고 그 흐름들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이 도모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믿음에 기대어서 우리의 교육 연구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생각을 가다듬어 보고자 한다.

2 사회 과학이 특정 사회를 초월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이 질문이 '사회 과학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고 학문의 성

격을 묻는 것이지만, 사회과학자 개인에게는—특히, 학문적 후발국(後發國)의 학자들에게는—'그가 속한 사회에 뿌리를 두지 않는 탐구 문제를 제기하고 천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라고 학자적 생존의 향배를 묻는 것이다. 후발국의 학자들은, 예외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이론이나 관점을 습득하게 되고 그 습득된 시각에서 문제를 포착하고 탐구하는 데 익숙해진다. 그들이 이른바 학문적 선발국(先發國)에 유학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두고 자성하게 된다. 자신이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하면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나 논의를 다루는 것이 사회과학자에게 의미 있는 일인지 되돌아보

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학계가 꽤 오랫동안 교육학의 '토착화'를 강조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다고 본다. 교육학계에서의 연구나 논의가 한국의 교육 현실을 구명하는 데 분명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늘 역설해 왔다. 그러나 그 역설의 효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 듯하다. 1970년대 초에 이미 '한국적 교육학'의 논란은 교육학계의 '역사적인' 논쟁으로까지 비화하였으나, 1990년대의 교육학회에서도 여전히 "한국적 교육학, 한국적 이론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연례의 기초 강연에서 나오고 있다.

3] 교육학 연구가 우리의 현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흡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까? 물론, 우리 나라의 현실을 주제로 하는 연구 흐름이 우리 교육학에서 좀더 도도한 주류(主流)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좀더 많은 학자들이 우리 현실을 탐구하는 데 종사해야 하고 그 결과 또한 충실한 것들일 때 토착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숫자만 늘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학위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교육 현상을 문제삼아 연구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른바 정책 연구들도 적지 않게 우리 현실을 다루고 있다. 절대적으로 그 수가 많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현실을 다루는 연구 숫자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연구의 양보다 질적인 속성을 두고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현실을 탐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의 연구들이 아직 현실 해명에 미흡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 교육학의 연구 환경과 교육학을 하는 우리의 학문적 관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4] 먼저 연구 여건을 보면, 학자들이 자신의 고유

한 관심을 실제 연구 문제로 삼는 일이 쉽지 않다. 우리 현실을 문제로 삼는 연구라 하더라도 그 주제가 종종 연구자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연구자의 관심과 배경에서 잉태된 주제를 탐구하게 되는 기회보다 '주어진' 주제를 탐구하게 되는 개기가 더 많은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주제와 연구비가 함께 주어지는 청탁 연구, 제한된 영역의 주제를 전체로 공모되는 지원 연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된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정부지원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등, 교육학 연구에서 작지 않은 부분을 점하는 연구물들이 그러한 계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학문적 이력을 걸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온 주제를 탐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러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덜 적극적이고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더 세련시키려는 의욕을 덜 지니게 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자들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 내지 못해 미진한 결과로 종료되기 십상이고, 그 미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시도됨도 없이 일회적인 과제 수행으로서 의미를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구자(학자)들이 주어진 연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태는 훨씬 더 호전될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좀더 적극적으로는, '지원되는' 연구에 기울어지지 말고 '자신의' 연구에 전념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자들의 자세나 태도 그리고 역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합당한 반론이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이라면, 학자들 개인 고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연구 여건에서 교육학의 토착화는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해명에 뚜렷한 업적을 이루어 가는 학자들을 주위에서 본다. 이들에게 위에 언급한 여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학자가 소수라는 점은, 그들에게조차도 여건의 척박함이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비를 받아 가며 여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정부나 대중의 관심과 인정(본원적 의미에서 학문적 인정은 아니라 할지라도)을 받아 가며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에 미혹되지 않고 개인의 학문적 과제에 몰두하는 데는, 학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또 다른 면의 어려움도 따르리라고 짐작된다. 개인적으로 연구하려는 과제와 지원되는 과제가 다행히 일치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연구 지원이 대체로 단속적이거나 추세를 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다행한 경우의 기간은 매우 한정된 것이기 마련이다.

5. 연구 여건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학자들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교육학 영역에서 한국적 교육 현상을 다루는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의 토착화가 아직 미진한 것은 연구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은 데서 비롯되기도 하였겠지만, 연구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작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연구 주제로 포착하고 해명하는 데 연구자 스스로 부족함을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는 자성이 필요하다.

교육학의 토착화가 미진한 원인을 학자들에게서 찾고자 할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의 악순환 고리이다. 이 문제는 흔히 학자들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론을 운위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론이 당연히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문제는 이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듯하다. 즉, 학자들이 현실을 보지 않고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기보다는, 현실을 보고 이론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럴함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아마도 학자들이 현실을 보지만 마치 현실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

큼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학자들이 현실을 보는 것은 학자로서의 수업을 쌓으며 형성한 시각 또는 안목을 통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각이나 안목이 우리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것일 때 우리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후발국의 사회과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다분히 다른 사회를 배경으로 체계화된 이론이나 관점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 점이 사실인 만큼 후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그와 같이 익힌 시각에서 현실을 보게 되고, 그 시각의 근거가 되는 사회와 우리 사회가 다른 만큼 현실을 잘못 볼 가능성이 있다. 우리 현실에서 문제를 포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문제가 순수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회에 뿌리를 둔 관점에서 문제를 읽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회에서의 문제를 투사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6. 외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한국인 교육학자가, 잠깐 귀국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한국의 교육학자들은 “대학 1, 2학년 수준의 교육학 입문 강좌에서” 다루는, “교육의 연구나 실천에서 극히 초보적인” 개념인, 공교육·사교육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공교육은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조직 운영하는 교육 활동이고 사교육은 민간인이 사사로이 운영하는 교육 활동인데, 한국 교육학자들이 이 기본적인 사항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우리는 오랫동안 지극히 한국적인 문제로서 ‘사교육비’ 문제와 씨름해 왔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그 씨름의 과정에서 한국 학자들은 최면에 걸린 듯이 한결같이 사교육비 개념을 잘못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며 지출한 수업료 등을 ‘사교육비’가 아닌 ‘공교육비’로 파악해 왔는데, 이는 사교육비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민간 부문에 속하는 만큼 그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공교육비

가 아니라 사교육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자가 말하는 본래 의미의 '사교육비'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한 대안이 되는(공립학교 교육과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회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기회를 마다하고 사적으로 교육을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립학교는,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의 양상이나 심지어 수업료에서도 공립학교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사립학교에 취학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사교육비라고 보기에 어색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연구들이 사교육비의 의미를 지적당하는 것처럼 변질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된다.

이렇게 추리하고 보면, 한국의 교육학자들이 '사교육비'의 의미를 잘못 파악해 왔다기보다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개념을 적절하게 토착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이 사교육비라는 개념을 변질시키고 있는 사실이 그 개념이 생겨난 '다른' 사회에서의 맥락과 의미에 지극히 충실하려는 후발국 학자들의 관성을 드러내 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의 사립학교가 사실상 그러한 나라에서의 공립학교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가깝도록 바꾸어 사교육비의 개념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를 독특하게 규정하여 연구해 온 전통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좀더 절실하게 제기해 온 중요한 다른 문제를 다소 간과하는(우리 현실을 분명하고 심도 있게 해명하는 데 미흡한)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교육비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제는 사적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 점을 중시한다면, 공적인 부담에 비해 사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문제삼는 방향으로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테면,

사립학교의 비중이 커서 교육비상 원천적으로 사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있는 교육체제 자체를 문제시하거나, '과의'교육비 문제를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순리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사교육비 연구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익숙해 있는 시각에 의존하여, 사립학교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거나과의 교육비를 교재 구입비나 학용품비 등과 혼합하여 '사교육비'를 개념화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에서 문제시해야 할 중요한 주제를 정곡으로 다루지 않고 다소 비껴 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어찌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를 두지 못한 시각에서 연구 문제를 포착하고 탐구하는 우리의 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교육학의 토착화를 더 디게 하는 한 원인이 아닌가 한다.

7. 교육학의 토착화는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학문적 환경이 호전되어야 풀려 갈 수 있는 문지이고, 학자 개개인이 늘 신경을 세우고 자신의 연구 문제를 거듭 정련하는 수고를 들여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교육학계의 숙제라는 점에서 누구나 고민하고 있을 문제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를 잡자는 의미에서 제기하였다.



강 태 중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 본원 연구위원
- 「새 학교 구상」, 「학교 효과 연구」의

한국 교육 비전 2020 : 교육전략

양승실 (본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연구원)

본원에서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 2020년의 바람직한 한국교육을 이루어 나갈 교육전략 탐색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7개 주제를 6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부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 중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현안 쟁점과 어우러져 세간의 주목을 끈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주제 1

사교육비 해소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 고흥일 (전남대학교 교수)

우리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인 동시에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논제로 떠오른 이른바 '사교육비' 문제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접하여, 기존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외비를 축소하고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면서, 2020년의 미지의 세상에 슬기롭게 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필자가 생각하는 기존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란 다름 아니라 학교와 대학이 모두 각자의 본래적 교육활동보다는 입시경쟁이라는 극히 외적인 요인에 기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진짜 공부

보다는 대학 가는 일에만 몰두하여, 학교와 대학으로 하여금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였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활동이란 입시준비를 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대학은 서열에 따라 학생이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시키지 않아도 된다. 한 마디로 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입시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가? 입시 문제는 이 나라 교육체제의 근본문제 이면서 핵심문제이다. 만약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고등학교라는 중등교육기관의 지휘감독을

말는 상급기관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다같이 전문교육기관이라면, 오늘날과 같은 폐단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등교육 기관이란 말 그대로 '고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이제 전국민의 절대다수가 여기에 취학하게 됐으니 전국민의 절대다수가 '고등인력화'하게 된 셈이다. 경제란 고등인력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중간치기 일꾼도 있어야 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짜맞추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식당에서 밥 짓는 아주머니도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이 불필요한 인력에게까지 그것을 베푼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귀중한 교육자원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재정수입은 현재 고갈되어 가고 있고 가까운 미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과중한 과외비 부담을 불평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입시경쟁을 부추기다 보니 '진학 드라이브'가 국민 절대다수를 고등교육기관에까지 몰아세운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쓴 국가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제는 교육체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 아이들에게 입시준비만 시키면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치열한 입시경쟁이 진학 드라이브를 부추긴 데 편승해서 대학교수들이 연구와 교수에 전력하지 않고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교와 대학이 다같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여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게 해야 한다. 2020년이라는 한 세대 후의 세상을 내다보고 이 나라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관점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종래 사교육비론의 반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과외비면 과외비지 그것을 구태여 '사교육비'라고 불러서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의 강구를 어렵게 해왔다는 것이다. 나아가 입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전략의 전제로 입시문제를 입시제도가 나빠서 생기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시경쟁의 구조를 봐야 하고 그 구조가 교육과 사회경제에 주는 효과를 봐야 한다. 한국의 입시경쟁 구조는 학교와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힘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학생이 몰려들게 단들었기 때문에, 학교와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부실화되었고 자생력이 없어졌다. 입시경쟁 구조에는 2개의 장치가 있어서 입시경쟁을 강화하고 진학 드라이브를 복돋운다. 첫째, 국가 관리하의 획일화/일원화된 점수위주의 석차경쟁이 그것이다. 이 경쟁은 현재 수능시험으로 나타나 있다. 수능시험은 전국적으로 획일화/일원화되어 모든 학교와 학급은 석차경쟁에만 관심을 갖는다. 둘째, 대학 간의 고정불변한 서열체계가 그 두 번째 장치다. 이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로써 사실 전국의 대학이 하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준다.

이런 시각에서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열쇠는 (1) '입시'라는 제도를 없애고, (2) 입시경쟁 구조의 두 장치를 깨뜨리는 데 있다. 5년 내지 10년 간에 걸쳐 무리를 최소화하면서 (1)과 (2)를 점차적으로 수행하여 입시문제를 완전 해결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2020년에는 현재의 정책에서 문제의 완전 해결로 착실하고 틀림없이 나아가는 '과도적' 전략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시라는 제도의 폐지 선언', '전국 일원화의 석차화 깨기'와 '대학간 서열체계 깨기', '공교육 다지기'와 '사교육 활성화'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2020년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육자

와 교육연구자들이 생각할 것은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개인과 사회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에 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물론 실망스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전지구화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단방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IMF 국제금융 신탁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필요조건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한국 사회의 전근대적 요소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여야만이 글로벌화하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의 핵심적인 요소가 연고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대학입시일 것이다. 한국인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2020년 한국교육이 당면하는 기본과제일 것이다.

주제 2

학교선택론과 교육의 책무성

■ 정기오 (홍익대학교 교수)

학교선택론의 배경과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접근방식을 화두로 꺼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1960년대 후반은 거대한 저항과 기존 권위의 재검토 시기였다. 서구에서는 이 때 대학을 포함한 근대적 학교체제의 권위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모리스 세이는 결과에 책임질 것을 바라는 공중의 요구에 따른 책무성과 평가가 지역사회 교육의 기본 바탕이라고 정의하면서 1970년대는 미국 교육에 있어서 책무성의 10년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70년대 내내 미국 경제는 생산성의 감소와 제품의 질 저하로 고민하고 있었고 그 책임은 학교교육의 부실로 돌려졌다.

미국의 학교교육은 80년대 10년의 기간 중에도 사회의 요구에 그다지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했다. 이 기간 중 미국 교육에선 분권화, 자율화 그리고 이를 위한 구조조정이 다양하게 시도되면서 교육관료제에 대한 집중적 비판이 제기된다. 학교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면 환경의 수요에

대한 단위학교의 탄력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교육을 지배해 오던 교육전문직주의 또한 타파의 표적이 되었다.

학교의 책무성 논란이 20년 이상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는 동안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론이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0년 클턴과 워트가 편집한 2권 짜리 책 「학교선택과 미국교육에서의 통제」와, 같은 해 브루킹스연구소가 출간한 처브와 모오의 「정치와 시장과 미국학교」라는 저서를 계기로 분위기는 급기야 학교를 더 이상 교육관료제에 맡기지 말고 시장원리에 맡길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학교선택론은 기본적으로 이상 약술한 미국 교육의 상황과 맥락에 묶여 있는 개념이다. 한국 교육은 이러한 미국 교육의 최근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데서 그 향후 발전에 관한 논의의 계기를 찾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장주의에 입각한 학교 선택론은 교육관료제나 교육전문직의 실패가 있을 경우 당연히 제기되는 대안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학교선택론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고려되는 만큼 한국에서 교육행정과 교육전문직의 실패 부분이 명확히 진단되어야 하며 교육관료제나 교육전문직 체제가 과연 어느 정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는지 회복이 불가능한지를 한국적 상황에서 검토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미국교육에서는 왜 학교의 책무성 보장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이론과 혁신사례가 제기되는가? 공교육 체제에서 학교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다면 이는 무엇보다 장학체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엔 사실 유럽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은 학교의 책무성 보장을 위한 장학체제가 없다. 단지 교사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위주로 하는 장학 이론만이 무성할 뿐이다. 우리 나라의 장학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도 미국식 장학 이론이 무성해지면서 책무성 보장이라는 장학의 실천적 목표가 망각되었기 때문이라 본다.

미국 교육에서 학교의 책무성 문제가 심각해진 또 다른 원인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제인 교육 전문직주의가 붕괴된 데에 있다. 그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조합주의와 단체교섭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교육 부문에서 노사관계 모델에 의한 단체교섭의 도입이야말로 미국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교의 책무성을 상실케 한 주된 원인이다. 단체교섭에 의해 교원단체가 단체교섭 테이블과 교육감 선거에서의 영향력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함께 손에 짚으로써 주민을 대표한 교육청의 학교의 책무성 보장 임무는 무력화되었다. 이 와중에서 전문직의 이념은 오히려 더욱 훼손되고 그 장점을 상실해 버려 학교선택론

이 부상하였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시장논리와 학교선택론에도 한계가 많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있을 때 공급과 수요의 양상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의 하나는 양측의 상대방 선택권 유무이다. 서비스 조직을 양측의 상대방 선택권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틀에 따라 교육운영 체제를 다음의 4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한국의 교원연수와 평준화된 고교(공급자, 고객 모두 선택권 없음), (2) 프랑스, 독일의 국립대학(공급자는 선택권 없음, 고객은 선택권 있음), (3) 특수사례(재활 평생교육을 위탁 경쟁 입찰하는 경우-공급자만 선택권 보유), (4) 한국의 비평준화 고교, 한국, 미국의 대학(공급자 고객 모두 선택권 있음) 등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교육에의 시장체제 도입을 말하는 학자들 대부분의 주장이 사실은 한국의 비평준화 고등학교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시장체제에 한정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이론은 바꾸쳐 제도 또는 등록금 조세면제 제도를 통한 소비자 선택 원리를 도입했을 뿐 여전히 주된 재원을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공교육 체제이지 학부모 부담과 사립학교에 주로 의존하는 한국의 비평준화 고교교육의 시장화 정도와는 거리가 멀다. 시장화 효과를 분석한 처브와 모오 등의 실증자료들도 카톨릭계 학교가 대부분인 미국의 사립교육을 공립교육과 비교 분석한데 불과하다. 처브와 모오의 주장에서 더 나아가 (한국식의) 사립학교 체제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시장화를 주장하는 것이 리버맨 등 시장이론가들이다. 여기에 반대해서 공교육 중심론자들이 시장을 통한 학교교육이 불가능함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시장 옹호론이나 반대론이나 모두 아직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시장화된 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교육의 현실과 성과에 비추어 미국에서의 시장선택 논의의 현실성을 검증해 보고 그것이 한국 교육에 갖는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전체 교육체계의 운영 측면에서 볼 때 학교선택론은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선택권을 갖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된 정책담론이다. 그러므로 미국, 유럽의 초·중등 교육체제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담론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급자와 고객이 모두 선택권을 가진 비평준화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시장화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교육개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한국의 초·중등교육은 시장화된 부분과 공교육화된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평준화 지역의 고교의 경우에 학교선택론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비평준화된 고교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학교선택론에 대한 반론이 더욱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가 취할 입장은 '공교육 체제냐 시장원리의 도입이나' 라는 논란보다는 어떤 부분에 어떤 체제가 필요한지를 잘 가리는 것과, 그 결과 공교육화된 부분은 공교육답게 시장화된 부분은 시장화된 부분답게 각각의 원칙대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운영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교육에서 (1)의 유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초등, 중등 교육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동을 시도하는 사회적 국민적 요구는 아직 많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학교선택론을 얘기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진단대로 한국교육의 이 부분에서는 학교선택론을 교육체제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학교와 학부모/학생 관계 차원에서 학교의 책임성과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찬성과 반론이 무성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체제 개편과 시장체제의 도입을 이론적, 정책

적으로 논의하고 미국에서의 학교선택 관련 논쟁을 한국에서 수용할 때에는, 이미 시장체제를 취하고 있는 고등교육이나 비평준화된 고교교육이 과연 시장원리의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비평준화 고교교육이나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차체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 공급자와 고객이 모두 선택권을 갖는 시장체제를 선택했다면 이 체제 운영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규제의 투명성과 선택권을 가진 공급자와 고객 행동의 일관성과 책임성이다. 한국의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이 분명히 주어진 것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지 도대체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면 시장체제를 취하지 않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없애는 것이 훨씬 체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불투명한 시장 규칙에 입각한 시장체제는 최악의 체제를 낳는다.

대학들의 시장 내 행동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유럽식 대학 관념과 미국식 대학 관념이 뒤섞여 가치관이 혼돈되고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 대학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일관성 책임성은 대학의 명예를 걸고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선발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타인에게 계량화된 점수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권리라는 것은 남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다만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따로 공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우리 나라 대학 입시 관련 모든 문제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하는 대학의 눈치보기에서 비롯된다. 둘째로 선택권 행사에 따르는 모든 부담과 비용을 대학 스스로 지라는 것이다. 학생선발을 위해서 또 그 불필요하고도 위선적인 공정한 전형의 입증을 위한 엄청난 자료수집과 평가의 부담과 비용을 고등학교

나 정부에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 이론적 대안에 대해서 흔히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론을 펴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현실은 학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폐지하고 유럽식으로 가는 것이다. 유럽식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체제를 효율화하는 것이 오히려 책무성이라는 측면만 보면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다.

흔히 효과적인 민간통제의 원리로 Choice와 Voice를 꼽는다. 한국교육은 Choice의 원리가 부족한 체제라기보다는 오히려 Voice의 원리가 부족한 체제이다. 바꿔 말해서 한국의 학부모, 학생에게 지금 급한 것은 Choice 보다 Voice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교육화의 정도가 미국보다 훨씬 강한 유럽국가들에서 학교선택론이 비교적 제한적 반향만을 일으키는 이유는 유럽의 교육이 OECD 보고서가 지적한 학교 중심의 당사자 간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의 역할에 대한 공유된 신념을 발전시키고 학부모와 학생의 Voice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도 이미 학부모와 산업계의 불신에 직면한지 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체는 이에 대한 응답을 계속 피하고 있다. OECD가 지적한 교육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가장 첨단을 가는 곳이 우리 나라이다. 교육체제를 학부모 선택에 기초한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자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나라 교육체제의 많은 부분, 과외 사교육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이 시장체제화되어 있고 공교육은 구석에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나라의 교육시

장은 학부모/학생의 선택권 목소리는 학교의 학생 선발권 목소리에 가려져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오히려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이미 시장화되어 있는 부분을 무책임하고 독점의 혜택을 입는 유사 공급자의 시장이 아닌 진정 투명하고 경쟁적인 수요자시장으로 합리화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 이외에도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틀 정립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편 방안,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열띤 공방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21세기를 당면해 가기 위한 교육정책 추진전략도 모색되었다.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국난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전망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안을 구안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은 일견 상반되는 사회화라는 보수적 기능과 사회개혁이라는 혁신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고, 미래예측 또한 항상 낙관적 관점과 비관적 견해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무성한 교육부문과 미래부문의 결합을 시도하니 쟁점이 몇 배로 불어나고 논의해야 할 주제가 아주 많았다. ☹

“믿어 주세요”

남 미 숙



·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서울시 교원 연수원 파견교사
·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외

시각하는 말

“이 사람, 한번 믿어 주세요.”를 강조하다가 결국 믿지 못할 일만 수두룩하게 저질러 놓은 것이 후일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진리(?)만 확고히 만든 어떤 유명한 인사(?)의 선례가 있지만, 이런 불길한 선례 때문에 행여나 하는 마음에 교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지만 차마 못하는 말이 있다.

“우리 교사들, 믿어 주세요.”

교사에 대한 몇 가지 불신들

☞ **이야기 하나** 얼마 전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교육과정을 읽어 보고 아이들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육과정 책은 학교 서재에 먼지만 뽀얗게 쌓여서 잘 보관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그저 새교실이나 교육자료에만 의존하세요. 지도서 읽어 보기도 귀찮다고. 그래도 그나마 보는 것이 다행이지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소신 있는 선생님의 반박을 받고 그런 발언을 했던 모 대학의 교수님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지만, 이런 교사에 대한 불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 **이야기 둘**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어떤 모임에서의 일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교육과정 재구성 혹은 교사 재량의 내용 삼입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발표자의 말을 듣던 어느 교수가 발끈해서 말허리를 잘랐다.

“그런 선생님들의 말을 믿으세요? 선생님들은 책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지요. 가르칠 내용이 적을수록, 시간 수가 적을수록 좋아지는 게 선생님들 아닙니까?”

물론 이 말도 어느 젊은 선생님의 흥분 속에 찾아들었지만 그래도 그 교수는 자신의 소신(?)을

좁히지 않으려고 토를 달았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는 선생님같이 열성적인 몇몇의 선생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보통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요.”

◀ **이러한 말** 사적인 모임에서 어느 교장 선생님의 변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한 교사 연구대회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몇몇 선생님이 조퇴를 하고자 교장실에 들어왔다고 한다. 물론 교장 선생님은 한마디로 안된다고 돌려보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학교 근무시간이 끝나고 모여야지 그런 개인적인 일로 조퇴를 하다니? 도대체 교육부라는 데는 학교교육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모든 교사들이 너도나도 연구한다고 매달리고, 애들은 다 자습시키고……, 1000팀을 지원한다고 해 봐. 한 팀당 교사 20명씩 잡으면 전국적으로 20,000명의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800,000명이 허구한날 자습만 하게 되텐데…….”

참 계산이 빠르다고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지만, 그러한 정확한 계산은 이미 여러 장소에서 이러한 교사들의 나태에 대하여 토로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아무도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대꾸를 하지 않자, 마지막 말을 덧붙이면서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주장을 아쉬운 듯 끝을 맺었다.

“그저 돈 준다면 모두들 눈이 멀어서…….”

◀ **이러한 말** '97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에서 다루고 있는 ‘멀티 교실 낯맞’이라는 기사는 교사들의 정보 소양 능력을 의심하면서 국가 재산의 낭비를 꼬집고 있다.

정보 시대에 걸맞는 복지사회를 다지기 위한 기초 공사가 흔들리고 있다.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며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던 정보화 시범사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곁돌고 있다.

이에 곁들여서 강원도 한 초등학교 교사의 변을 인용하고 있다.

지는 '95년부터 원격교육 시범학교의 멀티미디어 교실을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요즘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와 정보통신부가 힘을 모아 멀티미디어 교실을 만들어준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막상 원격학습을 해 보려니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없다. 겨우 몇 가지 교과목에 대한 교육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로 꾸며 보았지만 초등학교 교사 몇 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속 정보통신망을 깔아놓고서도 소프트웨어가 없어 비싼 장비를 놀린다면 이만저만 낭비가 아닙니다.”

오해에 대한 근거와 변명

물론 이들의 변이 모두 다 허황된 것이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이다. 이들의 오해가 어디에서 짙어졌는지, 나의 교사시절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변명을 하고 싶은 것은 나의 작은 노력이 허무해질까 하는 염려에서일까?

◀ **원래의 오해에 대하여** 처음 2년 간의 교육대학 생활을 마치고 교직에 들어섰을 때, 교과서와 지도서는 나에게 성서와 같은 존재였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인,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은 모두 나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지도서에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하여 매우 현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 맞는 말이고, 그 중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나의 무지의 소치라고 여겨졌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이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런 건 이다음에 배우게 되는 거야. 아직은 일러.”

예를 들어 아이들이 전자식에 관하여 배우면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과의 관계에 관한 규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가 관심있어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정지된 지식이 아닌, 때와 장소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나 아동에게 많은 가치를 주게 된다.**

칙에 대하여 물어오면, '그러한 내용은 6학년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지도상의 유의점을 상기하고 준수했다. 그러다가, 지도서에 남발되는 참고자료와 지도상의 유의점에 점점 면적이 되기 시작했다.

지도서에는 모두 일정한 형식이 있었다. 주제, 학습 목표, 준비물, 차시, 교수 학습의 실제, 참고자료, 지도상의 유의점 등등..... 그리고 이러한 일정한 틀이 쓸데없는 지면 할당을 더하게 되고, 결국 지도서를 꼼꼼히 읽어 보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한 범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지도서와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지도서를 쓰다 보면 정말 지도상의 유의점이 필요 없거나 모든 교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유의점'이라고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꼭 교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지도상의 유의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과 함께 '유의점'이라는 빨간 신호등으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유의점'을 더 이상 유의점으로 보지 않고 쓸데없는 잔소리쯤으로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지도서를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보아 넘기다가 이제, 지도서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베테랑'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었음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다.

지도서에는 아이들을 지치게 하는 너무나 뻔한 교사의 질문과 아동의 대답이 지리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일정한 틀을 벗어나,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틀 없이 과감하게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은 너무나 과감한 발상인가? 예를 들면 마인드맵 형식의 지도서.

지도서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은, 한번 발간된

지도서를 학기말에 수거한 후 다음 학년도에 다시 나누어 주는 철저한 재활용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바뀐 내용도 교사가 받아 보는 지도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가진 교과서와는 다른 내용의 지도서를 가지게 된다. 사회과와 같은 경우, 해마다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데, 지도서는 그대로 재활용을 강요하고(물론 새로 지도서를 만들어내지만 학교 현장에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있다는 데에서 지도서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학교 사정에 익숙하게 된 다음에는 교육과정 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책은 우리와 너무나 요원했다. 우선 책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이곳저곳을 헤매야 했고(그 당시 내가 있던 학교에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한질, 그것도 교장실에 있었다.), 어렵게 구한 교육과정 해설서도 원론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만을 진열장의 유리구두처럼 나열하고 있었다.

지도서나 교육과정 책을 멀리한 것이 교사만의 책임인가?

다행히 7차 교육과정 해설서는 교사를 위한 자세한 지침과 구체적인 지도 방안, 실제 교실 상황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들이 실린다고 하니, 이제 교사들이 자비를 털어 새교실이나 교육자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 본다. 또한 교사들 한명 한명이 교육과정 책을 곁에 둘 수 있는, 교육과정 책의 충분한 공급을 기대해 본다.

◆ **두 팔을 오해에 대하여** 요즘 학교에선 열린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등등으로 분주하다. 선

생님들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으로 젊은 여교사의 당당한 반박에 부딪혔던 그 교수님은 '자신도 예전에 초등학교에 있었다'는 경력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랬다. 적어도 예전에는 학교 현장에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 시절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 놀랐다. 따라서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도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던 것들을 대부분 그대로 답습했다. 아이들이 가고 나면 조용히 나만의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에 내리는 빗물을 따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끔은 소설책에 빠져 종례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아쉬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초등학교'는 이미 예전의 '국민학교' 교사들이 누리던 영화를 잊은 지 오래되었다. 열린교육으로 소요되는 일손은 퇴근시간을 무색하게 했고, 종례시간이 끝나도 다시 교실로 올라가는 교사가 눈에 띄는 일은 보통 있는 일이 되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이미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다 보면 교과서에 있는 자세한 내용이 걸림돌이 될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원성을 받을 소지(왜 교과서에 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나요?)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변화에 저항하는 교과서 속의 지식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그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재가 주위에 널려 있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가 관심있어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정지된 지식이 아닌, 때와 장소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나 아동에게 많은 가치를 주게 된다.

이러한 때에 교사에 대한 그런 원시적인 비판이란…….

또한, 이러한 흐름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교사에 대한 학교 당국의 완전한 신뢰가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차시의 융통적 운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40분 단위의 획일적인 차시를 강요함으로써 시간 구분에 의한 방해할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블록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80분 단위, 120분 단위의 시간 운영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블록마저도 또 다른 획일적인 단위시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교육내용이 획일적으로 같은 단위시간에 시작되고 끝나게 되어야 함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의 나태한 시간 운영을 방지하려는 교육 운영자의 근심스런 발상에 근거한 것일테고…….

4월 5일에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4월 6일에는 9시부터 3시 50분까지, 4월 7일에는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왜냐하면 이 날은 봄철의 별자리 관찰하는 날이기 때문)

이렇게 재구성된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하루 하루의 시간표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내어 줄 수 있는,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권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과분한 일일까?

◆ **세 번째 오해에 대하여** 2년제 교대를 졸업하고 학교에 발령받고 나서, 다시 4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주경야독하던 시절이 있었다. 퇴근하기 바쁘게 가방을 챙겨 야간대학에 가고, 별을 바라보며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열심히 졸다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지나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면 이미 마지막 버스도 끊어진 후라서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가곤 했다.

시험 때면 아이들 문제 푸는 틈을 타서 교탁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가끔씩 '내가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으니 탄짓하지 말아라'는 눈길을 보내며 열심히 단어를 암기하기도 했지만, 용케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관짓을 눈치채고 자기들의 탄짓을 즐기곤 했다. 그럴 때면 가슴을 때리는 미안스러움. 내가 아

이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나의 그런 전과(?)는 교장 선생님의 그런 염려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다. 현재 교사들이 하는 연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이들이 혼자서 하던 고독한 작업이 교사의 눈에 들어 교사의 칭찬을 받았을 때 기쁨을 느끼듯이, 교사들의 고독한 작업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려는 교사들의 의욕도 높이 사야 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교실의 아이들을 외면할 것이라는 근심은 그 교장 선생님의 야간 대학 시절의 경험에서 파생된 것임을 도리어 의심해 보게 된다.

◆ **네절재 오해에 대하여** 컴퓨터라면 '아래아 한글' 밖에 다루지 못하던 내가 '컴퓨터 선생님'이 된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컴퓨터를 두려워하던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자그마한 여선생을 보면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넘겨짚은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컴퓨터 쪽으로 몰아부치면서 이제는 정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이야기도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었다. 컴퓨터의 맹렬한 보급으로 모든 교사들이 컴퓨터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가끔씩 다른 교사들이 물어오는 내용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일 때 나의 제자리 걸음에 통탄하기도 했다. 교단 선진화가 교사들의 컴퓨터 능력에 앞서 진행된 감은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단 선진화에 맞추어 또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멀티미디어 교실은 순서를 기다리는 학급에 의해서 언제나 만원이고, 컴퓨터 회사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A/S를 하러 오면서도 군소리가 없다. 열심히 돌아가다 보면 컴퓨터의 수명이 단축되고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해야 한다는 상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미

단골이 되어버린 A/S 사원이 고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멀티미디어 교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또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개발되었는가? 통신망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많은 학습자료들은 멀티미디어실을 찾는 아이들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장이 날까봐, 통신비가 많이 들어갈까봐 컴퓨터실을 꼭 잠가두던 옛날 이야기(한두 해 전이 컴퓨터 쪽에서는 이미 옛날이다.)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학교의 컴퓨터실이 잠자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면.

◆ **믿어 주세요**

물론 나의 좁은 소견에서 나온 생각이 모든 학교 현장의 실재인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해설서는 원래 모든 교사가 한편씩 가지도록 되어 있다던가, 혹은 지도서도 매년 새로 구입하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가 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적인 관여를 할 기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좁은 소견이 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 당국의 배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꼬트머리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던 한 작은 교사의 눈에 비친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비난의 여지를 가지고 읽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임에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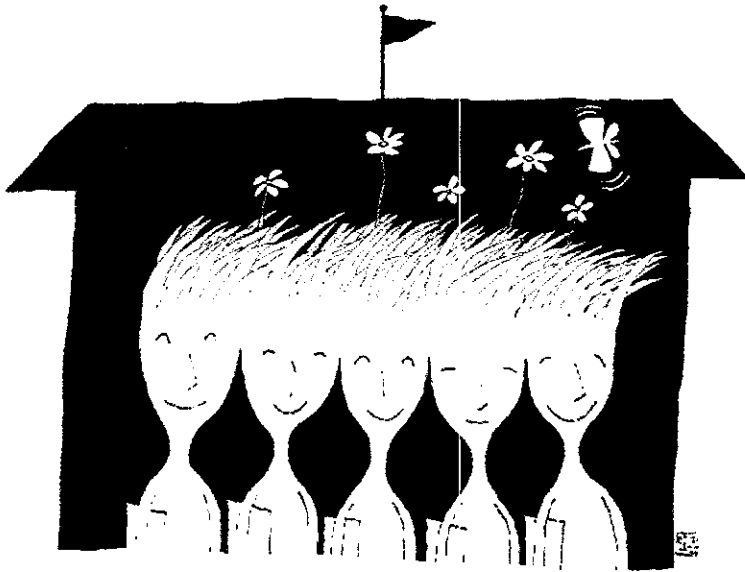
이 글의 발표 자리가 '발언대'라는 점에서 감히 용기를 내어 작은 소리를 내어 본다는 점을 어여뻐 여기시고, 이 글에 대한 비판을 열린마음으로 받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치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우리 교사들, 그래도 한번만 믿어 주세요!"



새 학교 문화 창조

우리의 학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 |
|-----------------------------------|----|
| ●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의미/고원영 | 26 |
| ● 학생이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정창현 | 30 |
| ● 우리의 학교, 무엇을 해야 하나?/서길원 | 35 |
| ● 학교가 아이들의 힘을 믿어 주는 공동체였으면 한다/김정금 | 39 |
| ● 학교 문화, 이렇게 바꾸자!/이세일 | 43 |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의미

고 원 영

1.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서,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 국가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에 힘을 쏟는 이유도 다 여기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미래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대입무시험전형제를 도입·확대하여 현재의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독자적으로 다양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추세인 바,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설 자리를 잃었던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 학교 문화 창조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과 졸업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 장학관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신세대 소비문화 어디까지 와 있다」, 「진로교육과 상담」 외

2 '새 학교 문화 창조'의 개념

‘새 학교 문화 창조’란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달리 정의할 수 있겠으나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제까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여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온 입시위주·교사중심의 수업 관행을 개선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기초 학력이 충실해지고,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키우며,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새 학교 문화 창조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의 내실화에
전 교육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고, 위로부터 지시되는 개혁이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협조하는 아래로부터의
현장개혁을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 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학교 안팎에서 일상화되도록 노력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학교 문화 창조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짧은 기간 안에 치유하여 체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 시민·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자아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 교육과 인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는 일상의 교육실천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실천이 지속되어 대입무시협전형제가 실시되는 2002학년도에는 ① 교사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을 실천하는 학교교육으로, ②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학교교육으로, ③ 교과서와 학교 울타리에 얽매인 교육에서 현장체험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으로, ④ 평균인을 양성하는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계발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학교교육으로, ⑤ 지시위주의 학교풍토에서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학교풍토로, ⑥ 지식위주 교육에서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의 극대화를 보장하는 학교교육으로, ⑦ 행정업무보다는 교사의 교과연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학교 조직·운영으로, ⑧ 관행 및 타성과 구성원 간의 상호 불신의 학교풍토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학교풍토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 학교 문화 창조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의 내실화에 전 교육력을 집중해

야 될 것이고, 위로부터 지시되는 개혁이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협조하는 아래로부터의 현장개혁을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학교현장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계획·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1999학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가시적이고 바람직한 현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평가, 단위학교의 자체 평가 등과 연계하여 책무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추진 과제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추진 과제를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① 모든 학교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②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변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과제, ③ 1999학년도에 추진해야 할 과제와 ④ 2000학년도 이후에 추진해야 할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 토론 문화의 정착

교원·학생·학부모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학교 문화를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스스로 제정하고 준수하며, 학교 공

동체의 공동 관심 사항을 교원·학생·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협의함으로써 구성된 모두가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집단사고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학생 자치활동을 내실화시켜 학생 스스로 생활규범을 제정·준수하게 하는 등 학칙이 준수되는 학생 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교수-학습 과정의 개별화 실현

소질·적성·능력 등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해 주며, 독서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며 이와 같은 활동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학교생활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다양한 체험 학습 수행

현실로부터 유리된 이론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의 일터를 학습장으로 이용, 직접 체험하고 봉사하며, 나아가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건전한 학생 축제 문화를 창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 교과별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화하며, 학생 축제 문화를 창달해야 할 것이다.

라.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2000년 이후 확대·시행될 무시험전형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평가를 통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

하며,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무시험전형 대상자 추천 기준·절차·방법을 상세화하여 추천 기준·절차·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생·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추천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 무시험전형 추천의 투명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제고

침체된 교단 분위기를 교원 스스로 개혁하여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전문적 소양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해 나가는 한편, 책무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습교사제도 도입, 계약제 임용방식 확대, 업무량 및 업무성치가 반영된 차등보수제 등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다. 교원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해 주고 연수방법도 개선해야 되며, 특히 교원의 교수활동을 강화하여 교과별, 단원별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 이외에 책임 지도하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이다.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과연구 공모제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수업 우수교사에 대한 유인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바.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학교경영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합법성을 제고하고, 교육청별로 학운위 위원 연수를 강화하여 소풍·수학여행·수련활동·학교급식 등의 효율적 운영, 학교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과후 및 방학중 교육활동 활성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보장 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인사들에게 학

교방문(school tour)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된 학교모습을 보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향상과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케 하는 등 지역사회 인사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4.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추진 전략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함에는 학교 현장에서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추진 과제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함을 감안,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와 대안 탐색 및 정보 공유,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적 추진 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가. 교원 연수, 학부모 교육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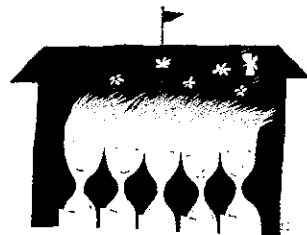
단위학교의 교장·교감·교사,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등에 대한 집중 연수, 학부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학교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비롯한 대안 탐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교과연구 공모에 합격한 교사 10,000여 명, '9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16,000여 명은 핵심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98학년도 겨울 방학중 원격 화상 연수 등 집중 연수를 위한 강사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98학년도 중3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위원 등에 대한 학부모 교실, 학생-학부모 안내서(student-parent handbook) 보급 등에도 노력할 것이며, 학부모의 의식 변화를 위하여 지역 학부모 단체 주관으로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론 선도층(opinion leader)을 통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기획기사, 특집좌담, 칼럼 등으로 새 학교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교육부 지원 계획

첫째,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이다. 과목별·교사별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지역사회 내의 현장 체험교육장 발굴·활용, 교과교실 수업 및 전교사의 학급담임제 등 9개 주제에 대한 시범학교를 공모하여 18개교를 선정,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간 3억 6천만원씩 2년간 지원할 것이다.

둘째, 정책연구 의뢰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보완, 학생 토론문화 활성화 방안,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급·교과담임 배정 등 9개 과제를 공모하여 정책연구를 의뢰하고 이를 위하여 1억 3천 5백만원의 지원을 할 것이다.

셋째, 새 학교 문화 창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교과연구 활동계획 공모, 교과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학교교육 계획서 공모 등에 1,3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것이다. 



학생이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

정창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및 대학원 졸업(이학 박사)
 · 경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역임
 · 중동고등학교 교장
 · 「대학 공통수학」, 「일본의 교원양성대학」 외

교육개혁, 새 학교 문화 창조, 학생폭력 근절,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 등中等교육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국민 모두의 큰 관심사이다.

나는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언제쯤이면 이런 것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부질없는 시지푸스의 행동이 아닌가? 어쩌면 이 자체가 곧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좋은 학교란 학생과 교직원이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 학교다. 이와 같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해답은 없는가? 해답은 있는데도 본질적으로 실천이 불가능한 것인가?

학생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스스로 남아 안심하고 신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과 쾌적한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인자하신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지도, 선한 우정을 나누는 학우들끼리의 즐거운 어우러짐,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의 즐겁고 유익한 학습활동 등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잔칫상을 차려 놓으면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로 모여들 것이고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거의 부정적이다. 제도나 시설·환경이야 학교의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학부모의 요구야 무리에 가깝지만, 왜 학교가 학생들의 사랑을 못 받고 학부모에게 불신과 불안감을 주는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일부이겠지만 왜 선생이 제자에게 적이 되고 교장은 적장으로 보이는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그리워져야 할 학교 교정이, 교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남

아야 하는지 그 까닭을 우리는 다 함께 진솔하게 밝히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21세기를 향해 온 세계의 젊은이가 달려가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젊은이를 길러 내야 할 우리의 학교는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1. 교육여건을 짚 맞추자

가. 제도부터 합리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공통된 목표 중 하나가 내 자식 모두가 일류대학(그것도 S대학)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 국민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은 이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뭉치도록 만든 사회의 분위기가 위정자의 지도력에 감탄(?)할 뿐이다.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데 필수적인 정의감, 책임감 등 인성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국제화·정보화에 필요한 창의성과 특기가 무슨 큰 도움이 되는가? 현재까지는 명문대학을 가야 출세도, 권세도, 축재도 다 보장되어 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가 또 어디 있는가?

현재의 입시제도에 관한 한 우리 나라 학부모는 매우 현명하다. 그래서 '고액과외'다, '촌지', '사설 학원'이다, '해외유학'이다 하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가 아무 소용 없다고 역설하는 학교는 궁극적으로 학생을 속인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학부모는 학교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대학입시에 관한 한 초·중등 학교는 대학의 시너 노릇만 해 왔고 대학은 기득권을 갖고 안주하며 태평성세를 구가하고 있다. 인기에 집착한 조령모개식 입시제도나 졸속행정에 소홀하던지 불평하면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자인 선생들이 불평만 한다고 아우성이다.

학습자 수준에 알맞아야 할 교육과정은 이해 당사자인 전문 집단끼리의 땅 파먹기에 희생되고 교평준화는 평등선거 원리에 따라 미화되며 고수되고 있다.

교사에 관한 양성제도, 임용제도, 연수제도, 평가제도, 직급제도 등 개선할 곳이 너무 많다. 그러나 누가 감히 집도를 할 것인가? 쥐 신분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가 있는가?

아무 힘 없는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것도 많다. 그런가 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다른 재미를 보는 집단도 많이 있다.

나. 시설·환경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수가 너무 많은 학교가 있다. 학급 학생수도 너무 많다. 학교 건물의 층수가 너무 높다.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가 너무 많다. 이것들은 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발한 꾀의 산물이다. 20~30년 이후에나 나타나는 교육의 성과를 단기 투자의 성과로 승부하려는 집권자의 속성만을 탓할 수 있을까? 투표를 잘못된 우리 국민의 자업자득이다.

책·결상이 너무 낡고 비좁다. 마음놓고 마실 물도 없다.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멀다. 학생을 위한 위락시설, 편의시설이 학교 안에 얼마나 있는가? 시춘기 청소년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유해환경이 학교 주변으로 점점 바싹바싹 다가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물리칠 방법이나 권한을 학교는 과연 알 수 있을까?

2 교사는 자부심을 갖자

가. 전문적인 실력부터 갖추자.

건국 이후 우리 교육이 첫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는 다학졸업자가 거의 대부분인 학교가 정부 어느 산하 기관이나 일반 회사보다도 최고의 지식집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다른 직장의 종사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 왔는데 비해 교사들은 처음 배운 대학 학력을 몇십 년 동안 재탕, 삼탕으로 우려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

**학교장은 높이 존경받을 만한 고매한 인격을 갖춘은 물론
 풍부한 교육경력과 전문이론,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 때만이 당당한 학교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뿐이다.**

르겠다. 혹시 배우는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식한 학부형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안주해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교직에 임용된 후 교수-학습, 상담,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교육관련 서적 등은 과연 몇 권이나 읽었는가? 교육부나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와 지도서, 출판사가 주는 부교재, 참고서, 시험지 빼고, 내 돈 주고 구입한 전공서적이거나 교육자료는 얼마나 있는가? 심화과정을 위한 연수, 대학원 진학, 해외시찰, 선진학교 탐방, 학회, 세미나, 토론회, 각종 경진대회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초임교사 시절에 가졌던 의욕은 어디로 갔는가? 무엇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는가? 교사경력과 자기계발을 위한 충전시간량은 반비례하는 것인가?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싶다.

나. 정열과 책임감부터 필요하다.

학생을 사랑해야 한다. 내 자식 만큼은 못 해도 매우 사랑해야 한다. 함께 놀아 주고, 고민도 들어 보며, 시험지 틀린 곳을 하나씩 지적해 주며 때로는 따로 불러 추수지도는 했는지, 잘못을 호되게 꾸짖고 당당하게 회초리를 들어 보았는지, 내가 담임하고 있는 학급, 학과, 클럽활동반의 학생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가? 학생지도는 담임이나 학생생활부 담당교사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피하며, 비담임과 편한 업무만을 찾아 고집한 적은 없었는가?

과목교사가 마치 남의 일인 양 “.....실력이 부족하니 학원에나 보내 보시지요.” 하면서 학부모에게 권한 적은 없었는가?

학교를 단지 자신의 밥벌이 수단을 위한 직장으

로, 학생을 단지 화풀이 대상인 소모품으로 생각해 오지는 않았는가?

정열과 책임으로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싶다.

다. 간섭부터 줄여야 한다.

교사에게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각종 행정 규제와 지시에 따른 잡무, 교육부, 교육청, 국회의원, 교육위원들이 주문하는 각종 공문서 처리(학교에 정식 접수된 외부 공문서만 10월 10일 현재 2703건)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재연구와 학습자료 준비, 상담은 언제 하는가?

학교장과 교감의 무리한 다툼과 학부모의 이기적인 요구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언제쯤 벗어날 것인가?

라. 근무 여건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신문에 톱 기사로 실리지만 않았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교무실 책상을 보라. 의자를 보라. 그 흔해 빠진 전화기 대수를 세어 보라. 정보화 교육만 해도 그렇다. 교단선진화라면서 컴퓨터만 주면 다 되는 줄 아나 보다. 이를 위한 각종 연수,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시설 및 비용 등 최소한의 선결조치가 따라야 한다.

마. 의식개혁부터 하자.

교사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생 앞에서는 항상 왕이고 회장이고 장군보다 더 큰 존재이다. 이것이 교직의 특수성이다.

그런데 왜 교포(교장·감 포기 교사)가 되면서 사

랑과 열정이 확 작아지고 자학과 체념을 하는가?
 사회는 교사의 권위를 헤치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사에게는 권위나 복지 그리고 사회의 인식에 대한 비전이 없다.

산업과 경제가 호황일 때에도 교사는 박봉에 시달리면서 본연의 임무만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 당시는 교사의 인기가 형편 없는 대접을 받았다.

이제 불황이 되니 마치 교사만이 '무사안일' 속에서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양 '구조조정'이다, '봉급삭감'이다, '정년단축'이다 하는 눈총 속에 신분까지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의 교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인데도 말이다.

일반 사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때로는 묵인(?)되고 있는 뇌물, 고문, 청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고 극히 일부분인 비리인데도, 마치 전국의 모든 교사가 항상 하는 양 '촌지를 받았느니',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느니', '불법과의 및 알선에 연루되었느니' 하면서 '교사가 이럴 수 있느냐?'며, 큰 사건인 양 다루어 교사의 권위를 한껏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옳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효를 중시하는 전통의 미풍양속과 사랑의 매, 학력신장을 위한 지도 조언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교육활동의 한 부분이 아닌가?

후생·복지, 시설, 제도의 개선도 없고 교육의 특수성도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사회의 편견에 한숨 실 뿐이다.

교육자와 사회 모두가 기존 사고의 틀을 과감히 깨뜨릴 때가 왔다.

3. 교장은 당당함을 보이자

교장이 되고 나서 사회에 대해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 이유는,

**** 학생 사건 일어난다!**
 ○월 ○일 밤 ○○교(교장○○○, ○○세)에 다니는

학생이 ○○동에 있는 가게에 혼자 들어가……
 이하 생략…

이 신문기사에 왜 교장의 이름이 끼어 있어야 하는지, 그것도 나이까지 끼워서 말이다.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꼭 쓰고 싶으면 ○○지역(시장 또는 구청장, 아니면 아버지 자세히 어머니까지)으로 쓰면 어떨지…….

교장이 교장에게 '어떻게 하자!'라는 재언을 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다음 글로 대체한다.

학교장은 높이 존경받을 만한 고매한 인격을 갖춘은 물론 풍부한 교육경력과 전문이론,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 때만이 당당한 학교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뿐이다.

당당한 학교장이 되기 위한 10계명

1.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을 호소하라.
 : 미래를 보는 통찰력으로 철학이 있는 명확한 교육비전을 세우고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라. 그래야 믿고 따를 것이다.
2. 학교운영은 민주적으로 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라.
 : 학교에 인연을 맺고 있는 관계자는 학교 일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고 학교장은 알릴 의무가 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라.
3. 교직원을 대국적으로 평가하라.
 : 작고 우연한 사건이나 통제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당사자는 매우 억울해하며 원망하고 있다.
4. 학생들과 어울리기를 즐겨라.
 : 학생들을 편애하지 말고 학생들의 등을 자주 두드려 주어라.
5. 학부모의 신분이나 지위에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라.

: 학교에서의 관심 대상은 오직 학생일 뿐이다. 학생의 인격은 능력에 따른 다양성이 있을 뿐이지 모두 동등하다. 학부모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6. 전문지식과 이론으로 권위를 세워라.
: 전공, 취미, 특기 등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교직원을 압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7. 무조건 이루어 놓아라.
: 학교경영에 주위를 너무 의식하지 말라. 결정과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많이 알고 말만 앞선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세월이 너무 빠르다.
8. 작은 일에 충실하라.
: 매사에 솔선수범하라.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직접 챙겨라.
9. 마냥 베풀어라.
: 잘한 것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보상하라. 사적인 일로 신세지지 말라.
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10.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내라.
: 정보화 시대의 학교경영은 용의주도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을 위해서는 가혹하리 만치 채근하라.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위한 투자는 서두를수록 좋다. 그러나 급격하고 잘 연구되지 않은 제도의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효과를 너무 성급히 얻으려 하지 말라. 교육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일이고 또 오래 걸린다. 1~2년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교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오늘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은 뭐니뭐니해도 학부모의 교육열과 교사들의 노력이었다.

부단한 연수로 21세기형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무리한 요구와 간섭에 불굴하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끄러움 없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선생이나 해 볼까' 하는 그런 '이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처우가 부족해도, 환경이 열악하여 힘이 들어도 열성으로 정직하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안주하는 것은 후세에 대해 씻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이다.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

누구보다 먼저 당당한 교장으로서 교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4락(四樂)이 있다

첫째는 사람을 기르는 즐거움이고, 둘째는 젊음과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이다. 셋째는 전문분야에 심취할 수 있는 즐거움이고, 마지막으로는 방학이 있다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보람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 어디에 또 있는가?

학생, 교사 모두가 오래 머물수 있는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자. 

* 당당한 교사가 되기 위한 10계명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사자인 교사 여러분의 고견을 직접 보내 주십시오.
중동고등학교 정 창 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8. (우)135-230
전화 : (02)3411-0151 FAX: (02)3411-0154
E-mail : heonybee@unitel.co.kr
foryes@chungdong.or.kr

우리의 학교, 무엇을 해야 하나?

서 길 원



· 전주교육대학교 졸업
· 성남 금상초등학교 교사, 연구부장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고 그 동안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육개혁안이 쉼없이 발표됐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종 기구를 만들며 개혁안을 제시해 왔으나 정치·경제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교육개혁은 현장 교육 경력이 없는 관료들과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교육 활동 중심의 교무행정제도나 인사·승진제도 같은 제도개혁은, 기득권과 이해 관계가 얽혀 회피되고 교사들의 수동성, 자부심 부족, 무사 안일 등 피동적 의식 태도를 바람직한 학교 발전의 장애 원인으로, 교육개혁을 의식개혁 운동으로 왜곡시키고 현장의 교사는 늘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듯 수차례 걸쳐 이루어진 교육개혁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합의 없이 위로부터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교직사회에 심한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정작 청산되어야 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관료주의는 비대해져 지시와 실적보고는 늘어나고, 교육주체 참여의 기회는 막혀 교사는 학원 강사나 다를 바 없는 기능인으로 전락하면서 학교 현장은 희망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 교사와 교사 사이에 신뢰와 희망이 사라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식의 이기적 생존주의가 팽배하며 학교 문화는 황폐화하기에 이르렀다.

획일적이며 통제적인 교육내용, 개인차를 무시한 교과서 중심의 권위적 수업 방법, 관료화된 교육행정 조직 등 수많은 비인간화된

학교 구조 문제 속에 공교육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학교 현장 개혁의 선결 과제는 무엇일까?

학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달라진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를 내세운 각종 교원 정책과 평가제도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지 않고서는 외국의 선진 모델이나 이론,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정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이미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의 교육개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장의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바로 학교개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발적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타율과 강요가 지배하는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구조와 제도의 개혁은 바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핵심이다.

1. 교육활동 중심의 현장 조직 개편

학교 현장에서 지배적인 의사 소통 방식은 상명하달 그 자체이다. '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한다'는 지난 교육법이 말해 주듯이 비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가 제도로서 보장되어 왔다. 학교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의 작성, 교육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의 어느 곳에도 다수의 교사가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는 갖고 있지 못하고 상부관청의 지시 사항과 학교장의 의지가 우선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활동은 출발부터가 교사의 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교무회의, 조희, 종례, 주임회의, 동학년회의 등 각종 교직원회의 구조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협의하고 토론하며, 참여를 이끌기보다는 교사들의 변화의 목소리를 통

제하고 규제하는 통로가 되어 수동적이며 비참여적인 교직 풍토를 만들었다.

자발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직원회의(교원 전체회의)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교사의 민주적 의사 결정력과 자발적 참여를 높여야 한다. 임의 기구인 교직원회의를 학교 자치 기구로 법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여 교육계획, 학교예산, 학교행사, 학교운영 안전 등 주요 학교 업무의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교사가 참여토록 해야한다. 각종 회의는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와 주요한 교육활동을 심의할 수 있는 협의회로 분화하고 소위원회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 부서 편제는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부서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교무, 연구, 윤리, 환경, 과학, 체육부 등 행정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잡무를 제거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년·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 운영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장 및 교감, 보직제 등 인사 승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점수에 근거한 승진서열에 의한 학교장 임명제도를 폐지하고 수석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보직토록 하는 보직제나, 학교 지원 행정적 업무를 주요 역할로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회의를 활성화하고 심의토록 해야 한다.

2.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떠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수차례에 걸쳐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이론과 사

**현장의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바로 학교개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발적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타율과 강요가 지배하는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구조와 제도의 개혁은
바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핵심이다.**

회·정치적 이유를 들며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지만 단 한 번도 학교 현장에 교사의 요구가 교육과정 개정에 충실히 반영된 적이 없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없어지곤 했다.

교과 구성 및 운영체계는 물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내용, 나아가 수업 방법까지 확일적으로 국가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니 교과서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각 학교나 학급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더 적합한 자료를 가지고 열린 수업을 하고 창의성 수업 활동을 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방식의 통제는 50여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으며, 교사는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교사는 이제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교사가 무능하고 나태하다고 하는 것은 교사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사회가 교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세계 여러 나라 교육개혁 사례들을 들며 교사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교육과정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의 변화가 가장 늦게 이루어지며 이에 의해 종래 학교 구조의 변혁을 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행의 교육과정은 가르치고 배우는 당사자인 학교 현장의 주체들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일차적으로 반영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교사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최소적 학습내

용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체제에서 제시된 학습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수행위의 가장 중심인 교과내용의 선정 및 이수 선택의 자율성이 교사에게 보장되어지고 교사 개개인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수 방법을 연구하는 등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계발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 지역적 특수성, 자원인사, 학부모의 요구, 교사 구성원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 제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무능하고 나태하여 자기 발전을 위한 연찬을 게을리해 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 국가는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교사를 교수기법의 전문 기능인으로 육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교수법을 전달하고 그 기법에 의해서 수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새교육 운동이, 70년대 프로그램 수업이, 80년대 탐구 수업이 학교에 유행처럼 번져 갔지만 학교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열린교육 또한 유행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각종 승진을 위한 점수의 대가가 주어지는 연구 보고서나 연구시범 학교를 통해 새로운 교수기법과 교육정책은 더욱 세련되게 포장되어 선전의 도구가 되었으며, 나아가 책상 위에서 쓰여지는 배껴 쓰기, 짜집기식 연구 보고서, 환경구성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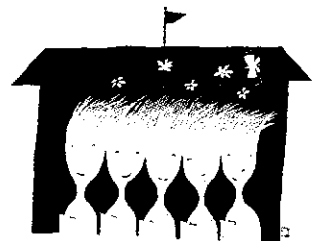
물을 쌓아 전시하기에 급급한 전시적 보고회 등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왜곡함으로써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자랄 수 없는 풍토를 만들었다.

특히 초등 교사의 경우 그간의 연수제도를 살펴 보면 전문성 신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본교에 근무하는 초등 교사의 일반연수 결과에 따른 연수학점을 조사해 본 결과 시대별, 정치적 요구에 따른 70년대 정신교육, 80년대 과학실험교육, 90년대 컴퓨터, 영어회화 연수 등 기능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 20년 이상 교직 경력이 되도록 초등 기초 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국어, 수학 교과와 일반 연수를 단 한 시간도 이수치 않은 교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10개 교과에 특활지도, 주당 32시간에 6개 학년을 두루 교육해야 하는 초등 교사가 어떤 자격 연수와 교직 경력이 쌓인다 한들 지금 실정으로는 전 교과 전 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축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 지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초등 전공(국어, 수학)과 복수 전공(사회, 과학, 예능과 등), 심화 전공(독서, 무용, 연극 등)으로 자격을 세분하고 전공 교과와 복수 전공의 2~4교과를 지도토록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공자격과 연수 학점제를 연계하여 교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학교 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경쟁을 통한 교육 질 관리를 내세운 교원 정책과 각종 평가 제도 등을 앞세운 새로운 개혁 정책이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음을 과거 교육개혁의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교사를 통제의 대상에서 학교 현장 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지원이야말로 학교개혁의 시작이다. 권위적이

고 비민주적인 학교 조직과 제도를 개혁할 때 비로소 계속된 좌절 속에 숨죽이고 있던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혁의 주체적인 힘으로 모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비로소 학교와 교실은 희망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학교가 아이들의 힘을 믿어 주는 공동체였으면 한다

김 정 금



·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구지부장
· 「탈학교론 연구」, 「Kohlberg 도덕 교육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마음이 그리 편치 못할 때가 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도 그렇다. 교문 앞에는 선도가 지키고 서 있고 아이는 교문이 가까워 오면 연신 자기의 옷매무새를 만지고 머리를 가다듬었다. 아직도 학교는 내가 학교다닐 때 그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숙칭 ‘딱딱이 숙제’(시험지에 빼곡하게 적어서 공부한 흔적을 남겨가는 숙제)를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기 타율적인 방식이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랴 하는 마음이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러하겠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기분이 좋고 즐겁게 지내면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도 아이가 가끔 전하는 학교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어떤 아이는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에게 얼굴을 사정없이 맞았다고 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고괴담’이라는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고 자신들을 이해하려면 이 영화를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영화인가 해서 보러 갔다. 끔찍한 영화였다. 참담한 학교현장을 담고 있었다. 더욱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끔찍한 영화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학생관객에 의해서

**공동체 의식이란 학교 간의 운동경기 때 나타나는 식의
단순한 애교심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 아닌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바로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의 감을 길러 주는 곳이어야 한다.**

홍행에 대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반응이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학부모들이 학교에 얼마나 무심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내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남들이 다 보내니까', 혹은 '사회진출에 유리하니까' 하는 이유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좋아하는 책이나 실컷 보게 하고 부족한 과목은 가끔 괜찮은 학원에 가서 보충하게 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친구는 동네에서도, 학원에서도, 통신을 통해서도 사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 가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치면 될 것이다.

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때로는 마음을 졸이고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학부모들이 주위에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것은(남들이 다 보내니까 그냥 보내는 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 대해 아직도 기대와 희망이 남아 있어서이다. 나는 학교에서 학원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원이나 가정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본분이며 존재 이유라고 할

것이다. 지금의 학교 현실을 보면 어렵없는 기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학교가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과 우리의 관심으로 학교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소박한 의무감을 갖고 있다.

요즘들어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상당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비판에 안일하게 대응하던 방식(예컨대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 학교가 학원이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 학생들 공부 가르치느라고 인성교육할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으로는 학교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더 이상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나는 아이들의 교육은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리고 학교에 흐르고 있는 도덕적인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은 교육적인 학교의 분위기이며 도덕적인 학교의 정신이라고 본다.

나는 학교가 아이들의 힘과 능력과 가능성을 믿어 주는 곳이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의 힘을 믿어 주는 곳에서 아이들은 성장과 자유와 책임과 자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두발검사와 복장검사를 실시하며 불시에 아이들의 책가방을 뒤지고, 공부 안 하면 '딱딱이 숙제'를 시키고, 잘못하면 사정없이 때리는 식의 아이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학교의 분위기는 학교가 더 이상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음을 보여

줄 뿐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학생통제 방식은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인격형성에 유해하기까지 하다. 아이들을 믿어 주지 않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인격자로 자랄 것이고 도덕적으로 대함으로써 도덕적인 인간으로 자랄 것이다. 많이 맞고 자란 아이들이 남을 많이 때리는 폭력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성장의 힘을 믿어 주는 것은 때로는 불안한 일이기도 하다. 가끔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이들의 자발적인 힘을 믿어 주자는 말을 할라치면 금방 반대의견에 부딪히곤 할 때가 있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폭력적이며 과격한 아이들이 학교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학교가 아이들을 믿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통제일변도의 방식으로는 더더욱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아이들을 믿어 줌으로써 아이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진정한 교육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교사의 능력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러한 힘들고 벅찬 일을 앞으로의 학교가 감당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 하면 아이들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지 않고 아이들의 자발성을 믿어 주지 않고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진정한 공동체이기를 기대한다. 학교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집단주의나 공동생활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개개인이 존중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학습하고 개인과 개인을 싸고 있는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교이길 바란다. 학교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한다'는 학교의 분위기가 중

요할 것 같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개인적인 일로 돌리는 관점과 다른 것이다. 옆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는 식의 학교 분위기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기 힘들 것이다. 교사가, 말로는 "친구를 사랑해라"라고 가르치지만 학교의 분위기로, 잠재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친구는 너의 적이다"라고 가르치는 학교는 얼마나 유해한가?

공동체 의식이란 학교 간의 운동경기 때 나타나는 식의 단순한 애교심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 아닌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바로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의 감을 길러 주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도 하기 힘들고, 더구나 유명강사가 포진해 있는 일류학원에서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와 같은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이기보다는(이런 학교도 매우 좋은 학교임에 틀림없지만) 목자와 아흔아홉 마리의 양 모두가 함께 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그런 곳이었으면 더욱 좋겠다. 무단결석하는 아이를 찾기 위해 선생님과 친구들이 조를 짜서 거리를 헤매며 애를 태우는 그런 학교에 내 아이가 다녔으면 좋겠다. 요즘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남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나는 식의 아이들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다.

또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민주적이며 정의롭다는 자부심에서 온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옳으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부심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곳이어야 하며 정의로운 곳이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진정한 민주적인 기구로 역할하도록 활성화하여야 하고 학교에 각종 부조리와 촛

지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주위의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촌지를 주고 온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 당혹스러워질 때가 있다. 얼마를 넣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태도로 받더라든가, 아이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달라졌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촌지를 받는 교사를 아주 하찮게 보고 알보는 마음이 곳곳에서 풍겨난다. 나는 촌지를 받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촌지를 주고 난 후에 이렇게 자신들을 떨시하는 것을 알까 하는 생각을 한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선생님이 얼마를 받았는지 액수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학교를 이렇게까지 훼손시켜 놓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맑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곳이어야 한다. 그 속에서 인간 평등의 정신과 공동체의 감을 발달시켜 갈 것이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집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간에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집이 못살아서 반장이 될 수 없었다든가, 공부를 못해서 매일 선생님에게 맞았다든가 하는 학창시절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너만 없으면 우리 반 평균이 몇점 올라간다는 식의 폭언을 하는 교사가 아직도 학교에 있다고 들었다. 과거 기부금을 많이 낸 육성회장이 졸업식 때 자신의 자녀에게 육성회장상을 수여한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고 학부모회장의 딸이라고 학예회 때 특별히 독창을 시켜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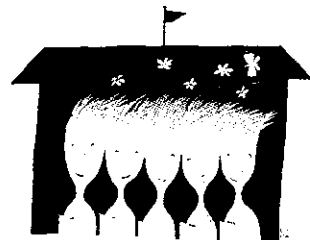
이러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간평등과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예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예전 학교 다닐 때 학기 초마다 하는 가정환경조사는 얼마나 비정하게 느껴졌던지…….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라

고 하고, 아버지가 대학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 손들라고 하는 식의 조사는 집안에 선풍기도 없고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이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였는지 모른다.

공동체 학교는 학교가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인간적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아이들이 그러한 학교에서 '우리는 함께라는 마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유명강사가 있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어서이다. 그리고 부모로서 이러한 학교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아 있어서이기도 하다. 



학교 문화, 이렇게 바꾸자!

이 세 일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우리 학교는 미래로의 진보를 위해서 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교육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미래를 맞는다면, 우리의 학교는 사회 뒤편으로 물러나야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일방 통행식 교육이었다. 자세히 말해서 교사가 가르치면 그것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교육방법이었다. 칠판 한가득 분필을 날려가며 필기를 해 주는 것이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이라 생각했고, 그런 교사를 학생들은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생각했었다. 또 교과서에 “여기서부터가 요점이다.”라며 줄을 그어 주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였다.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말을 듣고, 쓰는 것이 수업의 전부였고, 자신이 공부를 할 때에도 필기가 되어 있지 않고,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부분은 공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학생 스스로가 찾아 배우는 것이 가장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이런 교육방법이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교육은 학생들과 교사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창조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지금의 사회가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도 이런 교육의 방향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암기 위주의 학과교육에서 벗어나 창조력과 사회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학생과 교사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서 학교 문화의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

또 학교 당국도 일선 교사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교사의 학교 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

학생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는 조금 더 유연해지고, 학생과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화 상대는 자신의 친구이거나 같은 나이대의 학생이 대부분이다. 교사와의 대화는 학생을 벌할 때나 상담을 할 때 이외에는 거의 없다. 수업시간 중의 가벼운 인사치레 정도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는 또래집단 이외에 자신과 다른 세대의 집단과 직접적인 반응이 오가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교에서는 학생을 하나의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주체로서 학생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고, 의무에 대해 교사와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학생회의 권한 강화이다.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의 학생회의 지위는 구색을 맞추는 데 급급할 지경이었다. 행정적인 권한은 물론 그 어떤 감시 활동에 대한 권리도 없었다. 또 만약 학생회의 지도부와 담당교사와의 갈등이라도 생긴다면 학생회라는 형식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었다. 갈등이 없다하더라도 학생회의에서 참가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이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학생시절부터 자율과 자치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불유쾌한 경험을 가진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학교는 학생회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의의 기록을 남겨 공개한다거나 회의 후에 학생대표와 교장과의 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이다. 그런 시기에 경험하는 학교라는 사회는 마치 군대처럼 상명하복을 강요하고,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욕을 하며, 심지어 구타를 하기도 한다. 그런 일을 당해도 학생은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다. 학생들끼리 모여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 고작이다. 더욱이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분의 차이와

교사의 학생 평가라는 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다. 내 친구 중에는 “너 죽어버려.”라는 말까지 들은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아 한동안 고생을 했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것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것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부모님을 대하듯이 스승을 존경해 왔다. 그것은 물론 현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스승은 교사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제자가 스승과 함께 살며 말과 사상 그리고 행동까지 그대로 본받는 것이 교육이었지만 지금의 교사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지식을 분업화하여 자신이 맡은 부분만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학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던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 그리고 초월적인 권리를 원하고 있다. 어떤 교사는 자신을 거스르는 학생에게 욕설과 구타로 굴복시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일반화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종종 “너희들은 그렇게 맞아야 되냐? 안 때리니까 안되겠네. 좀 안 때리게 해봐라.”라는 말을 한다.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정당한 명분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인을 양성하는 기관인 학교에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명분을 만들어내어 학생에게 모든 책임을 넘긴다. 이런 현실이 학생과 교사를 대립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 대답하는 자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교사가 학생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처벌을 가하며 학생을 감싸안지 못하는 행동은 스스로의 수준이 학생과 같다는 말을 의미한다. 이렇기에 이미 학생에게 있어서 교사란 지식의 전달자라는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의 몰락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요인보다도 교

**아쉽게도 우리 나라의 학생들도
너무 교사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학생 내에서의 자발적인 모임이나 단체 행동들이
거의 전무한 것이 그 증거이다.**

사를 존경하는 것을 의문시하게 만든 현재의 교사들의 모습 탓이 아닐까 싶다. 교사를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도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교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교사의 역할은 사회구성원이 될 사람들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보다 쉽게 전하고 예비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지, 학생 위에 군림하며 경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또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조력은 보통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먼저 마음이 편해져야지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무실 문화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 교무실에 들어갈 때에는 조용하고 조심스레 들어가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 이유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교무실은 잘못을 해서 불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피해 교무실로 가거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들이는 것도 학생이 교무실을 방문할 때 경직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교무실이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에 말했듯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학생과 교사는 자주 만나야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교무실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다. 비록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크게 불안해한다. 교무실이 학생에게 두려운 장소가 아닌,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보다 편안한 학창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학생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우리 나라의 학생들도 너무 교사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학생 내에서의 자발적인 모임이나 단체 행동들이 거의 전무한 것이 그 증거이다. 우리 학생들은 교육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의 주체는 자신이라는 생각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발적인 행동이 모여서 창조력을 만들어 준다. 학교는 학교 안에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비록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도와 주고,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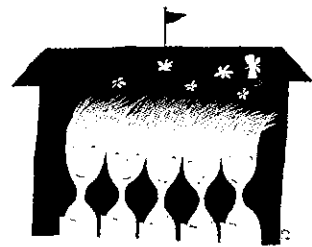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중요한 것으로 일선 교사의 재량권을 늘려 주는 것이다. 몇몇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야의 수업이라든가 책상을 없앤 공간에 학생들을 둥글게 앉히고 그 가운데서 수업하는 것 등은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일 정도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힘있게 학교 상부 조직까지 보내지 않고도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가 원하는 수업, 현장 수업이라든가 열린 교육은 교사의 재량권 확대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뜻이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다가 학교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그만두어야 했던 것들이라도 좀 줄어든다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교사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벌어지는

교사에 대한 불신과 학교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교육은 바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법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형식에만 얽매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결코 진보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교 조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존재이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빼그덕거리면 학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20년 전과 똑같은 교육방법과 교재를 이용하면서도 열린 사고를 갖추고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학교 문화 그 자체를 바꿔야 할 일인데도 학생에게만 해결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는 아직까지도 상급 교육기관에의 진학을 목표로 삼고, 이탈자를 낙오자라 하면서 소외시키고 경시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 문화는 이런 풍조에서 만들어졌다. 학생들을 교사나 학교 중심으로 편하게만 다루려는 그러한 문화에 지친 아이들은 불행히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 50여 명이 넘는 학생을 일일이 상대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보다 50명 중의 한 명으로만 기억될 뿐인 나머지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그들은 그들에게 쓸모 없는 죽은 지식을 배우느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생활을 위한 산 교육을 놓치게 되었다. 어떤 아이들은 경직된 학교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그들의 가족마저도 저버리고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직 학교는 그들을 위한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돌아오면 잡아줄 밧줄을 준비해 두었을 뿐이다.

우리는 생각을 새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엘리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원하는 엘리트는 창조적이며 다양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에서는 단지 많이 보고, 많이 외우면 되는 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그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단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버리는 학교에서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엘리트가 나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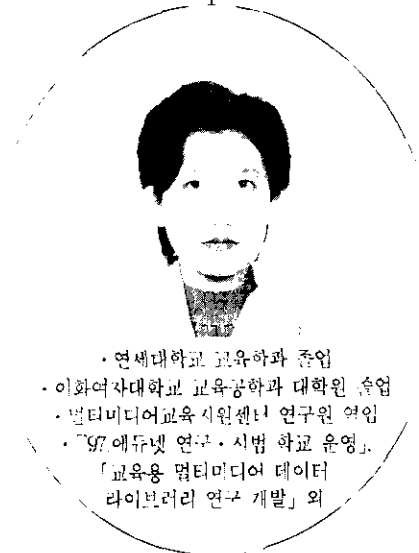
없다. 이제부터라도 학교는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또 학교의 평가 기준도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률이 아닌 학생의 교육 만족도 같은 새로운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학교 문화를 새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나는 이런 변화가 우리 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 연구동향

글 ● 서희전

—에듀넷¹⁾ 연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 인터넷의 교육적 특징

인터넷이란 1995년 미국 FNC(Federal Networking Council)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국제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어드레스 공간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1990년에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원으로, 탐색도구의 개발과 함께 빠르게 일반화되었다(이윤미, 1998).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대학원 졸업
-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연구원 역임
- '97 에듀넷 연구·시범 학교 운영,
「교육용 멀티미디어 데이터 라이브러리 연구 개발」외

인터넷은 정보화 사회의 원동력이며,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이러한 컴퓨터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 수단으로의 활용', '수업의 보조도구로의 활용', '탐구활동형 학습으로의 활용', '가상 교실 또는 가상 학교로서의 활용', '자료 제공자로서의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숙희 외, 1997).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환경은 기존의 어떤 학습환경과도 다른 새로운 형태로서 교육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가. 컴퓨터 통신의 교육적 의미

1980년대부터 컴퓨터 통신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역동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힘들며, 반응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의 지체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자료의 공유, 전세계

1) 에듀넷(EduNet) : 교육부의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 시스템 (<http://edunet.kmea.net>)

적인 정보 및 의사소통의 가능성으로 학습자 중심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을 위해 상당한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다(손병길 외 1995; 정택희 외 1996; El-Tigi, M. & Branch, R. M., 1997; Hackbarth, S., 1997).

첫째, 컴퓨터 통신은 기존의 통신매체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그룹 과제를 행할 때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은 컴퓨터 통신의 장점으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신속하고 용이하게 많은 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쉽게 공동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 통신은 지연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E-mail, 게시판, 토론 그룹 등의 정보교환 기능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 직접 대면과는 다르게 의사 소통이 지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수신된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그 내용을 수정·편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므로, 메시지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성격을 가진 학생에게 언어간·문화간 학습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한다. 컴퓨터 통신망은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습득한 정보와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협동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통해 학생들 사이의 열린 토론을 촉진시키며, 세계로 열린 학습환경(global classroom)을 가능케 한다.

넷째,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다양한 학습자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존중심을

길러 주고, 다양한 관점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가치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 교과별 인터넷 활용 전략

인터넷을 학교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과목의 특성을 분류하고 각 교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습 집단 구성과 이에 따른 수업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을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교과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최성우 외, 1997).

<표 1> 교과별 인터넷 활용 방안

| 교과 | 활용 방안 |
|-----|--|
| 국어 | · 게시판을 활용한 작문, 시, 글쓰기 수행 ·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독후감 쓰기 |
| 외국어 | · 외국 학생들과 전자우편을 통한 팸플 활동 · 영어 동호회 및 영어 대화실 메뉴 활용 · 외국의 교사에게 인터넷을 통한 작문 지도 받기 ·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한 영어 편지 쓰기 |
| 과학 | · 여러 지역(나라) 학생들과 과학 등 공통 주제에 관해 토론하거나 공동 실험을 계획, 실시하고 결과를 교환 ·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질문하기 |
| 사회 | · 컴퓨터 통신 원격회의를 통해 세계 여러 지역, 국가에서 활동한 유명 인물에 대해 조사 · 농촌과 도시와 같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비교 ·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가상 여행을 계획하여 전자우편으로 여행 정보를 조사 |

2 인터넷 활용 교수-학습 연구 사례

'97년도 8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인터넷 활용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지정 정보활용교

육 연구학교의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최성우 외, 1997).

<표 2> 학교별 인터넷 활용 연구 주제

| 인터넷 활용 목적 | 연구 주제 | 비고 |
|----------------|---|-------------|
|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인터넷(에듀넷)을 통한 협동학습 지도 방안 | 초등학교 |
| | 인터넷(에듀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 중학교 |
| | 인터넷(에듀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과 주제해결 학습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
| | 열린학습에서 인터넷(에듀넷) 활용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신장 | 초등학교 (도서학교) |
| 가상 교실 또는 가상 학교 | 수학·지리 교과의 홈페이지 활용 수업 방안 연구 | 고등학교 |
| 의사소통의 수단 | 전자우편과 대화실을 활용한 청각장애 학생의 언어능력 신장 | 특수학교 (청각장애) |
| | 인터넷 정보교환 기능을 이용한 정신지체의 부적응 행동 교정 지도 - 교사와 학부모의 아동 관찰을 중심으로 - | 특수학교 (정신지체) |
| 수업의 보조 도구 | 인터넷(에듀넷)을 통한 정보활용이 놓여준 상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지도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교 |

각 학교의 연구 동향은 인터넷의 자료 및 컴퓨터 통신 기능을 단순한 매체적인 활용이 아닌 새로운 컴퓨터 통신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 인터넷을 통한 협동학습 지도 방안 연구

D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이 인터넷 기능 및 메뉴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97년에 컴퓨터 통신 환경의 구축과 운영

교사의 연수에 집중하여 초고속통신망 256Kbps를 설치하고 윈도우 NT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매주 1회씩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 교사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협동학습 지도 방안 연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4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구성, 인터넷을 활용하여 협동학습 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협동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 지도안을 설계하고 이를 수업에 3회 적용하였다. 수업 적용 결과 일반적인 수업방법보다 학생들의 동기유발이 용이하였으며, 인터넷의 대화방, 메일, 게시판 기능 등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예상하였던 것보다 학생들이 검색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분석·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수업 적용시에 교사의 의도인 협동학습에서 벗어나 주로 개별적인 정보탐색 활동 위주로 진행된 점과, 정보탐색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을 위해 특별지도가 필요한 점 등 적용상 고려할 사항이 있었다.

나.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J 중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로서, 학교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통신학교 등의 컴퓨터 통신 활용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교과별 특성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영어 교과를 중심으로-’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탐색 학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터넷 활용능력 및 학습자의 선수학습 능력에 따라 4명 1개조의 소집단을 구성하고 에듀넷 사용법, 검색엔진 사용법, 전자우편 사용법, 자료 저장 및 프린트 출력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과제시형, 학생탐구형 등 교과별, 단

원별 수준에 맞는 적용 방법을 택하여 생물, 기술·산업, 영어 교과에서 학습 지도안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및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였다. 운영 결과 학생들은 교과 단원에 한정된 자료 외에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탐색된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프린터, OHP, 또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함으로써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 열린학습에서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 신장

K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의 특징과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열린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열린학습에서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 신장'이란 주제를 선정하였다. K 초등학교에서 예상하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활용 연수를 통하여 교사·아동·학부모에게 정보검색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 단원에 한정되어 있는 인터넷 자료와 함께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아동들의 학습능력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정보검색엔진을 지도한 결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습의 개성화, 개별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열린 교육에서 인터넷 활용은 아동들이 문제 해결에 있어 획기적인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활용하여 학교생활 안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부모에게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수학·지리 교과의 홈페이지 활용 방안 연구

P 고등학교는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고 그래픽 수업, 멀티미디어 수업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홈페이지에 통신학교라는 코너를 만들어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습자료나 시험지 등을 주고받고, 학습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이버 학교 기반을 구축하는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학교 전체에 LAN 환경 및 학교망(Backbone)을 구축하였으며 각 교실까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학교 자체 웹 서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학교에 구축된 컴퓨터 통신 시설 및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교과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주제는 '수학·지리 교과의 홈페이지 활용 수업 방안 연구'이며, 수업에서의 활용 방법을 3가지로 구분하고 학습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였다. 인터넷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수업에서 제시해 주는 제시형 수업 방법, 학생들이 인터넷을 향해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자료 수집 방법, 교사와 학생이 학습내용을 HTML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 온라인 통신학교 웹 페이지에 적재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의 멀티미디어화된 자료를 이용한 수업으로 학습 흥미가 높아졌으며, 학습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학습자료를 탐색하여 자신의 학습 수준 정도에 따라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사이트의 상담 코너 또는 대화방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얻어 내는 방법을 알게 되는 등 정보교환 능력이 향상되었다.

마. 전자우편과 대화실을 활용한 청각장애 학생의 언어능력 신장

S 학교는 청각장애자 학교로서 연구 주제는 청



각장애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보 통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생활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으로 선정하였다. 98년도에는 좀더 청각장애 학생의 언어능력 신장에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과 대화실을 활용한 청각장애 학생의 언어능력 신장'이란 주제로 구체화하였다. '97년 10월부터 초고속국가망으로 256Kbps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수업에 적용해오고 있다.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습과제를(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부여하고 인접한 컴퓨터실로 옮겨 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보수집이 끝나면 다시 옆 교실로 모여 검색방법과 검색자료 등을 개인별 또는 조별로 발표하고 결과를 종합하게 하였다. 이 연구 주제의 수행 결과로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자율학습력이 크게 증대되고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 인터넷 정보교환 기능을 이용한 정신지체의 부적응 행동 교정 지도

M 학교의 경우에는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주제는 '인터넷 정보교환 기능을 이용한 정신지체의 부적응 행동 교정 지도'이며, 연구 내용은 학부모와 교사가 정신지체 학생의 주영역인 집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부적응 행동 양식을 면밀히 관찰하여 온라인 통신 면담을 통하여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가 전자우편 등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지체 학생의 행동 장애를 교정·지도하여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제언

학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방안 연구 측면, 학교 학습 환경 및 시설 측면, 그리고 전문가 협력 측면 등에서 고려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방안 연구 및 자료 개발 측면에서는 첫째, 교과 내용에 맞는 인터넷 활용 학습 지도안이 작성되어야 한다. 인터넷 활용 수업의 경우 주제선정, 정보탐색, 정리 및 발표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교과과정 운영과 수업시간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 수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과 단원별로 체계화된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수업 교재가 필요하다.

셋째, 단계별로 학생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정보검색, 이용 및 공유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의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 혹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에서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업방법, 수업내용, 교실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 자료가 지속적으로 교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 학습 환경 및 시설 측면에서는 첫째,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송 속도의 수준을 적어도 2Mbps 이상으로 하고 그 이용 요금에 대한 하향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하드웨어 및 시스템 자원은 사용 중 많은 고장이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이 요망된다.

셋째, 인터넷 활용 학습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실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컴퓨터 실습실의 재배치, 토론장소 확보, 인트라넷 구축을 통한 멀티미디어 교실과 관리실의 연결, 도서실의 전자도서실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버 및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 통신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네트워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냐는 네트워크 통신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올바른 정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력 측면에서는 첫째, 각 대학 연구실 등 전문가 집단과 초·중등학교가 연계된다면 수업에서의 인터넷 활용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천문학과 대학원생들이 중학교 천체학습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천문학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학교 현장 연구 결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담당자, 교육 관련업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숙희 외(1997). '학교 컴퓨터 통신 활용에 관한 국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손병길 외(1995). '국제 컴퓨터 통신 교실 21세기 프로젝트'. 연구보고 RR 95-2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운미 역(1998). '인터넷 보고서 - 정보혁명과 인터넷 시장-'. 서울: 생활지혜사.
- 정택희 외(1996). '학교에서의 컴퓨터 통신 활용 실태 조사 연구'. 연구보고 RR 96-2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성우 외(1997). '97. 에듀넷 연구·시범 학교 운영'. 사업보고 PR 97-3.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 한국교육개발원(1993). '교수-학습을 위한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 사례'. 연구보고. RR 93-5-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El-Tigi, M. & Branch, R. M.(1997). Designing for interaction, Learner Control, and Feedback During Web-Based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37(3), 23~29.
- Hackbarth, S.(1997). Integration Web-Based Learning Activities into School Curriculums. Educational Technology, 37(3), 59~71.
- Moore, M. G. & Kearsley, G.(1996). Distance Education A System View.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교육법학 연구의 동향

글 ● 고 전

1. 서론 : 교육법학이란

오늘날 교육법 분야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식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교육학계 및 법학계의 관심을 모아 왔고 한국에서도 관련 학회가 발족되어 교육법학이라는 독자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과거 '의무로서의 교육'이 '권리로서의 교육'으로 선언되고, 이제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즈음에 교육법 연구의 의미와 그 동향을 점검해 보는 일은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이상의 뜻깊은 주제가 되리라고 본다.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연구원
- 「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논」(공저) 외

일본교육법학회의 『교육법학사전』(1993)에 의하면 교육법학(Schulrechtskunde, education law)은 교육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교육학과 법학과의 학제적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종합사회과학으로서의 독자성을 지향하고 있는 연구분야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 교육법학계의 원로 가네꼬 마사시(兼子 仁)는 “교육에 관한 법규자체를 정면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법과 교육과의 관련을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으로, 나가이 켄이치(永井 憲一)는 “헌법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본권(교육인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안기성은 “교육에 관한 법규범을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구체적으로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재판을 둘러싼 교육법제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법학은 “교육법 현상을 독자적 연구대상으로 하여 교육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방법 및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법의 관계구조를 설명·진단·예측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법 현상은 교육법에 관련되어 있

는 법적 현실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교육입법·교육사법·교육행정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법 연구의 의의는 교육제도의 존립 근거인 교육법이 교육의 목적달성에 합당한 '규범적 정당성'을 갖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현행법의 '사실적 실효성'을 검증하여 '살아 있는 교육법'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법학의 연구대상 및 영역

교육법학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법학의 연구대상은 교육법 현상으로서 교육입법·교육사법·교육행정의 전과정에 걸쳐 있는 교육법에 관련된 법적 현실 모두이다. 그런데 교육법학의 연구영역은 교육법학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는 교육법학의 연구방법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의하여 달리 규정될 수도 있다. 교육행정학 영역 속에서 교육법 연구를 논할 때 그 내용은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법규일 수 있고,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의 탐색을 위한 정책개발 단계에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행정법 등을 취급하는 공법학의 분야에서는 교육구성원 및 집단의 법적지위나 이들간의 권한 분배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헌법학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과 이에 관련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교육법학의 연구방법론에서 후술되었지만 교육법학을 교육학과 법학과의 교류라는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법해석학에서는 교육조리의 규명과 교육인권에 대한 논의 등 주로 교육법 이론적 의미 측면을 다루게 되고, 교육법사회학에서는 교육법제사, 교육재판, 교육권리 운동 등 교육법의 실제적 의미 측면을

주로 다루는 상대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영역의 구분은 논리형식상의 것이고 실제로는 교육법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관심영역에 따라 그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영역의 비체계화 현상은 교육학과 법학간의 학문적 교류정도나 더 나아가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수준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법학의 연구영역을 지금까지 발표된 교육법 관련 연구물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기본권에 관한 영역과 교육법 체제에 관한 영역이라는 두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기본권'이란 국가가 주관하는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받을 '교육수권(教育授權)'적 의미에서의 종래의 협의적 교육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초로서 필요한 생래적 권리(인권)의 실현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말한다. 교육기본권 관련 연구는 다시 교육기본권의 성격, 범위, 보장, 교육법리 등 교육기본권의 체계에 관한 연구와 학생, 교원,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독권이나 교육기관의 자율권에 관한 연구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가 교육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연구의 영역으로 한다면, 교육법 체제에 관한 연구는 교육법의 과정과 환경을 연구영역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법이 성립, 집행, 개정되어 가는 각각의 과정과 관계구조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법 체제에 관한 연구에는 교육법(현 교육기본법)의 성격, 효력, 원리 등 교육법 체계에 관한 연구와 교육행·재정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 등 개별 교육법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교육입법이나 개정 및 운영실태, 교육법제사 등을 다루는 연구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법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의

관계는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영역이 규정되기도 하고, 혹은 연구영역에 따라 연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호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법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및 관심의 대상에 의해 경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교육법 학계의 현실이다.

3. 교육법학의 연구방법

지금까지의 교육법 연구가 성문 교육법에 대한 문리해석 위주의 연구방법에 의존해 왔다면 교육법학은 법학의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해나가는 한편, 교육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법 이론을 구성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법학과 교육학의 두 방법의 교류 위에서 추구되는데 대표적으로 교육법해석학적 접근방법과 교육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교육법학은 특수법 영역으로서 그 연구영역의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때 독자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에 따라 교육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그것이 교육학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학의 뒷받침을 요한다. 따라서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법의 논리가 아닌 교육이라는 특수사회관계에 관한 특수법 논리, 이른바 교육법 논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연원이 되는 것이 교육조리라고 할 때 이의 구명 또한 교육학과 법학의 간학문적 접근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결국, 교육법에 관한 법해석학적 접근이 교육법학의 주된 방법론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학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엄밀히 말하면 그때야 비로소 법학 방법론만으로서의 교육법에 관한 법해석학적 접근이 아닌 교육법학의 연구방법론의 하나로써 교육법해석학적 접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같은 논리로서 법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법의 과학화 및 법칙화를 지향하는 법사회학

적 접근방법 역시 교육법학의 방법론으로서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교육법사회학적 방법론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사 및 교육행정학적 관점이 수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사회학이 일종의 법규범의 실현·부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입장이라면(물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살아있는 법'을 연구하지만) 교육법사회학에 있어서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게 된 상황과 그 원인이나 앞으로의 변화에 필요한 조건, 혹은 법규범에 의한 현실 시정의 조건이나 과정이 중시된다.

어쨌든 교육학과 법학간의 교류를 통해서 완성되는 교육법학의 연구방법론은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학제성(學際性)을 특징으로 하지만 교육학과 법학이 충분히 통합되지 못하고 분과적으로 이루어 질 때는 단지 다학문적(multi-discipline) 접근방법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제3의 방법론으로서 간학문적(inter-discipline) 접근방법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화학적 통합의 정도가 교육법 연구분야의 학문적 정체성 수준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독일·미국·일본의 교육법학

가. 독일의 학교법학

독일의 경우, 행정법학적 교육법 연구경향에 비판적이었던 프랑크푸르트 국제교육연구대학의 Hans Heckel이 학교법학(『Schulrechtskunde』)이라는 저서를 발간한 이래 점차 전통적인 행정법학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교육법 논리의 전개에 기초한 교육법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4년의 전국법학자대회에서는 “행정과 학교(Verwaltung und Schule)”라는 주제로 분과토의가 이루어져 많은 공법학자들이 교육법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어 1960년대에 진행된 각 주의 학교법제 개혁을 둘러싸고 교육정책과 법과의 역동성이 부각되

어 교육법사회학적 연구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Heckel의 학교법과 학교정책(『Schulrecht und Schulpolitik』, 1967)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한편 Heckel 교수가 1954년 창간한 소년법(『Recht der Jugend』)이란 계간지가 1967년에는 소년법·교육법(『Recht der Jugend und des Bildungswessens』; RdJB.)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법 관계논문의 발표의 장이 되고 있다. 더욱이 1969년에 헌법학자 F. Klein 등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그의 완전 실현(Das Recht auf Bildung und Seine Verwirklichung im Ballungsraum)”을 발표함으로써 서독 헌법학계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에 본격 나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독일에서는 현재 교육법학회라는 명칭의 정식 학회는 없으나 Heckel이 재직하던 바 있던 국제교육대학(die Hochschule für Internationale Pädagogische Forschung)이 독일국제교육연구소(Deutsches Instituts für Internationale Pädagogisch Forschung, DIPF)로 이름을 바꾸어 교육법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학법을 포함한 교육법이란 개념보다는 학교법(Schulrecht)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주된 연구영역은 국가의 학교감독권, 교원의 교육의 자유, 부모의 교육참여권,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교육기본권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미국의 판례 학교법학

미국의 경우 교육법 관계에 대한 논의는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흑인의 분리교육, 학생의 징계처분, 종교교육 문제, 사립학교 법제, 교원의 교육의 자유 등의 판례에 대한 평석의 형태로 논의되어져 오고 있다. 일찌기 1950년대 중반에 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전국대학의 대부분이 학교법(School Law) 강좌를 개설하였고 1954년에는 ‘교육법문제연구전국협회(National Organization on Legal Problems of Education;

NOLPE)’가 결성되어 교육법 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이 협회는 미국의 대표적 교육법 연구단체로서 교육행정학자, 교육행정관료, 변호사 등 다양한 회원을 확보하여 매년 총회와 세미나를 열어 교육법 문제를 토의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 기관의 명칭을 ‘교육법협회(Education Law Association; ELA)’로 바꾸었는데 사무국은 오하이오의 Dayton대학에 있고 변호사 Jeff Horner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1960년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판례해설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교육법학서가 등장하였는데 1963년에 출간된 M.C.Nolte와 J.P.Linn공저의 교사를 위한 학교법(『School Law for Teachers』)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후 각 대학의 연구논문집 가운데에는 역시 판례를 소재로 했으나 교육의 장에 있어서 자유의 존중, 어린이·부모·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 보장이라는 교육법 논리에 관점을 둔 논문이 등장했다. 그리고 1972년 1월에는 계간지인 교육과 법(『Journal of Law & Education』)이 발간되어 학교법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서 제공되어 왔다.

미국 교육법 연구의 특징은 판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연구의 참여자들도 대학의 교육법 연구자 이외에도 변호사 및 판사·검사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 당사자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 일본의 교육법학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에서는 천황제 국가교육의 법제가 ‘행정법’의 일환으로 존재하여 ‘교육행정법학’만이 있을 수 있었다. 전후 교육법제에 관해서도 전후 개혁에 충분히 입각하지 않은 의회민주제적 국가교육권설을 채택한 문교행정 해석을 필두로 하여 전과 다름없는 ‘교육행정법’론이 주장되어 갔다.

1949년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교육법규’ 과목의 이수가 규정된 이래로 교육행정 학자나 교육행정관료에 의해 몇 권의 상의교재가 발간되었으나 이 무렵의 ‘교육법규’ 역시 교육행정 법에 다른 아닌 공법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1954년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두 법’의 제정으로 법학계에서는 교육법제 연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 바, 일본 교육법학계의 대부격인 아리쿠라 요기찌(有倉 遼吉)가 문교관료와 함께 콘멘탈 교육관계법(コンメンタル 教育關係法, 1958)을 분담집필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1956년 교육위원 공선제를 폐지하는 ‘지방 교육행정법’이 강행되어 교직원 근무평정 규칙이 마련되자 이에 대응하여 교육행정학자들이 근무평정제도의 민주적·합리적 실시조건을 위해 교육조건장비의 법제와 실태에 관한 분석에 착수한 것이 본격적인 교육법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이어 1958년 연말에는 현재의 일본교육법학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연구회’가 동경대 교육학부를 활동부대로 창설되어 교육연구자와 공법 및 노동법학자들은 물론 교육재판 담당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1960년대는 교육행정 분쟁의 시기로서 교사의 교육권을 둘러싼 1961년의 ‘학력 테스트 재판’과 1967년의 ‘교과서 재판’ 등, 이른바 교육재판을 통해서 교육법학은 신진되어 갔다. 즉 교육재판과 그 판례를 통해 교육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교육조리적 법 해석이 출현하였으며 1963년에 출판된 가네코 마사시의 『教育法』은 이 단계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1964년에 편집한 『教育裁判例集I』은 교육법학적 시각에서 집필한 최초의 교육판례집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무렵 교육권에 대한 저서가 다수 출판되었는데 호리오 테루히사(堀尾 輝久)가 1966년에 저술한 현대에 있어서 교육법(『現代における教育法』)은 국민교육권을 교육법원리로 서 명확히 논술한 최초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1966년에 ILO/UNESCO가 주최한 정부간

회의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됨과 아울러 ‘교육행정과 노사관계’에 관한 주제가 노동법학계에서 논의되었고, 1969년 ‘대학운영임시조치법’을 둘러싸고 ‘학문의 자유’ 및 ‘대학법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어 1970년 8월 27일에는 일본교육법학회가 정식 발족되어 교육학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교육법학 확립에 집단적 연구의욕을 보인 계기가 마련되었고 교육법학이란 표제를 사용한 다수의 서적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1년 가을부터 교육법에 관한 전문지로서 『季刊 教育法』이 창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의 교육법 연구 주제는 교육권과 학습권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재판의 전개와 교육판리의 축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학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사회학적 연구도 출현하게 되었는데, 다카노 케이치(高野 桂)의 『学校経営現代化の方法』(1970)과 『学校内部規程の研究』(1976)는 그 대표적 예이다. 1980년대 이후 일본 교육법학의 연구영역은 더욱 확대되어 교직원제, 학교시설의 조건장비법제, 장애자 교육법제, 사회교육법제, 그리고 학교내 성폭 및 체벌에 관한 문제까지 망라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어린이의 인권보장 문제에도 관심을 넓혀 가고 있다.

5. 한국의 교육법론

지금까지의 교육법규 관련 연구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법규 해설 연구기’로서 교육법규에 관한 해설서 발간이 주를 이루었던 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고, 둘째는 ‘교육법학 소개 연구기’로서 교육법학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관련 학위논문이 출현한 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끝으로 ‘교육법학적 접근 연구기’로서 관련 학회가 결성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물이 발간된 시기이다.



가. 교육법규 해설 연구기(해방 이후~70년대 중반까지)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발간한 교육관계 법규집과 몇 권의 교육법규 해설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 당시의 교육법규 관련 연구는 교육법규의 내용소개와 주해서의 수준이었고 학회방면에서는 한국교육학회(1953. 4. 4 창립)의 『教育學研究』에 실린 김창곤(1974)의 "교육사자의 입법화 과정"(12권 2호)과 이원호(1976)의 "법제사적 측면에서 본 조선시대 교육의 변천"(14권 2호) 등 두 편의 논문만이 게재되었다. 이들 역시 교육법규의 내용을 연구한 논문이라기 보다는 입법화 과정과 법제사적 변천을 살펴본 것이었다.

교육학회 분과연구회인 교육행정학회(1967. 4. 8 창립)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1972. 8. 30 개원)의 연구활동 가운데 교육법규 관련연구는 발전되지 않았다. 교육행정관료였던 김낙운이 1976년에 발간한 『教育法解説』은 '교육법규 해설 연구기를 마무리 짓는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법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교육학회와 연구기관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도 있다 하겠으나 '법의 정당성보다는 법의 준수'가 그리고 '제도의 타당성보다는 제도의 도입'이 우선적 과제였던 시대적 배경에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교육법학의 도입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 교육법학 소개 연구기(70년대 중반~80년대 중반)

교육법규 관련 연구에 있어서 학문적 접근의 가능성이 모색된 시기를 1970년대 중반으로 설정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는 안기성(1976.6)과 박인희(1977.12)가 '교육법학'이라는 논문을 공표화 하기 시작하여 교육법학의 독자적 연구분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교육법학 연구의 주된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1977년 백명희에 의해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신도적 소개에도 불구하고 교육학계의 반응은 의외로 소극적이었는데 한국교육학회와 교육행정학회에서는 이 기간에 단 한편의 관련논문도 발표되지 않았다. 박사학위 논문 역시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서 2편의 논문이 있었을 뿐 교육학 분야의 학위는 1985년 허재욱의 사립학교법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무하였다. 그외 대한교육연합회에서 교권사건판례 및 교육법규 정비방안에 관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고 각종 단행본으로서는 교육법 해설서 및 외국의 교육법제 해설서 등이 몇 권 발간되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단행본으로서 변호사였던 김창수의 『교육판례해설』(1981)은 특기할만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다. 교육법학적 접근 연구기(1980년대 중반 이후)

교육법규 관련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이다. 1984년 국내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법학회(초대회장:김철수)'가 창설되었고 1986년에 『教育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라는 단행본을 출간한 뒤, 1995년과 1997년에 학술대회 논문집인 『韓國教育法研究』를 두 차례 발간하고 최근에 "교육현실과 교육법적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1998. 9. 18)한 바 있다.

이어 국내 교육학자를 중심으로 1986년 9월 22일에 '대한교육법학회(초대회장: 정태수)'가 창설되어 12월 13일에 제1차 학술발표회를 가졌고, 이후 학회지인 『教育法學研究』를 창간호(1988년)부터 제9호(1997년)까지 발간해오고 있으며 이들 회원을 중심으로 교육법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학회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은 학회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의 경향은 교육기본권 영역중 학생, 부모, 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교육기본권 체계 및 교육법리의 탐구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어 1980년대 후반 전교조 활동과 함께 교육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고되어 교육현장과 관련된 단행본도 수 권 발간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연구방법 면에서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일조할 수 있는 법학과 교육학의 간 학문적 접근방법보다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수행되어온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학회 역시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수립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발간된 단행본으로서 한국·미국·일본의 교육관례를 중심으로 교육권본을 소개한 안기성의 『교육법학 연구』(1989)와 강인수의 『教育法研究』(1989)는 눈길을 끄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몇 권의 단행본이 발간되었는데 박재윤의 『학교 교육법 편람』과 사립학교법 편람(1995), 한국교육행성학회의 『교육법론』(1995), 그리고 허재욱의 『教育法規論』(1996)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교육행성학회의 전문서로 발간된 『교육법론』은 대한교육법학회 활동을 주도해 온 학회 인사들이 집필자(강인수, 박재윤, 안규철, 안기성, 정태수, 표시연)로 참여한 단행본으로서 고간의 학계의 교육법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 정리한 연구사적 의미가 있는 저작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97년까지 교육법과 관련하여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은 총 23편이 발표되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교육기본권 및 교육법규 체제에 걸쳐 다양한 논문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백명희(1977), "한국 교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 박인희(1982), "현대교육법원리로서의 교육의 자유", 경북대(법학)
- 조규인(1984), "대학자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법학)

- 허재욱(1985), "한국사립학교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
- 강인수(1987), "학생,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
- 안규철(1987), "한국교육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
- 고재형(1988), "한국교육법에 관한 체계분석적 연구", 단국대(법학)
- 박덕원(1989), "고등교육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 계명대
- 이경운(1990), "대학생의 법적 지위", 서울대(법학)
- 신현직(1990),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법학)
- 이종만(1991),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관련법규 연구", 서울대

- 박재윤(1992), "교육조직에 관한 법 운영 실태 연구", 고려대
- 임한소(1992), "학교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법학)
- 이혜숙(1993), "관례를 통해서 본 대학교수의 학문의 자유", 단국대
- 김윤섭(1993), "한국교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성균관대
- 허종렬(1993),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 성균관대(법학)
- 김형근(1994), "대학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명지대(법학)
- 이천수(1994),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권에 관한 연구", 명지대(법학)
- 원영성(1995),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연구", 동국대
- 김관수(1996),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전주대(법학)
- 조석훈(1996),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서울대
- 김흥주(1997), "교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연구", 단국대
- 고준(1997), "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위논문의 주제별 특징은 '교육기본권 연구영역'(15개 논문)에 관한 연구가 '교육법 체제 연구영역'(8개 논문)보다는 더 많이 발표되었고, 연구방법 면에서 보면 문헌연구(17개 논문)는 주로 법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실증조사연구를 병행한 논문(6개 논문)은 부분적으로 교육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학위 종류별로는 교육학 분야(13편)가 법학분야(10편) 보다는 많은데 법학학위는 교육기본권 연구분야에, 교육학 학위는 교육법 체제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대학에서 교육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정태수의 한국교육법 성립과정 연구(일본 쓰쿠바대, 1985), 표시연의 학생의 기본권 연구(미국 아이오아대, 1986), 그리고 최윤신의 교사 관련 판례연구(미국 퍼즈버그대, 1988) 등을 들 수 있다.


6. 결론: '考'에서 '論', 그리고 '學'을 지향하며

교육법 연구는 일본의 관련 학회와 독일 및 미국의 연구기관 및 협회의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교육법학의 연구성과는 독자적인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산출물이라고 볼 때, 통합적 연구방법에 의한 교육법학 연구활동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찍이 일본은 교과서재판에 의해 국민교육권의 법리가 지지된 직후인, 1970년에 일본교육법학회를 창립하여 '교육권' 문제에 초점을 두고 교육법학의 독자성을 확보해 왔는데, 이러한 성과가 법학계와 교육학계의 학술적 교류에 힘입은 바 컸던 사실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한 대한교육법학회와 헌법학계를 주축으로 한 한국교육법학회가 양존하고 있어서 각자 학문분야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학회차원의 학술적 교류가 미흡하여 간학문적 방법론을 특성으로 하는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연구활동 인력이 극히 제한된 상태이며 아식은 연구방법상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여, 연구영역상 교육행정학으로부터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화되지 못하고, 연구방법상 행정법학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상태라는 진단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교육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답보상태가 관련 학회 출범 이후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온 것은 교육학자들에게 있어서 교육법 연구는 부업(副業)으로, 헌법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잔업(殘業)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연구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교육법 연구의 본업화(本業化)를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전공 및 교육과정의 개설과 연구기관의 교육법 연구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

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행정 및 교육실무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법 강좌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법 연구자들 역시 교육법 연구의 수준을 과거의 자료의 빈곤으로 인한 겸손의 '고(考)'나 회고적인 자족의 '론(論)' 단계를 벗어나 천착(穿鑿)을 기반으로 한 '학(學)'의 단계로 끌어 올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너무나 두껍고 고가품이어서 학습자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교육법전』을 개량화 시키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는 교육법을 연구실이나 강의실로 초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장인수·박재윤·안규철·안기성·정태수·표시열(1995). 「교육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 고 전(1997). "韓國의 教育法 研究動向 研究", 『教育法學研究』(제9호), 대한교육법학회, 54~78면.
- 박인희(1977). "教育法學考-教育法研究序說-", 『경북대학교 논문文集』(제24집), 경북대학교출판부, 13~27면.
- 박재윤(1987). "教育法研究의 主要動向探索", 『교육개발』(제9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 안기성(1976). "教育法學의 可能性-Ⅱ 方法論的 序說-", 『새교육』(1976.6), 18~27면.
- 허종렬(1995). "해의 법학계의 교육법 연구동향", 『법과 사회』(제12호), 창작과 비평사, 158~179면.
- 日本教育法學會 編(1980). 『教育法學の課題と方法』, 東京:エイデル研究所.
- 日本教育法學會 編(1993). 『教育法學辭典』, 東京:學陽書房.
- 日本教育法學會年報(1997). 『戰後50年と教育法學』, 東京:有斐閣.
- 兼子仁(1978). 『教育法』(新版), 東京:有斐閣.
- 兼子仁(1979). "有斐教育法學の歷史的意義", 『季刊教育法』(第33), 東京:エイデル研究所, 157~165頁.
- 永井憲一(1993). 『教育法學』, 東京:エイデル研究所.
- 미국교육법협회(Education Law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law.org>
- 日本教育法學會 事務局: 東京都新宿區戸山1-24-1早稻田大學 文學部33 館1576室 Tel.03-5286-3595
- 한국교육법학회: Tel. 02-210-2398, 02-3475-2431
- 대한교육법학회: Tel. 02-3460-0400

경제적 근본주의와 지구화가 남긴 공교육의 과제¹⁾

David G. Smith²⁾

번역: 성 일 제³⁾

I

A. McClintock(1994: 299)은 “초”의 시대(초근대주의, 초식민주의, 초구조주의, 초포디즘 등)에 산다고 하는 것은 “미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구적 위기” 속에서 산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보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적합치 않다는 상대적 확실성의 조건속에서도 “미래”는 곧 손에 잡힐 듯 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서구의 학문세계, 특히 교육을 포함한 인문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느껴지고 있다. 과거의 규범이 패권주의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이래, 여러 다른 방식의 앞, 다중지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생활방식에 대해 알려진 이래, 인식론적 일관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꿈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상차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 도리가 없다는 느낌이 팽배해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일반화된 불안감이 유럽 서구 학문계의 인문학자들에서 두드러진 것이라면,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최근(1997)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수상은 대학에서 인문학자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경제적 이익에 공헌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남긴 바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불안해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법학교수 J. Kelsey(1996)는 이 권력자들을 일종의 새로운 “경제적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일컬었다.

경제적 근본주의는 자유시장 원리에로의 급진적인 전환과 다국적 자본에 의한 세속적 권력의 조직적 장악을 특징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권력 장악의 본질과 그 의미, 그리고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현대의 신보수적 경제정책에 적용되고 있는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이는 자유시장의 급자 그대로의 원칙을 의미할 뿐 아니라 종교적 함의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최초의 진정한 세계 종교가 되고 있다.”는 D. Loy(1997: 1)의 말은 경제의 실체를 보다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찍이 Max Weber(1930)가 자본주의를 개신교의 산물로 본 이래, 다음과 같은 생각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리적 구조를 형성해 온 탓이다. 즉, 외양상의 구원적 성격, 방법적 배려에 대한 제도적 인정, 시장과 판매를 통한 복음 선포, 현재의 근면에 따른 종교적 보상을 약속하는 미래지향적 구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물질적 번영을 선민의 지표로 삼는 것 등이 그것이다. 최근 아시아 경제의 붕괴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신학적 하부구조의 이해 없이 그것의 단순한 이식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상기시켜 준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근본주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냉전의 종식과 특히 ‘초식민 시대’에 이르러 유럽의 지구적 패권의 붕괴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된 종교적 근본



주의의 보다 일반화된 현상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 심리'의 지구적 확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시장 경제 근본주의라는 것은 크게 보아 어떤 특정한 현상의 한 보기일 것이다. 확실히 여러 비서구 종교적 근본주의(시아파교, 힌두교 등)의 발흥과 자유시장 지구화(New Internationalist, 1991) 사이에 공생적 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종교적 근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분노에서 일어나고 있다(BBC, 1989). 따라서 경제적 근본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체로 폐쇄적 반복 체제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인 경제나 사회정책의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본주의 자체에 대한 연구에 의한 것일 것이다. 이 점에서 M. Marty와 S. Appleby(1994)의 "근본주의 고찰"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들 연구결과의 요점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근본주의는 위기, 특히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느낄 때 일어난다.
- 근본주의는 의도적인 증상을 띤다. 일단 그 임무가 결정되면 난폭한 요구와 주장을 펴는 중에서 힘과 희열을 동시에 얻는다.
- 근본주의는 선교사적 열정과 군대식 웅변술로 무장되어 있다. 그 극단적 주장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갖는데, 특히 진짜 추종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는 장치로도 쓰이며, 원칙적으로 그 자신의 주장 이외의 다른 어떤 해석도 용납하지 않는다.
- 근본주의는 독서에 있어서 지극히 선택적이며 전통을 사유화한다. 전통은 축소되어 합리화되며, 그것의 신비성, 복잡 미묘성, 애매성, 상황적 성격 등은 배제된다.
- 근본주의는 대중매체에 대한 타고난 이해와 그것을 조작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극적 종말론을 표현하는 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근본주의자들은 신의 뜻을 펼치는 종말론적 드라마에서 인류역사의 방향을 이끄는 배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전체주의적 충동에 이끌려 현존의 구조를 다른 종합적인 체제로 대체하고자 한다.
-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적을 거명하고, 극화시키며, 때로 신비화시키기도 한다. 가령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부정의 수사학"이기도 하며, "역 문화시민적" 입상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들의 이상 실현을 위해 대단히 참을성 있게 필요한 내부구조를 형성

해 간다. 근본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생존을 위해 흔히 세속적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요구하며, 그들이 공개적으로 혐오하는 가치를 선망하는 식의 전형적인 파라독스를 내포하고 있다.

II

흔히 '초식민주의' 또는 '탈식민주의' 시대라고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애매모호한 오도된 말이다. 식민주의는 종말을 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힘의 원천이 옮겨간 것 뿐이며, 그 특성은 매체를 조종하는 미소 지편에서 더욱 사악하게 변모되었다.

오늘날 더욱 심각한 상황의 전개는 2차 세계 대전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침략받지도 않고, 전쟁 덕에 고도의 산업 하부구조를 발전시킨 미국이 세계 지배의 새로운 권좌에 앉게 된 것이다. 현대 경제적 근본주의의 세계적 확산의 시도는 대체로 미국적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1980년대 이후에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1971년에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280개가 미국 것이었지만, 1991년에는 343개로 되었고 나머지 157개만이 일본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동남아 몇 개국의 것이었다(Greider, 1997 : 22). E. Goldsmith(Mander and Goldsmith, 1996 : 5)는 이런 현상을 "새로운 종류의 기업식민주의"라고 명명했으며, 그것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자원뿐만 아니라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구축되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상금융제에 입각한 새로운 지구적 "카지노 경제"에 의해 운영·유지되며 일종의 "단일 문화"로 특징지어진다.

새로운 기업식민주의의 기원은 1930년~40년대 미국의 대외관계회의(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회의는 1941년 7월 24일 '중요한 지역'의 개념을 설명하는 한 각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해야 할 필요" (Korten, 1996 : 21)가 있는 세계의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 회의는 또한 "저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건설사업을 위해 통화를 안정시키고 자본투자 프로그램을 활성화" (Sklar, 1980)시킬 목적으로 범세계적 경제기구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서구의 국제경제 리더들이 전후의 세계경제 운영을 논하는 1944년의 브레튼 우즈 회의(Bretton Woods Agreement)를 이끌어 내는 무대를 제공한 셈이다. J. M. Keynes는, 거대기업이나 산업체들이 맘껏 무제한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사

회적 경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구조를 선전하는 우두머리였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면서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H. Morgenthau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고, 자연자원의 무한한 풍부 속에 물질적 진보의 열매를 더욱 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세계경제 체제를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참석자들에서 “변영은 정해진 한계가 없으며, 그것은 나날이라고 해서 감소되는 한 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초보적인 경제 경구”를 받아들이라고 역설했다(in Korten : 21).

Bretton Woods의 회합이 끝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결성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탄생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이었다. 이 두 기구는 새로운 지구적 경제구조의 엄중한 감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그 기구들이 후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약”(GATT)이라는 조직의 기초를 다져 놓았다. GATT는 일련의 국제무역 규약으로서 W. Greider는 이것을 “일종의 종교적 조약”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World Bank, IMF, GATT에 내재된 종교적 성격의 시각에 따라 그 기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가정을 일종의 전제로 전제하게 되었다. 첫째, 경제적 성장과 국제무역의 증대에 대한 서구적 이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대가를 가져온 것이다. 둘째, 경제적 성장은 자원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가정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의 실성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World Bank나 IMF는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자국의 풍부한 상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말한다면 Bretton Woods의 꿈은 1950년 후에 실현된 것이다. 경제성장은 5배 증가되었고, 국제 무역은 12배, 그리고 외국의 직접투자는 무역팽창 비율의 2~3배 증가되었다(Korten : 22).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보다 깊은 인간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즉, 무한 경제팽창 패러다임의 환경적 대가, 마이크로 칩 혁명의 결과에 따른 일의 성격의 재구성, 경쟁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새로운 국제경제의 정치적 지배와 조정 등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자에게 남겨진 과제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 현존하는 형식교육의 패러다임이 식민주의의 초기 단계에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갈수록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지는

이 세계에 대한 일련의 조건과 가정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학혁명이 일의 의미와 본질에 주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유럽-미국의 상황에서 볼 때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를 지탱해 온 거대한 중산층의 실제적 문학과 서류작업이나 계산체제에 의존했던 거대한 중간관리층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 두 계층이야말로 선후에 엄청나게 팽창한 대학교육의 주된 정당화 이유였다.

기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직업퇴출은 GNP나 GDP상의 “경제”면에서는 고도의 비용-이윤율에 따라 엄청난 “봄”으로 환영됨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저임금, 단순노동, 비천한 일, 임시 계약직 등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 생계만을 위해서도 부부가 함께 일해야 하고, 어린이들은 돌봐줄 어린이 없게 되고, 고용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고도의 불안정과 사회적 편입증이 만연된 것임을 뜻한다.

미래의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일 것이고, 그러기에 학교나 대학은 특히 과학이나 컴퓨터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된 졸업자를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말짱 거짓말이고 실질을 흐리는 것이다. 즉 북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는 컴퓨터 과학자의 거대 집단이 도대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Barlow & Robertson, 1994 : 66). 최근 Stanford 대학의 한 연구(Finnan, Levin & Rumberger, 1990)는 하이테크 환경의 새 일터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은 8학년(중2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Karp(1991)는 기업중심의 새로운 미국 경제는 “민주주의 문화건설의 기본적 꿈이었던, 모두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윤추구의 체제에서는 교육자들이 그토록 옹호·주장해 온 교육의 진 같은 것들에 대한 경제적 필요가 도대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기업적 경제 근본주의의 목적과 요구와 교육자들의 일과 삶에 내재된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향한 꿈이 충돌하는 광음이 있고, 그것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위기로 교육자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다.

II

1944년 Bretton Woods에서 있었던, 케인즈의 특단적 조치, 즉 자유시장에 자유면허를 주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특단의 조치는, 너스레 행정부와 연이은 레이건 행정부가 사회적 약



속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철회하는 동안 증막을 고했다. 만약 두 정부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대 기업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정책을 변경해 갔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Greider, 1997; Clarke, 1997; Davidson & Rees Mogg, 1994), 대부분은 냉전의 전반적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다.

냉전은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 발전시킬 뿐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여러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군비를 필요로 했다. 2차 대전 후 발흥한 아시아 경제는 어떤 점에서는 미국의 군사·정치적 보호하에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미국 회사들도 보다 값싼 외국 노동력에 의한 효과적인 상품 생산을 위해 공장을 외국으로 옮겼다.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들어와 아시아 경제가 붐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시들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의 외국투자 및 진출이 국내적으로는 국제경쟁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과 저임금을 가져온 것이다.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세금이야말로 미국과 서구가 선후 산업의 호황을 누리는 동안 사회적, 교육적 내부구조를 확장 발전시키는 뼈대였던 것이다. 높은 세금의 지원 없이 이러한 내부구조가 위협받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이런 경제적 압력이, 기술 공학시대의 도래에 따른 범국민 교육에 대한 요구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교육이 만약 잘 교육받은 일반국민에 대한 필요와 교육적 이상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생산이나 자본유통의 국제화는 정부에 또 다른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의 움직임은, 1980년대에 와서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정부제재의 완화였다. 자본은 국가통제에서 벗어나면서 갈수록 독립적이고 고도로 전산화된 자본시장의 일종의 가상조건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이 조건은 새로운 종류의 국경없는 지구경제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자본뿐 아니라 자본의 흐름에 따라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가령 유럽에서는 보다 급진적인 부국강 사회 형식의 "유럽 경제 연합"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공동체 형성에 하나의 걸림돌이 된 것이 레이건이 "악마의 제국"이라 부른 구소련이었다. 레이건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다가 군

대와 무기 생산에 미증유의 돈을 투입했다. 그것은 소련에 대한 힘의 과시뿐 아니라 소련이 무기경쟁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소련의 경제가 붕괴되기를 겨냥한 것이었다. 레이건의 계획은 적어도 그 목적인 바는 달성한 것이다. 소련은 비틀거렸고, 그러나 미국 또한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건의 전환과 관련하여 W. Greider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냉전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애국자들이 믿는 바처럼 노예상태의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본주의를 위한 자유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나? 주도적 국가들이 일찍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표명한 인권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이제 새로운 형식의 상업적 상대주의에 의해 빛을 잃었다." (37)

Greider의 논평은 현대의 경제적 지구화와 연관된 최대의 아이러니를 일깨워 준다. 인권, 개인의 자유, 자유선거에 의한 정치적 정당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결사의 자유 등 설득력 있는 언어의 힘에 의해 냉전은 승리했다. 그러나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새로운 시장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국민과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통제되고 학대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마저도 뉴욕시, 앨라배마, 테네시, 미시시피 등지에 "착취 공장"이 들어섰다. 규제 풀린 자금시장의 보호 아래,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공장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는 60년 전의 미국이나 유럽에서라면 유형의 시민폭동이 일어났을 법한 그런 조건들을 감내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근본주의자들은 냉전의 종식을, 확고하고 결성적인 형태의 경제조직이 전세계를 향하여 자기를 따르라고 나타난 징표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의 한 결과로, 기업부문에서 자기들의 권리는, 차라리 의무는 "교육을 포함한 여러 사회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철회시킬 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들 자유시장 개념에 입각하여 사립화시켜 채구축하는 것임"을 정당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은, 근본주의의 성격에 입각하여 체계적·조직적이며 흔히 대중매체 조작과 같은 기만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그들의 극적인 종말론의 실현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고 있다.

II

오늘날 공공부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는 정치리언지니어링의 결과로 그것은 20여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Clarke, 1997 : 44-69). 예를 들어 1970년대 초 일부 거대기업들이 최고경영자회의(CEOs)를 구성하고 주요 산업국가의 정치지도자들과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후에 "삼자간 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로 알려진 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새로운 지구경제"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정부의 역할을 재규정하려는 것이었다.

P. Marchak(1993)에 따르면, 그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각 정부와 국민들간의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정치적 핵심문제는 "과다한 민주주의"이며 그것은 "통치력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일부 비판적 언론이나 대학교수들의 지도조언을 받는 시민운동, 특히 공적 이해집단들은 지구경제의 발전에 지나치게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보다 허약한 민주체제에서의 보다 강력한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Clarke : 4). 정부정보에 대한 공중접근은 제한되었으며 언론은 보다 강력한 명예훼손법 등을 통해 공중을 길들이도록 장려되었다(Schiller, 1989). 또한 "대중교육을 축소시키고(취업 가능한 직업에 비해 교육받은 사람이 너무 많기에) 학자집단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했다(Clarke 전제서).

삼자간위원회의 주요 부산물 중 하나는 새로운 지구 질서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 각 경제블럭 내에서 거대 기업간 연합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2년에 "기업원탁"(BRT : Business Round Table)이, 캐나다에서는 1977년에 "국가 과제에 관한 사업회의"(BCNI : Business Council on National Issues)가, 유럽에서는 1983년에 "유럽원탁"(ERT : Europe Round Table)이, 일본에서는 경단련이 각각 만들어졌다.

이런 기업연합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시민전위 집단들이 이들 기업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중에는 "전국 늪지연합"(National Wetlands Coali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늪지를 채유장이나 상가로 전환하는데 따른 정부규제의 완화를 위한 투쟁에 석유회사들과 부동산 회사들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구다. 또한 "소비자 파수대"(Consumer Alert)는 상품안전에 관한 정부규제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기구다.

최근에는 부분별 기업연합들이 모여서 국제적 모(母)기관 성격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스위스의 Davos

에서 하마다 일주일간의 거대한 연차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캐나다 평의회 M. Barlow는 이것을 "새로운 지구적 왕권"(Clarke : 50)이라고 부른다. Davos 고임은 세계 초특급 엘리트들의 클럽이 되었으며, 거기에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협상이 지구적 단위로 이루어진다.

교육문제로 돌아와서, Barlow와 Robertson(1994 : 79)은 북미의 기업 지도자들이 공교육의 장악과 관련하여 세가지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청소년들에게 환경, 기업의 권리, 정부의 역할 등 문제에 대하여 자유시장 세계관을 갖도록 그들의 이념적 충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는 "젊은 소비자의 마음을 시장에 끌어들이고, 수지맞는 교육사업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 셋째는 "학교를 훈련센터로 개조하여 범국가적 기업의 필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들이야말로 교육과정이나 환경 교육 등 분야에 기업의 이해가 대규모로 침투해 들어오고, 기업들이 학교에 컴퓨터 등 공학기자재나 새 상품을 소개하는 대가로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런 '교육장악'을 위해 수많은 전략들이 끊임없이 동원되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공교육이 새로운 지구적 세계 경제에 대비한 시민 육성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지극히 편파적인 통계수치들을 들어가면서 언론을 통해 꾸준히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의 자녀들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 "우리의 졸업생들은 도대체가 올바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거대 기구는 고도의 기술직업을 계속 창출해 내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흔히 읊어대는 소리이지만 실상 그 어느 것도 엄격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없다(Barlow and Robertson). 교사들은 이러한 저속한 언론 플레이의 최대 희생자들이다.

두번째 전략은 사회적 적자생존식 기업철학을 교육 정당화의 진정한 구세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지구촌적 현실은 고도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케팅 기술, 의사표현 능력,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경영기법 등을 배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경영학과는 대학교육의 핵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전략은 Charter School이나 voucher systems 등 결국 독립학교로 이르게 하는 대안적 교육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의 와해를 기도하는 것이다.

Whittle Communications의 회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말한다: “교육과 상업적 이윤 사이에 근본적 갈등이 있는 것인가? 천만에! 산업이 교육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은 교육을 산업화하는 것이다”(Barlow & Robertson: 182). 유럽연합의 “인간자원개발위원회”에서 1993년에 “교육청서”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유럽지역의 30만개 학교, 4백만 교사, 6천7백만 학생들이 10년 내에 범국가 기업들과 “동반관계”(partnerships)를 만들라고 하고 있다.

교육을 자유시장 지구화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하려는 이러한 관심은 결국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 사람들이 서구의 현금거래 관계에 보다 깊이 종속되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IMF와 World Bank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7개 국가의 교육예산이 1984년에서 1994년 사이에 25% 삭감되었다. Costa Rica의 경우, 1950~80년에 걸친 공교육의 지속적 확대 추진 결과 Caribbean지역에서 문맹율이 가장 낮은 국가였으나, 1981년 IMF차관을 얻는 조건은 교육비의 삭감이었다.

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발흥국들이 현재 IMF와 World Bank의 감독체제에 들어가 있다. 가령 200억불의 외채를 지고 있는 헝가리는 IMF와 World Bank로부터 공공서비스 특히 교육예산을 줄이라고 강요받았다. 1991년 헝가리 교육부장관은 헝가리 교원노조에 보낸 서한에서 세계은행이 공교육의 개편을 위해 자문팀을 보낼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 결과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대학수준에서 고교수준으로 전락되었고, 고교 졸업생들이 아동교육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한 문서는 헝가리의 공교육이 “과잉교직화”(overstaffing)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멕시코는 한때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공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원노조를 갖고 있는 나라였다. 교사들은 대부분 농촌출신이었으며, 농지개혁이나 민주화를 위해 대단히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외채탕감의 조건으로, 세계은행과 IMF의 명령과 감독하에 사회개혁을 하게 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미 낮아진 교사봉급은 50%로 깎이고, 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형태의 교육개혁을 위해 산·학연대 체제를 가동시키면서 공교육체제는 해체되기 시작했다(Barlow & Robertson: 170-172).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약”(NAFTA)은 각 나라의 교육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타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회사나 사업은 자국민이나 자국사업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갖는

다는 “국가적 처우” 조항이다. 거기에는 가령, 막대한 자본의 미국기업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캐나다 교육부문을 장악하고자 경쟁한다고 할 때, 캐나다 국민들을 보호하거나,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 Calvert와 Kuehn(199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캐나다 교육을 “미국화”하고야 말 것이다. NAFTA에 명시된 다른 조항을 보면 이 점은 더욱 확실시된다. 그것은 공공기관이 일단 민영화되면 그 이익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 없이는 다시 공공기관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반전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V

오늘날 교육자에게 주어진 가장 명백한 도전은 현재 만연되고 있는 그러한 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히 교육실제, 공립학교, 공립대학의 전통적 입지는 단순히 기업식민주의의 장악하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다. 이들 기관을 시장기능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그들 기관의 정당성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 관용과 이해의 덕목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시민 교육의 전통적 목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승리만을 인정하는 각종 형태의 사회적 적자생존주의에 그 길을 내주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반 대중에게 교육하는 일이다. 현재 경제적 근본주의와 지구화의 힘은 아무런 저항없이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일반대중이 모순의 함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미디어를 장악하여, “현재의 변화와 그 방향은 불가피한 것이고, 모든 것은 세계은행이나 미국 재무성과 같은 기관들의 확실한 지도조언에 의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L. McQuaig(1998)가 말하는 “무기력의 신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강물의 흐름을 돌려놓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심정을 갖게 된다. 다른 한편에는,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제안·실천되는데 대한 일종의 동정심이 널리 퍼져 있다. 왜냐하면, 개인적 창의와 기업가 정신의 신화에서 젖을 땀 북미문화에서는 공적 예산으로 공공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교사, 공무원 등)은 마땅히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일반대중의 마음에 근본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이

다.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Adam Smith (in Cobb, 1994 : 50) 만큼 분명히 갈파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아무리 개인적 이해에 이끌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정직, 자유, 선도, 근면 등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사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적 권위는 그것이 실증주의적, 개인주의적 철학—현대의 경제이론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이 만연한 개인취향으로 환원되는 것을 용납치 않는다.” 이러한 말이 저속한 배금주의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고무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근본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경제적 근본주의도 여러 경제이론 중에서 오직 자신의 정당화에 동조하는 이론만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인도의 정치 철학자 R. Roy (1992) 에 따르면, 근대 경제이론의 지적 뿌리는 17세기 Thomas Hobbes의 경제적 수정주의에 있다. Hobbes는, 삶의 물질적 필요를 획득하기 위한 행동은 반드시 그보다 더 고상한 목적, 즉 자기 실현, 시민생활, 이상향을 향한 퓨리탄적 작업이념 등과 같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기존의 “두 바퀴관”을 뒤집어엮었다. 그는 고상한 목적을 거부하면서 “더 없는 행복”을 출발점으로 삼아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끊임없는 욕망의 진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이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멈출 수 있는 중단 없는 권력에의 욕망”을 만들어 내었다. 인간의 욕구는 두 가지 면에서 끝이 없다. 하나는 욕구가 종국적 목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즉 종점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창한다는 것이다 (Roy : 371-2).

경제적 근본주의의 “자기목적주의”는 오만과 경망성의 두 가지 징표로 나타난다. Roy가 지적하듯이 “현대 경제는 오직 인간 존재의 일부(가령 의식주를 제공하는)에 관여할 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그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전체주의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경제적 활동에 최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삶의 측면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뻔뻔스럽게도 환원적인 자기확장에 탐닉하고 있다.” 경제영역을 자동적인 그리고 자기목적적 성격에 맡기는 것은 거기에만 “도덕적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것”이다 (391-2).

두 번째 요구되는 공공전략은 경제이론의 가변성과 취약점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탈신화화하는 것이다. David Loy (1997) 가 지적하듯이 여성학, 문해연구, 초식민주의 이론 등에 자극되어 일어난 인식론적 혁명 이래 자체적인 패러다임적 반성이 가장 없는 곳이 바

로 서구 대학의 경제학파들이다. 현대 경제이론은 그 자신의 제안에 따른 사회적 결과를 직시하기를 꺼릴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장소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지구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다한다. Robin나 Dominguo (1997) 가 지적하듯이, GNP나 GDP 등 정통적 경제지표는 인간파괴를 초래하는 생산활동이나 증공선에 기여하는 생산활동 사이에 어떤 가치 구분도 하지 않는다.

열광적인 경제 근본주의에 의해 추진되는 지구화 이론은 실제로 범용을 향한 인식론적 보루를 마련하려는 계몽주의적 이상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 본질적 서구 중심주의는 비서구인들의 분노와 적의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화 이론이 정체성 내에서 어떻게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서구적 자기 단순한 잡역부로 주변부화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화의 기본구조 내에서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된 비서구 엘리트들은, 대체로 세계은행과 IMF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국제자유시장 개혁의 상투어들을 큰 소리로 외쳐댔으로써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가국민 나름의 이해를 배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문명의 역동성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Nandy (1994), Pasha & Samatar (1997) 같은 제3세계 학자들이 주장하듯, 서구는 그의 자만심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본질적 의존성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서구학문은 고대 이슬람의 선각자들, 특히 과학적 질서에 대한 그들의 공헌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Wolfgang Franke (1967) 가 밝힌 바와 같이, 진실로 계몽운동의 과제 자체가 스스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유교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18세기에 Leibnitz, Voltaire와 같은 유럽의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당시에 번역 출판된 공자의 논어와, 유교에 터한 고대 중국의 문명화된 질서에 대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소개에 열정적으로 감응되었다. 이러한 예는, 유럽이, 그 자신 끊임없는 전쟁에 휘몰리게 하는 투쟁적 신화 모델이 아닌, 이성에 대한 새로운 믿음에 의한 시민규약의 가능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럽질서의 건설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어떤 특정한 전통이나 문명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지속적인 논리에 바탕을 둔 지구화 대신 보다 창의적 형태의 지구화가, Pasha & Samatar가 말하는 “문명간 대화” (193), 서로의 신세짐과 책임을 고백하는 그런 대화의 장을 통해

가능하리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이나 학교로 보면, 이것은 보다 포괄적인 교과서나 학습활동이라는 형식의 교육과정 개혁이 아니라 지구적 현실의 맥락에서 교육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한다. 또 달리는, 가령 의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배적 가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특히 학교교육의 개념이 아주 좁은 의미로 정의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또는 행동적 습관이 세상을 향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게끔 진정으로 열린 방식으로 모양지워 주지 못하는 시점에서, 사회의 평등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의 공격은 일반학교의 구체적 성격 또는 이점에 대한 오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오늘날 공교육의 위기가 서구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와 궤를 같이 한다는, 즉 전쟁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또한 자기계멸을 뜻한다. 같은 모양으로, 어떤 교육자도 진정한 교육자라면 다 알고 있듯이, 교육이 전쟁(경쟁)의 행위가 될 때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어떻게든 손속 가능한 지구적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간 대화에 있어서, 교사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인간관계가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은, 일반적 맥락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일종의 관계적 해석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교육자로서 생존할 수가 없다. 그 이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명하달식, 일방적인 선도작업은 중국에는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것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 편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근래 지구화 운동의 핵심인, 민주적 과정의 부식은 궁극적으로 민중의 반발을 야기시킬 것이다. 교사의 지혜는 보다 인간적인 세계를 위한 조건의 확보에 필요한 어떤 토론에도 가치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 어

이 논문은 종교적 근본주의와 근래 지구화 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제적 근본주의의 유사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이러한 주도권이 순수한 비판적 분석을 요하는 것이기보다는 신학적 또는 종교적 본질에 보다 더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근본주의들이 그렇듯이 경제적 근

본주의의 변이도 정체성의 위기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배태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전통을 읽고 해석하는데 고도로 선택적이며, 복잡성과 모호성을 외면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해석에도 귀머거리가 된다. 그것은 군대식 웅변과 거룩한 목소리로 극적인 종말론을 감싸고 있다. 그것은 대중매체를 조작하는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전체주의적 충동에 의해 이끌려진다. 그것은 자체의 생존을 위해 수동적 개방성과 선의의 정치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모순이, 적어도 심각한 취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 취약점은 그것이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그 곤경 자체를 또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의 표시로 희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지구화의 추진력이 공학, 재정,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본질적 기본구조 속에 엄청나게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단순한 감상적 희망에 의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실로 복잡한 세상사를, 다수의 희생의 대가로 소수에게 봉사케 하는 식의 간단한 공식에 함몰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용감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성학의 대모인 Betty Freidan이 최근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인간의 도전은 성, 인종, 계급을 둘러싼 것이 아니고 경제에 관련된 것이다. 경제가 그 근본적 성격과 과급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지구화된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영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도록 스스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이 논문은 미국교육학회(AERA) 연차대회(1998.4. in San Diego, CA)에서 발표된 것으로 학술지 『Interchange』 1998년 가을호에 게재된 것임. 지면관계상 본문의 1/4 정도와 참고문헌을 줄였으나,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본원 홈페이지(www.kedi.re.kr → 발간자료 → 교육개발)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2) 필자는 캐나다 Lethbridge 대학에 20여년간 근무하다가 최근에 Alberta 대학으로 옮겼으며, 한국을 3차 방문하는 동안 본원에도 2차 방문하여 연구원들과 세미나를 가진 바 있음.
- 3) 본원 수석연구위원
- 4) "post"를 "후기" 또는 "탈"로 많이 번역하였으나, 최근에는 "초" (超)로도 흔히 번역된다.

바다를 눈발으로 일구는 진정한 해양인을 육성하는 학교

제주 성산수산고등학교를 찾아서

최돈민 (본원 부연구위원)

비행기에서 본 바다는 아름답다. 마음의 위안을 주는 푸른색으로 단장하고 육지나 섬을 향해 설새 없이 달려가는 파도가 있다. 제주도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육지에서만 살아온 사람에게 제주도가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성산수산고등학교는 제주도에서도 제일 동쪽 해돋이가 가장 잘 보인다는 일출봉 옆에 있어,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이는 가슴부터 설레기에 충분하다.

학교에 들어서면 1만 9천여 평이나 되는 넓은 교지, 아마 공립 고등학교에서 유일할 것으로 생각되는 잔디구장, 육지의 학교 교정에서는 볼 수 없는 워싱턴 야자, 카나리아 야자, 구론비나무 등 아열대 식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콘크리트 건축물인 교사(校舍)는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 어색한 느낌으로부터 비로소 이곳이 바로 학교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학교 교문을 통과하여 바로 볼 수 있는 '수산입국'이라는 휘호석과 어선의 돛을 본뜬 조형물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교실을 돌아보면서 학교에 대한 첫인상은 조금씩 변하였다. 해양생산과의 학년별 인원은 각각 8명, 7명, 14명, 양식과의 경우는 각각 10명, 17명, 23명으로 숫자로만 보면 소규모 학급운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으로 관찰한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이다. 왜냐

하면 해양생산과와 양식과의 소규모 인원은 오늘날 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김덕창 교장에 의하면, 최근 수산업이 힘들다는 사회 인식으로 수산업은 3D 업종의 하나가 되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3D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양생산과와 양식과에 진학





기에 이러한 해양·수산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냥 지나친다고 한다. 수산자료관에는 제주도 연안의 해양생물과 수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어구를 구비해 놓고 있다. 해양생물 사진, 해양생물 표본과 모형, 항로표지 모형, 뜸·침자, 낚시, 구명설비, 각종 기관 모형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여기에는 장어통발, 게통발, 문어단지, 삼치손끝줄낚시, 복어주낙 등 재미있는 어구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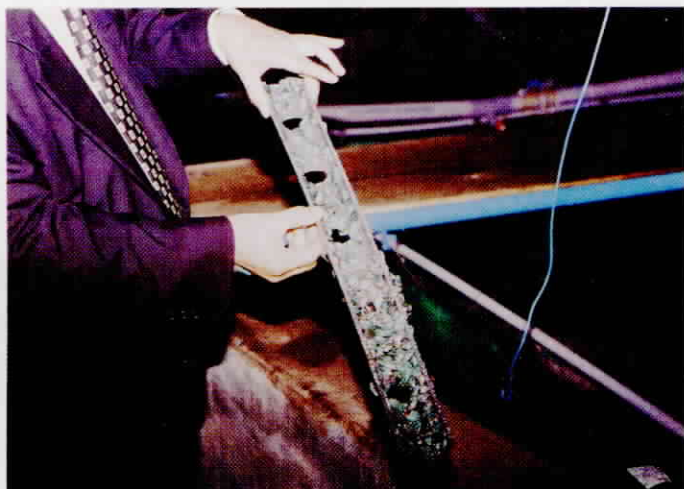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공업계열이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이 수산계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산수산고등학교의 해양생산과와 양식과의 소규모 인원은 우리 나라 수산업의 어두운 미래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수산자료관과 실습실에서는 그 동안 수산업국을 위하여 국가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가를 여실하게 엿볼 수 있었다. 수산자료관은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여 누구나 언제나 관람할 수 있는 열린 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관광객들은 여

니라 통조림 제조공정 모형, 선각구조 모형, 반동터빈 모형, 충터빈 모형, 수관 등이 진열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제주도 연안에서 채취한 검은색, 흰색 등 마치 곡식을 부수어 놓은 것 같은 모래를 구비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습실에는 어업실습실, 선박운용실습실, 항해실습실, 항해계기실습실, 식품가공실습실, 식품위생실습실, 발효저장실습실, 통신전자실습실, 데이터통신실습실, 냉동제빙실습실, 선박기관실습실, 선박전기실습실, 기계공작실습실, 제도실습실, 수산생물실습실, 수산생물표본실, 양식장 등이 있다. 실습장비 중 일부 선반과 선박동력장치에 '대통령

1949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수산업국의 기지 아래 바다를 눈발으로 일구는 근대화의 선봉장을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 등 도내 지도자를 양성해 내는 우뚝 선 학교로 자라 왔다.



성산수산고등학교

특별 하사금으로 구입'이라는 문구가 있어 담당 교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1983년에 기증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장비로 실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 15년이 지난 실습장비는 '수산입국'이라는 휘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최근에 새롭게 단장한 양식장에는 직경 20m인 수조가 8개 있었다. 수조에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넙치 2만 마리, 전복 5만 5천 마리가 해안에서 100m 떨어진 취수장에서 끌어올린 바닷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넙치 양식 수조의 바닥에는 넙치가 즐비하게 있었고, 일부 넙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해엄치고 있었다. 수조 귀퉁이로 가니까 조용하던 넙치가 그 곳으로 넘실거릴 정도로 몰렸다. 넙치가 사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몰려든다고 했다. 양식장의 넙치와 전복은 학교의 수입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실습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실습한다. 승선실습이 바로 학교 밖에서 하는 실습이다. 승선실습은 안전한 선박운항 방법을 익히고, 규칙적인 선상생활을 체득하며, 효율적인 실기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생산과, 동력기계과 2, 3학년 학생들은 제주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105톤 실습선을 이용하여 제주-거문도-부산-남해-완도 등 남해안 연안

을 일주하면서 선상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종합적인 실습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양생산과는 항해, 어업, 선박운용, 선박충돌예방, 해양오염방지, 해사법규 등에 관한 내용을 실습하고, 동력기계과는 열기관, 선박보조기계, 선박전기전자, 해양오염방지, 해사법규 등에 관한 내용을 실습한다. 이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해기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성산수산고등학교는 일본의 이시카와(石川)수산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격년으로 서로 방문하는 기회를 가진다. 일본에서 성산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454톤의 학교 실습선을 타고, 오징어잡이 실습의 일환으로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방문한다. 일본의 이시카와수산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이 연안승선실습을 하고, 2학년 때는 75일간 하와이로 원양승선실습을 하며, 3학년 때 20일간 원양승선실습의 일환으로 우리의 성산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성산수산고등학교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몇 명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이시카와수산고등학교를 방문한다. 따라서 이것은 학생들의 승선실습과는 전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일간 수산고등학교의 교육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로,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1949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수산입국의 기치 아래 바다를 눈밭으로 일구는 근대화의 선봉장을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9회) 등 도내 지도자를 양성해 내는 우뚝 선 학교로 자라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고되고 힘들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면 고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수산고등학교 졸업생이 3년간 무역선을 타면 1억여 원을 저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도 제주도민들에게는 유인가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중앙 수산업협동조합,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수산공제회, 수산 관련 회사 등에서 학교 학생의 52%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주도민들에게는 유인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동문인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조차도 하나나 둘밖에 없는 자녀를 자신처럼 '벧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산수산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및 진학 실태를 분석해 보면, 수산계열 졸업생 150명 중 진학자가 72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자는 44명으로 29.3%를 보이고 있다. 졸업생 중 기능사자격 취득자는 졸업생의 59.3%를 보이고 있다. 졸업생들은 우선적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며,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지못해 취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졸업생들은 해상 근무를 기피하고 육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며, 이것

이 안 되면 취업조차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수산·해양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산수산고등학교와 동고동락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모교 출신이며 부임과 동시에 모교에서 계속 근무한다. 하수용 선생님의 경우 1973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생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동문이어서 학교 행사는 지역의 잔치나 다름없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까지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가 되고 있는 현실은 교사들에게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산수산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수산·해양 관련 교과목을 현장 실기 위주의 내용으로 바꾸는 한편, 학생들의 요구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 예로 식품공업과의 경우 단순히 수산물 가공과 처리만 다루지 않고 농·축산물까지 넓혀서 교육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공업과의 한 교사는 학교업무가 끝난 후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광활한 대지를 갖추고 있고, 강의실과 실습실에 서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학교로서 성산수산고등학교는 외관상으로는 좋은 교육적 여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 보면, 1980년대에 들여 놓은 낡은 실습·실습 기자재, 학생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도 인근 일반계 고등학교에 여석이 있으면 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 성산수산고등학교의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수산고등학교의 일반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성산수산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시카와수산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한다. 일본이 최첨단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수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배출하는 수산고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짐작컨대, 일본이 지형적으로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원래 탐방 대상학교를 성산수산고등학교로 정한 이유는 우리 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수산·해양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종전에 이른바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외면당하던 수산고등학교가 이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인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남해에는 어선 몇 척이 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제 바다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원의 보고이다. 이 자원의 보고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갖고 정성껏 가꿀 때 진정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일본, 중국 등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어업협정 진행사항을 보면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확실해진다.

이제 바다를 살려야 할 때이다. 그러나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돌볼 것인가? 바다는 누가 돌보고 지킬 것인가? 



'98. 한·영 교육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본원은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학교개선 및 교원정책을 주제로 11월 12~13일, 양일(오전 9:30~오후 5:30)에 걸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98. 한·영 교육정책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지난 5월 이루어진 교육부 장관 일행의 영국 교육개혁 시찰의 후속 작업으로, 영국과의 교육분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학교교육의 질 개선 및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학교평가 실시 및 교원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학교평가 및 교원정책에 대한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뿐 아니라, 한국의 해당분야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교평가 및 교원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일에는 학교개선과 학교평가를 주제로 영국의 Ray Bolam(웨일즈대), Keith Anderson(교원연수원), Douglas Osler(영국왕실장학청)가 학교개선 및 장학활동에 대한 영국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그에 대해 각각 박부권 교수(동국대), 이인효 연구위원(교육개발원), 정오삼 교사(광주 각화중)가 토론을 할 예정이며, 한국의 학교평가 현황 및 과제

에 대해서는 임연기 연구위원(교육개발원)이 발표를, 김정현 교장(대전 유성고)이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다. 13일에는 교원정책을 주제로 영국 연사들이 영국의 교원양성 프로그램, 선발, 재교육, 평가, 학교장 재교육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박덕규 수석연구위원(교육개발원), 노종희 교수(한양대), 서정화 교수(홍익대)가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며, 한국의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이돈희 교수(서울대)와 손정호 교장(대구 동인초등학교)이 각각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전문 다언본기

www.kedi.re.kr→발간자료→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문의 사항 연락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연구본부

학교평가연구기획팀

TEL (02)3460-0347, 0319

'98.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대·사대 교수 세미나 개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98.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대·사대 교수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 세미나는 교육부 후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열린교육협회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1995년 이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열린교육의 정착 방향을 교사교육 차원에서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즉 열린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교사의 자질이므로 현재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를 짚어 보고 그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에서 기획되었다.

전국 교대·사대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세미나는 하루에 100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반복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발표 주제 및 발표자,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기조 강연: '열린교육의 특징에 비추어 본 현
교원양성 교육의 제 문제와 발전 방향'

발표자: 이돈희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 1: '교육과정 구성 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양성 교육'

발표자: 김재복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토론자: 최돈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정구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
원)

-주제 2: '수업방법, 평가방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

발표자: 박승재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배중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명희 (한양대학교 교수)

-주제 3: '외국의 교원양성 교육'

① '영국의 교원양성 교육'

발표자: Keith Anderson (The Board of Teacher

Training Agency)

② '미국의 교원양성 교육'

발표자: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문 다운로드

www.kedi.re.kr → 발간자료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문의 사항 연락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연구본부

학교평가연구기획팀

TEL (02)3460-0347, 0383, 0384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개선' 세미나 개최



본원 학교평가연구본부 교육공학연구팀은 10월 17일(토) 성남 서현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광명선 한국교육개발원장 대행을 비롯해 양천희 성남교육장, 권진수 교

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장 및 7명의 주제발표자와 100여 명의 교육행정가, 교사 등이 참여하여 인터넷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관해 한양대 허운나 교수가 '첨단 공학의 교육적 활용'이란 제목으로 기초강연을 하였으며, 본원의 심웅기 교육공학연구팀장이 '수업도구로서의 인터넷 : 그 잠재력과 한계'를, 공주교대 설양환 교수가 '교실 현장에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법'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여 인터넷 활용 수업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공유하였다. 또한 '전자수업안·학습지 활용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조배원 : 광주 주월초등학교), '인터넷 활용 사회과 수업모형'(이덕수 : 군산 옥구초등학교), '열린학습 정보실 운영사례'(박영주 : 부산 신곡초등학교) 등 일선 현장교사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서현초등학교의 권진우 교사가 직접 인터넷을 활용한 시범수업을 실시하여 인터넷 활용에 관한 인식을 높였다.

전문 다언변기

www.kedi.re.kr → 발간자료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문의 사항 연락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연구본부
교육공학연구팀
TEL (02)3460-0317, 0327

**‘한국 교육 비전 2020 :
교육전략’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30일(수)과 10월 1일(목) 양일간, 본원 제1회의실에서는 ‘한국 교육 비전 2020 : 교육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교육개혁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20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들의 개발을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추진된 ‘한국 교육 비전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교육전문가 28인이 참여한 이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6개의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주제 1 : 사교육비 해소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고형일 전남대 교수)
- 주제 2 : 학교 선택과 학교의 책무성 확립 (정기오 홍익대 교수)
- 주제 3 :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서정화 홍익대 교수)
- 주제 4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주제 5 :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

(김재웅 방송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주제 6 : 교육정책 추진전략

(안기성 고려대 교수)

전문 다운로드

www.kedi.re.kr → 발간자료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문의 사항 연락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교육계획연구팀

TEL (02)3460-0220

초등학교 영재 심화학습 운영방안 세미나

10월 14일(수) 오후 2시, 본원 제1회의실에서는 '초등학교 영재 심화학습 운영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초등학교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와 바람직한 운영방향'(조석희, 김홍원, 황인성 :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주제발표와 각 학교에서의 초등학교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사례(신구초등학교, 동해 천곡초등학교, 의정부중앙초등학교, 평택 송북초등학교) 발표가 있었다. 한편 본원 김영철 교육정책연구본부장, 서울대학교 박성익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강

충렬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전문 다운로드

www.kedi.re.kr → 발간자료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문의 사항 연락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영재교육연구팀

TEL (02)3460-0265

교원정책 토론회 개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정책의 과제—



9월 18일(금) 오전 1시 30분부터 본원 제1회의실에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교원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기주도적인 한국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200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제7차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지닌 교사 양성이 시급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보다 탄력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교원정책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사례와 외국의 교원정책 개혁사례를 함께 검토해 본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원정책 과제'(최희선 인천교육대학교 총장), '제7차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교원 인력구조 진단'(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교원 인력구조 개편사례'(고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기문서(양재고등학교 연구실장), 김종철(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황규호(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홍후조(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전문 다언변기

www.kedi.re.kr → 발간자료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문의 사항 연락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대학·교원정책연구팀

TEL (02)3460-0274, 0400

전국 시·도 교육통계 담당자 워크숍 개최

교육조사통계본부에서는 교육통계정보 DB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국 20,000여 개의 개별 학교 및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교육통계정보 DB를 구축하고 1998 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98년 말에는 교육통계정보 DB 시스템과 연계된 시도분산 DB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유일의 종합적인 교육통계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판단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5, 6일의 양일에 걸쳐 대전 흥인관광호텔에서 전국 시·도 교육통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 국가교육통계 발전방향, '98. 교육통계조사 평가, '98. 교육통계조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시도분산 DB 시범적용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통계정보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한편, 워크숍에는 본원의곽병선 원장직무대행과 정택희 교육조사통계본부장, 이승무 교육부 교육정보화 국장 및 김준형 교육행정전산통계과장이 참석하여 방안 탐색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다.

문의 사항 연락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교육통계DB팀

TEL (02)3460-0346, 0426

학점은행제 담당자 연수 실시

▶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담당자 연수

본원 학점은행운영본부는 학점은행제를 시범 운영중인 181개 교육훈련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20일(화)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회는 학점은행제의 배경과 운영개요(강무섭), 학점은행제 발전방향(교육부 이지현), 학습과목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최돈민), 학점인정 및 사후관리(백은순) 등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하였다.

▶ 학점은행제 담당 시·도 교육청 담당자 연수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점은행제 담당자 연수를 10월 27일(화) 본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11월부터의 학습자 등록에 대비하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접수방법에 대해 중점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운영방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한국 교육정책의 계획 및 관리 연수' 성공적으로 끝나쳐

본원 국제연구협력실에서는 1997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교육정책의 계획 및 관리 국제 연수'를 지난 9월 21~25일(5일간) 까지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UNESCO-PROAP과 공동으로 조직한 이 연수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몰디브, 미얀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5개국으로부터 총 6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각국의 고위 교육정책결정자 및 교육전문가들로서 한국이 축적해 온 교육적 경험과 노하우를 자국의 교육발전 모델로 삼아 21세기를 준비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우 진지하게 연수에 임하였다. 이 연수의 내용은 한국 교육정책의 계획 및 시행 과정의 제 국면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본원이 한국의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과 역할에 관한 특별 강연, EMIS 소프트웨어 시범, 통일 대비 교육정책의 전망에 관한 좌담회, 그리고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여하는 각급 기관 방문 외에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각 연수 참가자는 이 연수를 통해 한국의 교육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음에 감사하고, 자국의 교육 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UNESCO측의 연수전문가로 참가한 Mr. J. Sequeira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진 내용 및 구성에 힘입어 이 연수

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향후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디오피아 수상 방한 준비 사절단 내원



이디오피아의 장관급으로서 국제자원감사국장인 Mulu Ketsela 박사가 지난 10월 9일 본원을 방문하였다. Mulu 박사의 방문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10월 25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게 될 이디오피아 수상의 방한 준비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본원과 이디오피아 간의 교육적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특히 본원 국제연구협력실이 지난 6월 7~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수행한 아프리카 지역 6개국 대상 교육정책 국제연수의 성과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당시 5명의 연수단을 파견한 이디오피아는 한국의 교육·훈련 정책이 이디오피아의 교육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한국 교육 배우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온 바 있다.

KEDI 전자도서관 오픈

도서실운영팀에서는 '98년 9월 28일부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웹(WWW)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목록, 초록은 물론 본문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을 구축, 오픈하게 되었다.

현재, 도서실 소장자료의 목록 정보와 KEDI 연구보고서 초록 일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자료의 원문(full text)까지도 제공하게 된다.

*주요 탑재 내용

- 이용안내 : 전자도서관 및 KEDI 도서실 이용안내
- 자료검색 : KEDI 소장자료의 목록 검색, KEDI 연구보고서, 간행물 및 교과서 원문(full text) 검색('99년 계획)
- 전자도서관 관련 사이트 : 국내 여러 전자도서관 사이트 링크
- KOSSIC : 한국사회과학 정보자료 기관 협회 사이트 링크
- Z39.50 검색 서버 검색 : 국제 검색 표준 프로토콜(Z39.50)을 사용하는 국내외 도서관 연결

한국교육개발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주소 :

<http://elfs.kedi.re.kr> 또는

KEDI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에서 '전자도서관' 클릭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중간시연회 실시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에서 연구 개발(3차년도)하고, 교육부 평생학습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의 중간시연회를 9월 30일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 회의실에서 관련 연구진과 전산용역을 맡은 (주)거능정보통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시연 내용은 금년에 추가 제작되는 2학년 2학기 영어, 수학, 물리, 생물 및 3학년 1학기 영어독해, 수학, 화학, 지학 과목의 전자교과서와 음성강의를 비롯하여 새로 선보이는 국어, 영어, 수학, 국사 문제은행을 중심으로 한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은행은 처음으로 구성된 부분으로 온라인에서 답안입력과 채점 및 문제해설을 볼 수 있으며, 프린트와 다운로드를 통한 오프라인에서도 문제풀기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한편 질의응답 기능 및 상담 등을 통해 사용자, 관리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들간의 활

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였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모든 내용은 CD Title에 담아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온라인에서와 동일한 환경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된 전산자료는 기존의 인터넷 (<http://achs.kedi.re.kr>)과 에듀넷, 하이텔 (go achs)을 통해 1999년 1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제18회 방통고 학예경연대회 개최



지난 9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부산교육원에서 제18회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방통고 재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고취와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예경연대회는 국어, 수학, 영어 등의 학력 경시와 운문, 산문, 서예 실력을 겨루는 예능 경연,

청취록 경연 등 5개 부문에 걸쳐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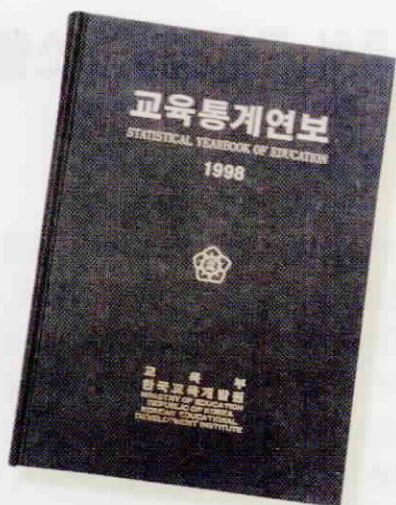
경연 대회 결과, 학력부문에 광주고 부설 방통고 오승록, 운문부문에 대구고 부설 방통고 최기순, 산문부문에 수성고 부설 방통고 박주호, 서예부문에는 원주고 부설 방통고 박문희 학생이 각각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상인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방송강의 우수청취록상 등에서는 64명이 수상했고, 동래고 부설 방통고 박정철이 특별상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도 교육(과학) 연구원장 협의회 개최

11월 26일~27일, 본원 제1회의실에서는 교육부 관계관, 16개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교육연구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활성화 방안, 연구원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전국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EDI 발간물

'98년도 교육통계연보 발간



본원 교육조사통계본부에서는 지난 9월 '98년도 교육통계연보 1,800부(국배판)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였다.

교육통계연보는 교육부문의 국가기본통계자료로서 1965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행정 및 재정, 사회교육, 사설학원, 학생체력 현황 등 336 항목의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대학, 공공도서관,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한국

공관과 주요 공공단체·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므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구입을 원하는 일반 수요자들을 위하여 정부간행물 판매서점에서 복제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교육통계연보와 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들은 본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Web)을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210.122.126.3>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edire.kr>)에서 '교육통계' 클릭

KEDI 인물동정

● 본원 박병선 원장대행은 10월 19일 '교육정책심의회' 교육과정·장학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학교평가연구본부의 이인효 연구위원, 교육정책연구본부 백성준 연구위원은 '교육정책심의회'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0월 10일 발족된 '교육정책심의회'(구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교육과정 및 장학, 지방교육행정 및 교원정책, 평생 및 직업교육, 대학교육, 교육재정, 교육정보화위원회 등 7개 분과위와 여성교육특별분과위를 두며 각 분과위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본원 교육조사통계본부 박재윤 연구위원과

유용식 연구원은 9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사립학교법개정자문위원회'와 '사립학교법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다.

● 최상근 연구기획조정팀장, 강태중 학교혁신연구팀장, 백성준 교육재정·시설연구팀장이 98년 9월 14일부터 99년 1월 13일까지 4개월간 교육부 '제2의 교육입국기획단' 점임근무를 하게 되었다.

'제2의 교육입국기획단'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대통령의 '제2의 건국' 천명에 따른 교육부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 교육조사통계본부 김홍주 연구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전문가 소위 중 교육·문화·노동분야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규제를 50% 이상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금융, 산업·건설, 행정·복지, 교육·문화·노동, 농림·해양, 환경·정보 등의 6소위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24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국제연구협력실 서해애 연구원이 한국을 대표하여 1998~1999년도 유네스코 장학금 수여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서 연구원은 1998년 8월부터 1999년 2월까지 6개월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학-기술 교사 연수 국제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의 수행을 위해 태국 및 필리핀을 방문, 현장연구를 할 계획이다.

- 본원 국제연구협력실에서 근무했던 최수향 박사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사무국 '취학전 아동교육과' 과장에 임명되었다.

최박사는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제외하고 유엔 및 관련 전문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중 여성으로는 최고위급 직원이며, 이로써 유네스코 사무국에 진출한 한국인은 7명으로 늘어났다.

- 교육연찬자료실 박덕규 실장이 98년 8월 1일부터 99년 7월 31일까지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127호, 1996. 7. 26)에 의거해 신설 대학에 대한 설립 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 등 대학 설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김영철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이 8월 22일부터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구

성, 운영되고 있다.

- 교육정책연구본부 김영화 연구위원이 ILO 초청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출국하였다.

98년 6월 1일 ~ 99년 5월 31일까지 ILO(국제노동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고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산업사회에서의 노동시장 개혁과 새로운 형태의 직업 세계, 고용 및 인간자원 개발'), 정책개발, 국제협력 업무 파악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원에서는 교육개발 연구 결과를 교육기관 및
교육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 보급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원 기관지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내 용

- 1) 칼럼 명: 교육연구·동향/현장투고
칼럼성격: 한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 새로운 교육에 관한 연구나
알리고 싶은 연구동향.
- 2) 칼럼 명: 발언대/말지만 가야 할 길
칼럼성격: 현장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들.

□ 기 한 : 수시 접수

□ 제출처: (우) 137-791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 홍보·출판팀

(Tel: 3460-0233, 0234 Fax: 577-5117)

하이텔 ID: kedi1225, 천리안 ID: kedipr

E-mail: keditor@ns.kedi.re.kr

• 우편으로 보낼 경우 원고가 수록된 디스켓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 제출된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고,
게재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 한지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고를 보낼 때에는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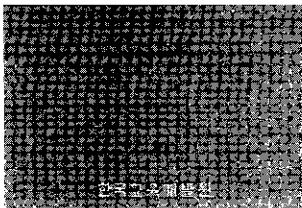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 교육개혁 · 혁신 관련 보고서 •

-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 활성화 방안(CR 98-6)
- 학교 개혁의 실현을 위한 전략 탐색(CR 98-10)
- 학교현장의 교육혁신 지원 연구(CR 97-4-1)
-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 고찰(RR 97-13)
- 학교현장의 교육 혁신 사례집 (I) (RR 96-10-1)
- 교육개혁의 저해요인 분석 연구(RR 96-13)
- 교육개혁 과제 현장 적용 지원 연구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RR 96-15)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 활성화 방안

* 이 연구(CR98-6)는 최상근, 이희수, 백성준, 황인성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 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현행 교육개혁 추진상의 문제점과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여 현장 중심 교육개혁 추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방 후 현재까지 한국 교육의 역사는 교육개혁의 역사였다고 할 만큼 역대 정권은 매번 교육개혁을 시도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조선교육심의회」, 가까운 제5공화국 시절에는 「교육개혁심의회」, 제6공화국 시절에는 「교육정책자문회의」, 문민정부하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교육개혁 방안을 입안·심의하였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개혁 방안이 입안되고 심의되는 가운데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방안이 수립되고, 다듬어지고 추진되어 현안 교육문제 해결은 물론 장래 교육 변화에 한 발

앞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대비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은 크게 미군정기의 교육개혁, 5·16 군사 정변과 교육개혁, 신군부에 의한 7·30 교육개혁,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 활동, 문민정부하의 교육개혁위원회 활동으로 구분된다. 보다 크게는 군정하의 교육개혁과 민정하의 교육개혁으로도 양분된다. 그러나 군정하에서든 민정하에서든 관계없이 교육개혁이 정치적 변화, 정권 교체와 밀접한 관계하에 이루어졌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교육개혁이 교육의 필요 못지않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때로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때로는 충분한 연구와 교육 현장의 요구 수렴 없이 긴급조치 형태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 도구적 가치, 정치적 가치가 더 강조됨으로써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기보다는 일회성, 선연적 행사로 끝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우리 나라 주요 교육개혁사를 개관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혁이 주로 정권 교체 또는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서 이루어진 관계로 교육개혁이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논리에 따라 교육개혁이 입안·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개혁이 긴급조치 형태로 성급하게 추진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연구결과의 뒷받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충분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개혁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 교사들이 소외되어 왔다는 점이다. 입으로는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라고 하면서도 교육개혁의 과정에 교사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교사들은 교육개혁의 대상이었지 개혁의 주체로 전면적 부각된 경우가 거의 없다. 넷째, 하향식 교육개혁 추진이다. 교육개혁은 긴급조

치 형태로 또는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공문에 의하여 추진된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현장과 유리된 교육개혁, 현장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교육개혁이라는 비판이 그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신교육체제의 비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이다. 또한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더불어 살 줄 아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도덕적 인간이며, 지식·정보와 기술을 창출하는 창조적 인간이며, 국제화·개방화·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열려 있는 진취적인 한국인이며,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일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진행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1994. 2. 5~1998. 2. 24) 교육개혁안의 추진 경과를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 간략하게 정리·제시해 보면, 1994년에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4차례에 걸쳐 개혁안을 성안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제1차 교육개혁 방안은 1995년 5월 31일, 제2차 교육개혁 방안은 1996년 2월 9일, 제3차 교육개혁 방안은 1996년 8월 20일, 제4차 교육개혁 방안은 1997년 6월 2일에 발표되었다. 각각의 교육개혁 방안은 제1차 교육개혁안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장선상에서 보완 및 상세화된 것이었다. 가장 최근에 추진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활동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주체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둘째,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문제이다. 교육정책이 정부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만을 노리게 되어 현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지시와 감독 위주의 관리 교육행정의 문제이다. 넷째,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평가에 대한 문제이다. 평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보다 우

려되는 문제는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다. 평가를 통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반성적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 강조점이 더 두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오히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평가가 통제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위로부터'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일제히 실시하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교육개혁 활동의 중심축으로 하고, 현장으로부터의 움직임이 활발하도록 조성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입안할 때부터 현장을 배려하고, 현장 교사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장 중심 교육개혁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급관청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위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며, 현장 중심 교육개혁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교원들에 대한 의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중심 교육개혁 활성화 방안으로, 가상 교육개혁 포럼(cyber education reform forum) 운영, 현장 중심 교육개혁 방안 공모전 개최, 교원 중심 교육개혁 추진 기구 설립·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단위학교 운영 책임자 연수 강화, 교사들의 교육개혁을 위한 시간 확보,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의 구축, 교내 자율연수 체제의 구축·운영, 학부모들의 참여 유도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개혁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교 개혁의 실현을 위한 전략 탐색

* 이 연구(CR98-10)는 성일재, 이종태, 김태중, 류방란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학교 개혁의 실현을 위한 전략 탐색

이 연구는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994년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겨냥하여 제안한 여러 교육개혁

안들이 당초 의도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은 새로운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새로운 전략의 탐색을 위하여 취한 방법은 교육개혁 성공 사례들을 관찰, 분석하는 것이었다. 즉, 교육개혁 추진 이후에도 그 변화가 지지부진한 대부분의 학교들과는 달리, 비교적 성공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낸 학교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혁신의 성공 촉진 요인과 분석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들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고려의 대상이 된 개혁 과제들은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수업 방식의 혁신(열린 교육),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교

육활동,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 학교 운영 혁신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 조직 개편, 그리고 미래 정보화 사회의 적응을 위한 정보화 교육 등이다. 과제별로 대개 두세 개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방문과 면담, 관찰, 그리고 관련된 문헌 등을 통하여 혁신의 도입과 추진 과정, 관련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선정된 열여덟 사례별 혁신과정을 기술하고 각 사례가 시사하는 성공요인과 조건들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혁신 사례들을 분석하여 학교 구성원, 제도와 정책, 물리적 환경과 여건, 사회적 분위기의 수준으로 나누어 현장의 변화를 촉진 혹은 저해하는 요인과 조건을 추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수준의 요인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중심의 교육관을 지닌 학교장과 교사의 혁신적 의식과 태도가 학교 현장 변화의 관건이다. 그 밖의 요인들은 이들이 주도하는 혁신을 지원하고 고무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그 자체로서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새로운 전략의 탐색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는 한편, 이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된 목표로 삼았던 개혁 방안을 재검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현장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방향은 혁신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인적 요인, 즉 '교원 집단'의 혁신 의지를 키우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안은 교원의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 학교 수준에서 개혁 정서의 확산과 개혁 추진을 위한 기제 조성에 관한 것, 지역 사회의 지원과 감독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 교육 운영 체제 상 학교 혁신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각각의 영역에서 전략 방안이 고려해야 할 요소나 방향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안들을 몇 개씩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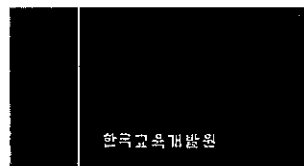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으로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교육개혁 정책은 확일적이고 화급한 개혁의 추진을 지양하고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학교 교육 자체가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 개혁 과정 고찰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 이 연구(RR97-13)는 이종태, 이화진, 류방란, 오진석, 김태중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이 연구는 학교의 자율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과연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학교의 자율성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그것이 교육개혁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여타의 교육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바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여러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특히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규제 완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방안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서 과연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학교의 자율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가 본연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 개념에 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자율성 논의를 당위적 요청과 사실의 수준에서 고찰하였다. 교육이 다른 어떤 세력이나 논리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고유의 논리와 가치체계를 지닌다는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회 제도로서의 교육은 경제나 정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때로는 자체의 논리나 가치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고유의 논리와 가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근대 서구의 시민 사회에서는 교육의 자율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자치가 성립되었다. 우리 나라도 근대교육이 성립된 이래 정교분리의 원칙이 도입되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은 이론적으로 교육의 자율성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본분은 교육에 있으며, 교육은 고유의 논리와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외부의 통제를 줄이고 가능한 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당위적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는 간단치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학교와 외부, 특히 상급기관과의 관계와 학교 내 구성

집단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대외적으로 학교를 강요하는 외부의 간섭과 규제가 제거되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학교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교육규제 완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방안은 바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내외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차례로 이 두 과제가 어떤 취지에서 입안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논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교육규제 완화 방안은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를 얽어매고 있던 규제를 풀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을 조사하였다. 상급기관의 규제가 전달되는 통로인 공문조사를 통하여 상급기관이 학교에 가하는 규제의 양과 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한 해에 학교에 접수되는 전체 공문수, 발송처별 공문수, 이첩 공문수, 성격별 공문수 등을 조사하였다. 한 해 동안 학교에서는 2천여 건 내외의 공문을 접수한다. 그중 80%는 상급기관에서 발송한 것이며, 다시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의 80% 이상은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이첩공문이다.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보고 요구, 지시, 알림, 협조 등으로 분류해 본 결과, 학교에 업무부담이나 규제로 작용하는 보고 요구나 지시 형식의 공문은 약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에 부담을 주는 공문은 그보다 많다. 알림이나 협조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상 지시를 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공문 처리로 인해 져야 하는 업무부담과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몇몇 학교의 새로운 시도도 예시하였다.

공문을 통한 행정명령은 처리하여야 할 업무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규제로서도 작용한다. 공문에 담긴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 학생 생활지도, 교육행·재정, 외부의 지시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규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이러한 예시를 통하여 상급기관은 학교가 처한 사정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지시하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지시한 것을 문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교육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과 그 성과를 알아보았다. 교육부에서는 규제법률근거주의에 입각하여 교육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한편으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행정명령과 법령에 의한 규제를 심의하고, 이를 폐지·완화하였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설치되어 같은 일을 추진한 결과 96년도에 기존 행정명령의 약 50% 정도가 폐지·완화되었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질문지 조사 실시 결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80%가 교육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캐기 위하여 교육규제 완화의 추진 방식과 완화된 규제의 성격을 따져 보았다. 교육규제 완화 정책은 그 목표가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방식은 규제적이었으며, 완화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령에 의한 규제로서 실제로 교사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관행에 의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완화한 교육규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니 학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제들이 많았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관행에 의한 규제를 포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교육자치를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내 권력 관계를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혁 방안 중의 하나이다. 획기적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은 특히 종래 학교장이 독점한 학교운영의 권한을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공유하게 됨에 따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단 간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에서 비롯된다. 여러 차례 토론과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규정되었으나, 사실상 학교 단위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시행안 마련, 시범 운영, 법률·조례·규정 등의 제정 과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와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 확산되었다. 시행 이후에도 논란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간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학교운영 가치체계인 권위주의와 새로이 제시된 민주주의 간의 갈등을 가로축으로 하고 의사결정과정 참여 정도와 범위를 둘러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갈등을 세로축으로 하여, 여기서 생기는 네 가지 유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모형으로 구안하여 보았다. 이들은 각각 '민주-전문' 모형, '민주-비전문' 모형, '비민주-전문' 모형, '비민주-비전문' 모형으로 명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비교적 부합되는 것은 앞의 두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첫째 모형은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참여가 미흡하며 둘째 모형은 자칫 학부모의 참여가 과도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모형은 전통적인 교장 주도의 학교 운영 유형으로서 학부모나 교사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이다. 넷째 모형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육성회장과 같은 특정 인


사가 학교 운영에 큰 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나 오늘날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각 모형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본 바, 아직까지 실제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종래 경직된 권위주의적 학교 운영과 소극적 참여라는 두터운 벽에 의해 강한 저항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에 의한 단위 학교의 자율경영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이후 나타난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학교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의 자율성이 신장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3 정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반면,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여 권리와 책임을 나누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교사집단은 그들의 전문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학부모들은 수요자로서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들은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를 원한다. 미흡하기는 하나 지역인사의 학교운영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장과 교감 집단은 상대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기능과 역할의 강화에 방어적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중심적인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학교장의 의식 전환, 학부모의 참여의식 신장, 교사의 냉소주의적 태도 등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의 골격하에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교사와 학부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회의과정과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교육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적 결정 권한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구성원들의 연수를 강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자생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협의체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개혁 방안의 추진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제도의 미비와 함께 개혁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소극적인 의식과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으로는 개혁 방안이 중앙의 주도에 의해 획일적이며 성급하게 추진됨으로써 정작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 집단이 객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개혁 방안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교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개혁은, '늦더라도 착실하게', 현장에서 스스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근원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교육통계 체제

박 재 윤



- 상원대학교 법경제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 본위 연구위원
- 『학교교육법 편찬』, 『국가교육통계의 작성과 관리』

I 서론

우리 나라의 교육통계업무는 매년 전국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기본통계조사와 그 결과를 펴낸 교육통계연보, 그리고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교육통계편람의 발간 등이 중요 내용이다.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 내용,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교육부 훈령이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

교육통계업무는 1988년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하다가 1989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인수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국가 교육통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토록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판 교육통계연보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서 9월에 발간, 배포되었으며 금년 조사 실시에 관련된 문제 분석, 프로그램의 재조정, '99년도 조사 계획의 재검토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통계자료는 과학적 연구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선진국들은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보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교육통계 체제의 실상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교육통계업무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교육통계 체제

가. 배경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지정통계제도를 운영한다(통계법, 1947년 법률 제18호). 지정통계는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중 국가의 기본정책 결정에 필요한 통계로 국민생활에 중요한 통계이며 '총무청장관'이 지정하고, 그 취지를 공시한다(제2조).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규칙(부전령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해서는 사전에 ‘총무청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법제3조) 지정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고(법제5조), 위반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법제19조).

일본의 통계기구는 분산형 통계기구로 되어 있으며, 국가의 행정기구가 여러 소관 행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총무청 통계국 통계조사부는 국세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각 성청은 그들의 소관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사를 실시한다. 분산형 통계기구에 있어서는 분산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계의 종합적인 조정은 총무청통계국의 통계기준부가 하고 있다.

지정통계 이외의 조사로 각 성청이 행하는 통계보고(승인조사통계)에 있어서는 통계보고조정법에 의하여 통계보고 상호의 조사내용 중복을 배제하고 국민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그 통계기술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조사를 승인하게 되어 있다.

교육관련 지정 통계로는 학교기본조사, 학교보건통계조사, 학교교원통계조사, 사회교육조사의 4종이 있고 이외에 지정통계가 아닌 통계가 다수 있다.

학교기본조사는 지정통계 제13호로 문부성령(文部省令)으로 학교기본조사규칙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학교보건통계조사는 지정통계 제15호로 학교보건통계조사규칙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교교원통계조사는 지정통계 제62호로 학교교원통계조사규칙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조사는 지정통계 제83호로 사회교육조사규칙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통계업무는 문부성(文部省)이 담당하고 있다. 문부성은 문부대신, 정무차관, 사무차관 아래에 대신관방, 생애학습국, 초등·중등교육국, 교육조성국, 고등교육국, 학술국제국, 체육국과 문화청장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부성 정원은 지방직원까지 합하여 총 138,130명으로 문부본성내 부부국(文部本省内部部局) 정원은 1,313명, 문화청내부부국 정원은 20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

부성에서 교육조사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대신관방 조사통계기획과이다. 조사통계기획과(調査統計企劃課)는 일본의 교육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문부성의 문교시책에 관해서 조사하고 기획하며 문부성의 소장사무의 운영에 관해서 평가하는 일, 문부성의 소장사무에 관계되는 조사통계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해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하게 하는 일, 문부성의 조사통계에 관해서 종합적인 조정을 기획하고 연차계획을 입안하며 조정하는 일, 외국의 교육사정에 관해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하게 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문부성조직령 제7조 제17호 내지 20호).

지방 교육통계조사 업무는 도도부현이 수행하는데, 예컨대 동경도의 경우는 동경도교육위원회 총무부 교육정보과에서 수행한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밑에 총무부, 학무부, 시설부, 인사부, 복리후생부, 지도부, 생애학습부, 체육부 등이 있는데 교육정보과는 교육행정에 관한 조사통계 및 학사통계의 기획 및 실시, 교육의 광보, 광청 및 교육의 광보출판물에 관한 일, 교육청에 있어서 업무자동화의 기획 및 추진과 각 업무자동화 시스템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나. 학교기본조사

학교기본조사는 학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사하여 학교교육행정상의 기초자료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학교, 부속도서관, 졸업자 및 불취학 학령아동생도에 관하여 다음 구분 및 시기에 의하여 실시한다(학교기본조사규칙 제4조).

- 학교 조사
- 학교 통신교육 조사
- 불취학 학령아동생도 조사
- 학교시설 조사
- 학교경비 조사 : 전회계연도간
- 부속도서관 조사 : 문부대신이 지정하는 년의 5월 1일 현재
- 졸업후의 상황 조사 : 전학년도간의 졸업자(고등학교 및 맹학교, 농학교 및 양호학교의 고등부에 있어서는, 전학년 전의 졸업제로 상급 학교에 입학지원한

것도 포함)에 관하여 매년 5월 1일 현재

각 조사별 조사사항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5조).

학교 조사는 소학교를 위시하여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의 모든 학교를 조사범위로 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 통신 교육 조사는 통신제 과정을 설치한 고등학교만을 조사범위로 하고 있다.

졸업후 상황 조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맹학교 등을 조사 범위로 하고 있고 학교시설 조사는 사립의 소학교, 중학교 등과 공립의 전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등을 조사 범위로 하고 있다.

학교 조사는 모든 학교장이 제출해야 하며, 학교통신교육 조사는 통신제 과정을 설치한 고등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불취학 학령아동생도 조사는 시정촌교육위원회가 보고 의무자이며 학교시설 조사는 다소 복잡하여 국립학교는 해당학교의 장이 보고하고 공립대학은 해당 대학을 설치한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다.

학교조사는 시정촌립 및 사립 소학교, 중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시정촌장에게 자료를 제출한다. 시정촌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도부현지사는 이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도부현지사는 공립 및 사립고등학교의 장, 도도부현의 소학교, 중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문부대신이 직접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대학 및 고등학교의 장, 국립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 등이다(단, 오키나와현에 있어서는,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각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및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담당한다).

학교 통신교육 조사결과는 통신제 과정을 설치한 고등학교의 장이 도도부현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도도부현지사가 다시 이 자료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불취학 학령아동학생수 조사표는 시정촌 교육위

원회에서 작성하여 이를 시정촌장에게 제출하면, 시정촌장은 자료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한다. 도도부현지사는 이 자료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하여 문부대신이 종합적으로 집계하게 된다.

학교시설 조사표의 제출은 다소 복잡하여 시정촌립의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 소학교, 중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등은 시정촌장에게, 시정촌장은 이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도부현지사는 문부대신에게 자료를 제출한다. 도도부현지사는 도도부현립의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시설 조사표를 제출받아 이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문부대신이 직접 제출받는 경우는 문부대신 관할의 학교법인과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양호학교 등이다.

학교경비 조사표는 모두 문부대신이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양호학교(대학(학부)의 부속학교를 제외함)의 장, 지방공동단체의 장, 방송대학학원 등이 학교경비 조사표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졸업후 상황 조사는 시정촌장, 도도부현지사가 중간 집계자가 되는데 시정촌립 및 사립 중학교의 장이 시정촌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시정촌장은 이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도부현지사는 이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한편 도도부현지사는 공립 및 사립의 고등학교장, 도도부현립 중학교의 장, 도도부현립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중학부 또는 고등부를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직접 졸업후 상황조사표를 제출받아 이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문부대신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장, 국립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 국립의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의 장(중학부 또는 고등부를 설치한 학교의 장)으로부터 졸업후 상황조사표를 직접 제출받고 있다.

다. 전문통계조사

일본 문부성이 실시하는 전문통계조사는 사회교육 조사와 학교교원 통계조사, 학교보건 통계조사가 있는데, 이들 조사는 조사통계기획과의 전문조사계가 담당하고 있다.

(1) 사회교육 조사

사회교육 조사는 지정통계 제84호로 실시되는 조사로, 사회교육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사회교육행정상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된다. 조사사항은 사회교육 관계직원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 사업의 실시 상황, 공민관 등의 시설 상황과 설비 상황 그리고 사업실시 상황 및 이용 상황, 프론티어 활동 상황 등이며, 조사대상은 도도부현과 시정촌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이며 이 조사는 매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사회교육에 관한 조사는 지정통계로서의 사회교육조사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승인통계조사와 계출통계조사도 있으며 이들이 통합적으로 정리되어 보고서로 간행되고 있다. 먼저, 지정통계조사 제84호로 실시되는 사회교육 조사에는 사회교육행정조사, 공민관 조사, 도서관 조사, 청소년교육시설조사, 부인교육시설 조사, 사회체육시설 조사가 있고, 생애학습 사회교육시설 등 조사(승인통계조사)로 박물관유사시설 조사, 민간체육시설 조사, 문화회관 조사, 생애학습 사회교육관계법인 조사가 있다. 그리고 계출통계조사로는 문화회관 조사와 생애학습관련사업 조사가 있다.

사회교육행정 조사는 시정촌교육위원회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조사표를 제출하고 도도부현지사는 이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공민관 조사는 사립 공민관의 장은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 조사표를 제출하고 시정촌립의 공민관 및 공민관유사시설의 장은 시정촌교육위원회에 조사표를 제출하면 시정촌교육위원회는 이를 도도부현교육위원회로, 도도부현교육위원회는 이를 다시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도서관 조사는 시정촌립의 도서관장은 시정촌교육위원회로 조사표를 제출하면 이것이 도도부현교육위원회로 전달되고, 도도부현립의 도서관장은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 직접 조사표를 제출한다. 도도부현교육위원회는 이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2) 학교교원 통계조사

학교교원 통계조사는 지정통계 제62호이며 학교

의 교원구성 및 교원의 개인속성, 직무수행 상태 및 이동상황 등을 조사하여 교원에 관한 제시책의 검토 및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사항은 교원의 성별, 연령별, 직명별, 학력, 근무연수, 교원 면허장의 종류, 주담당 수업 시수, 급료월액, 채용·진입·이직 등이며, 조사 대상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맹·농·양호학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 대학입시센터의 소속 교원 등이다.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며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조사기준일은 10월 1일 현재로 하고 있다.

(3) 학교보건 통계조사

학교보건 통계조사는 지정통계 제15호이며 아동, 생도 및 유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밝힘으로써 학교보건행정상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된다. 조사사항은 아동 등의 발육 상태, 신장, 체중, 좌고(앉은 키), 아동 등의 건강 상태, 영양상태, 시력, 청력, 목(耳)·이비인두(耳鼻咽喉)·치(齒)·구강 등의 질병·이상(異常)의 유무 등이다.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이며 조사는 매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학교보건 통계의 조사 계통을 보면 문부대신이 도도부현지사를 통하여 조사실시 학교의 장에게 필요 부수의 조사표 등을 배부하고, 조사실시 학교의 장은, 도도부현지사가 정한 기일까지 조사표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도부현지사는 제출된 조사표를 정리, 심사하여 문부대신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주요 집계사항은 아동 등의 신체측치의 전국 및 도도부현별 평균치 및 분산도, 아동 등의 신장, 체중 및 좌고의 상관관계, 아동 등의 체격의 유형, 아동 등의 질병과 이상피환율 등이다.

이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은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추출 순서를 보면 각 학교 종류마다 아동 생도수의 누적화를 구하고, 그 누적화를 가지고 조사 실시 학교를 추출하며, 추출된 학교로부터 계통추출에 의하여 아동 생도를 추출한다. 이렇게 하여 표본 추출된 학교와 학급, 그리고 조사 대상을

보면 총 9,165개교에서 발육 상태를 조사할 표본은 695,000명, 건강상태를 조사할 표본은 1,213,064명이 추출되어 추출률은 각각 3.9%와 6.8%로 나타났다.

라. 교육행·재정 관련 조사

교육행·재정 관련 조사로는 지방교육비 조사(계출통계), 지방교육행정 조사(계출통계), 자녀학습비조사(승인통계), 사립학교 재무상황 조사(승인통계)가 있는데 이들 조사는 조사통계기획과 교육행·재정조사계가 담당한다.

(1) 지방교육비 조사

지방교육비 조사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교육행정을 위하여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지출된 경비 및 수업료 등의 수입의 실태를 밝힘으로써, 국가와 지방을 통한 교육 제시책을 검토,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출항목별, 재원별 학교교육비
2. 지출항목별, 재원별 사회교육비
3. 지출항목별, 재원별 교육행정비
4. 교육시설별, 과목별 수입액

조사대상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특별구 및 시정촌의 조합을 포함)의 교육위원회 및 공립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맹·농·양호학교, 고등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고등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로 조사 실시 기간은 매회계년도간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의 계통은 다음과 같다.

문부대신—도도부현교육위원회—도도부현립학교
시정촌교육위원회—시정촌립학교

시정촌립학교에 있어서는, 학교교육비조사의 PTA 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에 관계된 사항으로 한다. 지방교육비 조사의 조사표 배부 및 제출계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부대신은 조사계통에 따라 조사표를 배부한다.
- 도도부현립학교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시정촌립학교는 시정촌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도도부현교육위원회 및 시

정촌교육위원회에 조사표를 제출한다.

- 시정촌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조사표를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 도도부현교육위원회는 조사표 및 집계표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 지방교육비 조사의 집계사항 및 집계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집계사항

○ 전국 집계

학교종류별, 지출항목별, 재원별 학교교육비
교육시설별, 과목별 수입액

○ 도도부현별 집계

학교종류별, 지출항목별, 재원별 학교교육비
사회교육시설별, 지출항목별, 재원별 사회교육비,
지출항목별, 재원별 교육행정비

- ②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도도부현교육위원회부터 제출된 조사표 및 집계표를 문부성이 집계한다. 조사 결과는 문부대신이 지방교육비조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한다.

(2) 지방교육행정 조사

지방교육행정 조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활동 상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유형, 교육위원의 성별, 연령, 직업, 이력, 거주 및 보수, 교육장의 성별, 연령, 이력 및 급여, 사무국의 본부직원수, 교육위원회의 회의 상황, 본부직원의 인사교류, 사무국의 조직 등이다. 조사대상은 도도부현과 시정촌(특별구, 교육사무조합 및 공동설치교육위원회를 포함함) 교육위원회이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이며 조사실시기간은 매년 5월 1일 현재이다.

(3) 자녀학습비 조사

자녀학습비 조사는 승인통계이다. 이 조사는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교육 및 학교외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파악하여 교육비에 관한 국가의 제시책을 검토하고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되고 있다. 조사사항은 보호자 조사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비와 학교외 교육비이며 학교조

사에 있어서는 학교교육비 등이다. 조사대상은 공립의 유치원, 소학교, 고등학교(전일제), 사립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전일제)의 유아, 아동, 생도이다. 조사방법은 샘플조사이며 조사실시 기간은 2년 주기로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4) 사립학교의 재무상황에 관한 조사

이 조사는 사립학교의 수입 및 지출의 실태 및 학교법인의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밝힘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공동단체가 사립학교에 관한 제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정비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사항은 학교의 과목별(科目別) 수입액, 지출액, 학교법인의 자산, 부채, 기본금, 소비수치차액 등이다. 조사대상은 학교법인,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를 설치하는 기타 법인 및 개인이다. 조사실시 기간은 매 회계 연도간 및 매년 3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다.

III 우리 나라 교육통계 체제 개발을 위한 시사점

첫째, 일본의 경우는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지정통계(학교기본조사, 학교교원통계조사, 학교보건 통계조사, 사회교육 조사)에 관해서는 문부성령(文部省令)을 통하여 각 조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 것이 이미 수십 년이나 된다. ‘학교기본조사규칙’, ‘학교보건통계조사규칙’, ‘사회교육조사규칙’, ‘학교교원통계조사규칙’ 등이 그것이다. 이런 조사 규칙은 문부성령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전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 내용에 관하여 알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법전을 통하여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조사 시기, 조사표의 제출 계통, 조사 내용, 조사의 범위 등이 일목요연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법전을 통하여 문부성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그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다.

둘째, 문부성 대신관방 조사통계기획과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공, 분석, 보급하는 일은 국립교육회관이라는 특수법인이 하고 있다. 조사통계기획과는 학교기본조사 외에 ‘전문조사’와 ‘교육행·재정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를 담당한다. 전문조사계는 사회교육 조사, 학교교원 통계조사, 학교보건 통계조사를 분장하고 있고, 교육행재정조사계는 지방교육비 조사, 지방교육행정 조사, 자녀학습비조사, 사립학교 재무상황 조사를 분장하고 있다. 이 조사들은 서로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해에 모든 조사가 일시에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실제 조사되는 것은 이들 중의 일부분이며 다른 연도에는 그 동안 실시되었던 각 조사의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기도 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다음 조사에 대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이 문부성이 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통계조사를 통해서 생산되는 통계자료의 대부분이 교육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긴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이 통계의 최대의 소비자는 정부(문부성)인 것이다. 다만 수집된 자료를 분석, 가공하고 보급하는 등의 기술적, 전문적 업무는 국립교육회관이라는 별도 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바, 한국교육개발원은 법인이므로 국가기관이 갖는 강제적인 통계조사 권력은 위탁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 점에서 필요한 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통계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개발원의 조사권을 확고하게 보장해주는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조사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국제기구의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 동향

한 유 경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연구위원
- 「학원수강료 안정화 방안」, 「한국교육비전 2020」 외

세계 각국들은 교육의 성과 분석은 물론 향후 교육 전반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 판단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분류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육통계 문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통계의 관련 출판물들은 국내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교육관련 전문가, 행정가들에게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교육분야와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현재 교육의 발전 정도를 알려 줌으로써 자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하게 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OECD, UNESCO, 그리고 APEC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각국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세계의 교육발전 정도를 상호 비교, 분석하는 교육통계 및 지표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보다 객관화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화, 세계화되어 가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신뢰를 쌓아 가는 터전을 제공받기도 한다.

교육지표를 통한 양적인 설명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와의 성취수준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즉, 국제적인 비교를 통하여 자국의 교육체제의 약점을 인식하게 되는 반면, 간과되기 쉬운 자국의 강점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지표들은 한 국가의 교육경험이 독특한 것인지 또는 다른 국가에도 존재하고 있는 차이를 단지 반영한 것인지 등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OECD, UNESCO, APEC 등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 사업을 개관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나라 교육통계 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OECD 교육통계사업

가. 주요 사업 내용

OECD 교육위원회의 대표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교육지표사업 (INES : Indicators of Educational

System)은 1992년에 시작되어 UNESCO, EU와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통계정보에 대한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교육통계정보 서비스체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OECD 회원국들은 교육을 통해 경제적인 생산력을 강화시키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증가하는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 재원을 모색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OECD는 정책 형성의 과정을 알려주고 교육체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에 투자된 인간 및 재정 자원이나 이러한 투자들의 수익(returns)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표를 개발,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의 교육체제가 기능하는 방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OECD 교육지표들은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정책적 요구가 반영된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자료 수집의 진행 과정(ongoing process)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OECD 회원 국가들과 사무국은 1997년에도 다음과 같은 7개 영역에서 41개 교육지표들을 개발하였다.

- ① 교육의 인구, 사회, 경제적 맥락
 - 청소년 인구의 비율, 성인 인구의 학력, 성인(25~64세)의 학력별 기대 취업 및 미취업 연수
- ② 교육에 대한 투자
 -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 지출,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학생 1인당 교육비, 재원별 교육지출, 정부수준별 공공 재원, 전체 고용인구 중 교직원의 비율,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가구에 대한 공공 지원
- ③ 교육에의 접근, 참여, 발달
 - 학교교육에의 참여, 유아교육,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 참여, 대학수준 고등교육 진학률, 고등교육에의 참여, 대학수준의 고등교육 진입률, 성인 노동인력을 위한 직업관련 계속교육훈련의 참여 유형
- ④ 교육 환경과 학교 조직
 - 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8학년 수학교사의

연령/성별 교직 경험, 8학년 수학교사의 방과후 학교관련 활동, 4학년과 8학년 수학교급 규모, 8학년 수학수업 중 학급 조직, 8학년 수학교과목 수강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초등학교의 학급 규모와 교사/학생 비율

- ⑤ 사회 및 노동시장에 대한 교육의 산출
 - 학력별 노동 참여, 취업/실업 교육, 청년층의 실업과 교육 실업률과 교육, 젊은층의 실업률과 교육, 교육과 임금, 학업 중퇴자의 실업률
- ⑥ 학생의 학업 성취도
 - 4학년의 수학 및 과학 학업 성취, 4학년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의 차이, 4학년과 8학년 수학 및 과학 성취도의 성장, 학년별 수학 및 과학의 성취도 차이, 8학년의 사회적 맥락과 학력 차이, 4학년과 8학년 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
- ⑦ 교육기관별 졸업자
 - 후기 중등학교 졸업자 수, 대학(교) 졸업자 수, 전공분야별 대학 졸업자, 노동인구 중 과학 관련 분야의 고등 교육자 공급

OECD 교육지표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는 1992년에 제1판 이후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1995년 EAG #3 이후 OECD 내 사업보고서 중 최고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 교육지표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별책으로 출간되고 있는 '교육정책 분석(Education Policy Analysis)'은 각국 정부에게 중요한 핵심 교육과제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OECD 교육지표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 주제에 대해서는 단행본이 발간되기도 한다.

나. 주요 추진 조직

향후 지표 개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지표의 개념과 정책 관련성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 일치가 필수적이다. OECD/INES의 지표 개발에서 지표 개념과 정책 관련성, 방법론, 자료수집 및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와 탐색이 이루어

OECD, UNESCO, 그리고 APEC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각국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세계의 교육발전 정도를 상호 비교, 분석하는
교육통계 및 지표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보다 객관화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진다. 이 때 각 국가의 정치적, 교육적, 그리고 실제적인 고찰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OECD 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기술회의 그룹(Technical Group)과 정책 입안가, 정부 대표자 및 연구자 등 200여 명이 모여 특정한 개발 활동에 중점을 두는 special network는 지표 개발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난다.

기술회의 그룹은 INES 보고서를 위해 그리고 OECD의 관련 활동을 위해 교육통계와 지표를 제공한다. 기술회의 그룹은 대부분의 지표들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 Network 조직은 보다 전문적이고 새로운 교육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회원국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집단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etwork A는 학생 성취에 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Network B는 시작(initial) 및 평생(continuing) 교육과 훈련의 참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 사회적, 노동시장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생 교육과 훈련의 참여(incidence) 및 참여 기간,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변환(transition), 인간 자본 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에 대한 수익 등의 지표 개발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Network B에서는 참여 회원국을 중심으로 네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의 '교육이 사회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Network C는 학생 성취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책 결정과 그러한 결정에 대한 국제적으로 타당한 측정도구 개발을 탐색하고 있다. 주요한 영역으로는 i) 교수인력(예, 인구 특성, 자격 요건과 경험)을 설명하는 측정도구, ii) 교육인사(personnel)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지표, iii) 교사들의 직전 교육

과 현직 훈련의 양과 유형, 교육의 리더십, 그리고 교사의 동태 등에 관한 측정도구 등을 들 수 있으며, Network C는 교육체제의 의사결정 책임에 대해 국제 비교한다.

OECD/INES 사업 추진 조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PRAG(Program Advisory Group) : 사업계획에 관한 의사결정 조직으로 OECD의 사무국과 주요 초보 전문가로 구성됨.
- ② SG(Steering Group) : TG(Technical Group)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PRAG에 사업계획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TG 전문가 중 일부와 INES 사무국 담당자로 구성됨.
- ③ TG(Technical Group) : 통계 및 지표의 내용을 집중 검토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외국 조정관(national coordinators) 및 교육통계담당관리 등으로 구성
- ④ Network : 새로운 교육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회원국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집단(현재 학업성취, 교육과 노동, 학교 교육의 특징과 과정(Process) 등 3개 네트워크 활동 중)
- ⑤ National Coordinators : 회원국들의 자료수집 및 INES 사업 전반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회원국당 1인의 대표로 구성

다. UNESCO 교육통계사업

UNESCO에서 발간하고 있는 교육통계로는 유네스코 통계연감(UNESCO Statistical Yearbook)이 있다. 교육에 관한 세계적 통계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교육통계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 연감작성을 위한 자료들을 매년 수집·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UNESCO에서는 1990년대부터

매 2년을 주기로 세계교육의 발전(World Development in Education Report)의 교육지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OECD가 주관이 되어 UNESCO와 EU의 공동사업으로 교육에 관한 통계의 표준화 작업이 1992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종래 OECD, UNESCO, EU가 별개로 수집 작성해 오던 교육에 관한 국제통계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OECD, UNESCO, EU 통합통계조사표(UOE Questionnaire)를 개발하고 이를 도구로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인 통계집의 발간은 각 기구의 회원국들만을 대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UNESCO 통계사업은 기존 발간해 오던 UNESCO Statistical Yearbook, 교육지표, 그리고 교육통계 및 지표 DB의 세 부분으로 구성 추진되고 있다. UNESCO DB에서는 폭넓은 교육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보를 최신 것으로 개정하고 있다. 수집된 일부 정보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제작을 위해 편집되고 있는데 과학,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통계는 추후 개발될 예정이다. UNESCO Statistical Yearbook의 1997년판에는 75개 표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11개 표는 인터넷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UNESCO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표(Indicators)들은 교육에의 접근(Access to school), 교육의 참여(Participation in education) 내적 효율성(Internal efficiency), 학생-교사 비율(Pupil-teacher ratio), 공교육비 지출(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문맹률(Illiteracy) 등이다. UNESCO 통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표 색인을 지역별, 국가별, 연도별로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에 관한 통계지표에의 접근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UNESCO World Education Report의 지속적인 출판과 UNESCO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계를 사용한 세계 교육 지표에 근거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16개 지표들을 웹사이트에 소개해왔으며, 빠른 시일 내에 20개 지표들이 첨가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표 웹사이트의

중요한 특징은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면에 좀더 알고 싶은 사용자가 교육지표에 대한 개념적인 틀과 개별 지표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APEC 교육통계사업

아·태지역 경제협력회의(APEC :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교육통계 사업은 APEC의 10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중 하나인 인력자원개발분야(Human Resource Development) 실무그룹의 4개 네트워크 중 'APEC 교육정책 포럼(Education Forum)'에서 수행되고 있다. APEC 교육정책 포럼의 목적은 첫째, 비교조사를 통한 정보의 교환으로 새로운 공동 비교 연구, 비교통계를 개발하려는 공동 노력, 새로운 교육모델의 개발·시행·평가를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그리고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실재에 대한 APEC 회원국의 현존하는 최상의 연구결과들을 교환하고 보급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둘째, 교육관련 목적의 인적 교류, 특히 교육정책입안자, 교육연구자 및 학자, 교사·교육행정가·학생들의 교환을 장려하고 혁신적인 교류방식을 장구하는 것이다.

1993년 1월 도쿄 Education Forum의 첫번째 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Asia-Pacific region의 교육통계를 향상시키고 범위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책에 관련되고, 기본적이며 비교할 수 있는 교육통계를 수집하며 출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계를 다룬다. 참여하는 회원 국가들은 학교 단계별 교육에 중점을 두어, 특히 학생, 학교, 직원과 관련된 자료에 중점을 두기로 동의하였다.

1993년 상반기에 회원국들은 수집되는 자료 유형, 수집 방법, 그리고 제안된 보고서 내용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994년 6월 Education Forum meeting에서 프로젝트는 초·중등학교 교육에 초점을 계속 두되 취학전 교육, 졸업 및 진학을, 문해율, 수학·과학 성취수준 등과 관련된 주제도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최근 호주의 주도하에 '아·태지역의 학교교육 통계(School Education Statistics in the Asia-Pacific Region, 1998)'가 1994년¹⁾에 이어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타이, 미국 등 18개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III 맺음말

한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UNESCO 통계연감에 지속적으로 교육통계 자료를 제공하였고, 1993년에 즈음하여 APEC 교육포럼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교육통계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최근 UNESCO와 함께 교육통계의 세계 표준화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OECD와 관련하여 한국은 1995년 초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Contact Point가 되어 교육지표사업(INES :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에 참가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OECD에서 발간하는 교육지표 제4판에 국내 교육지표가 최초로 수록되었고, 이는 1997년 상반기에 'OECD 교육지표'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1997년 12월에 OECD 교육지표 제5판이 간행되었으며 한국은 총 33개 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현재 1998년 OECD 교육통계·지표(Education at a Glance, 1998)사업에 참여하여 교육지표 산출공식의 검토, 교육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 분석, 시계열 자료 제공 : 1989/90 기준으로 1997년 UOE 자료수집 안내서의 정의에 따라 학교급별/재원별 교육비, 학교급별 교직원수, 학교급별 학생수 등의 항목 분석, 1997년 OECD 교육지표의 번역 및 출판,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 개정에 따른 국내 통계 분류 및 통계 체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통계와 지표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준거는 '국제비교가능성(international comparability)'이며 이는 우리 교육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비교적 소상하게 비교해 줄 수 있는 정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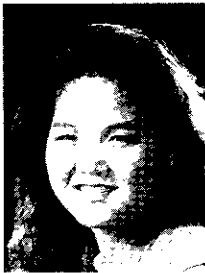
가 되고 있다. EAG(Education at a Glance)는 최근 OECD의 대표적 통계보고서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도 약 60% 이상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교육통계는 지식경제체제에서 교육이 자본으로 저장되고, 투자되고, 소비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안에서 포착되어야 함을 예고한다. 국제통계사업에서 특히 통계는 숫자 이상이며 이런 측면에서 교육통계 및 지표를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개발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국제적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에 따른 교육통계 및 지표의 국제적 수요와 협력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에 공신력 있는 국제비교 교육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초 및 정책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 나라 교육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School Education Statistics in the Asia-Pacific Region (1994)

예능교육 개선을 위한 '링컨센터'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 가 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미국 예일대학 음악대학원 졸업
- 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들도 다양해지고,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적인 생각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혼자만의 독자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흔히 일반 대학 교육은 특정 중요과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함양이라는 측면이 소홀히 되기 쉽다. 그러나 교육은 앞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되는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이고 교육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상, 사회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폭도 넓어져야 한다. 즉 지식의 축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지식의 탐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성취를 위해 사려 깊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축적된 지식과 능력이 다중이 힘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흔히 교육적 측면에서 예술은 필수과목이라기보다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준 높은 선생님과 적절한 교육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술 교육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는 예술활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룹활동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 활동이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과정을 내포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념에 바탕을 둔 자신의 의견이 정립되어야 하며, 개인의 의견은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전체의견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되,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의견과 주장은 예술의 독특한 특징인 창조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요구사항들이 충족된 하

나의 완성된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링컨센터'(Lincoln Center Institute)가 실시하고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Aesthetic Education Program)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행정 관리자들에게 예술교육이 일반 교육체제 안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예술가들과 학교선생님들을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고도로 높은 경지의 예술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산 경험은 더 높은 수준의 예술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예술교육이 지니는 긍정적인 효과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링컨센터의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요소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학교의 교과과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실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I LCI 프로그램이란?

당초 뉴욕시에서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의 공연을 위해 설립된 '링컨센터'(Lincoln Center)는 1975년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예술가의 상주프로그램(Artist-in-Residence Program) 체제의 '링컨센터 교육기관'(LCI: Lincoln Center Institute)을 창설하였다. 이 기관은 콜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뿐만 아니라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뉴욕지역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와 학교행정 관리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I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링컨센터 교육기관(LCI)은 예술교육의 개발을 모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예술교육이 전체교육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두 그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들의 교육은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돕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교과과정 안에서 예술과목을 효과적으로 도입, 예술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목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예술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다. 이렇게 배양된 자신감은 예술교육을 보다 성공적으로 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예술경험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교육이 지니는 여러 가지 효과 즉, 자신감, 자긍심, 정서적 안정, 학습유발동기 등을 자극한다. 즉, 예술적인 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선생님들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예술적 인식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전인(全人)적인 교육효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전반적 예술활동—음악, 미술, 무용, 연극—에 관여하고 있으며,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는 선생님들의 교육이다. 선생님들은 방학기간 동안 6개 정도의 과정으로 구성된 집중적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다. 교과과정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등의 일반적 교육형태보다 참여를 통한 실제의 체험이 중요시된다.

간단한 멜로디나 리듬을 작곡해 보기도 하고, 직접 안무과정에 참여하여 공간감각을 익히기도 한다.

두번째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링컨센터의 예술가들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학교, 링컨센터, 박물관에서 제공 가능한 예술작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교과과정에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자세하게 검

토한다.

마지막 단계는 수립한 계획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선생님들은 전문예술가들과 상의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연주를 하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예술품의 '포트폴리오'를 학교로 가져가며, 링컨센터 내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활동이 하나의 통합된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프로그램 구성상의 독특한 특징은 이 모든 교육 과정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식되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열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참여하며 시범적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예술자체의 감상자사이의 거리를 좁혀 줌으로써 학습과정의 발판역할(Scaffolding)을 한다.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배움이나 혹은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가르침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접근방식은 참가자들에게 보다 폭 넓은 이해를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Ⅳ 교육이론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LCI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예술경험은 인간의 정서적, 예술적 측면을 발달시킨다.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의 이해, 작품이 나오기 까지의과정, 그리고 완성된 작품은 인간의 인식능력을 확장시킨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은 기능적, 예술적 개발 뿐만 아니라, 참교육이 목표로 하는 동기유발과 창조적이고도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시킨다.


동기유발에 관련해서 일찍이 Pressley와 McCormick과 같은 교육학자는 '흥미 있는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증폭시킨다'고 갈파하였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보다 직접 참여를 통한 교육형태가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한 Anderson의 이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중의 하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일반적으로 교실의 분위기는 동기를 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많은 교육이

론가들은 경쟁적 학습보다는 협력적이고 긴장이 완화된 학습분위기가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Johnson & Johnson(1985)과 Nichollas(1989)는 소그룹내에서 토론과 같이 상호간에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는 것은 참여를 통한 동기유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워크숍 기간 동안 행해지는 그룹활동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토론에 참가하도록 하는데, 이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없이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론면에서, 참가자들은 예술작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며 예술적 교감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관찰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 간에 의견을 비교하고 서로 질문을 하며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은 더 구체적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방법은 '생각에 대한 생각' 즉, '메타코그니션'(Metacognition)이라는 인식작용을 촉진시킨다. '자신의 지식과 사고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되는 '메타코그니션'은 성찰력을 넓히고 보다 높은 차원의 사고과정(higher-order thinking)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교육에 어떤 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를 현 교육체제 안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해 준다. 학교와 링컨센터간, 예술가와 선생님간에 형성된 동반자 관계는 예술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실천 뿐만 아니라 외부의 행정적 협조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링컨센터의 이 교육기관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17개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발족시켜 연계를 맺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계속 연구하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일반과목 선생님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술과목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교육환경 속에서 LCI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하나의 모델로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전자도서관 이용법

—자료검색을 중심으로—

김정자 (본원 도서실운영팀장)

우리는 보통 자료검색에 익숙해 있을 수 있다. 자료검색 기회를 흔하게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과 효율적인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러면 효율적인 자료검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전자도서관에서는 Z39.50, SGML, MARC 등 생소한 용어가 등장한다. 이러한 용어는 자료검색과 이용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국교육개발원 전자도서관의 오픈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방법에 대해 기술한 다음, 효율적으로 자료검색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기법, 전자도서관 개발 환경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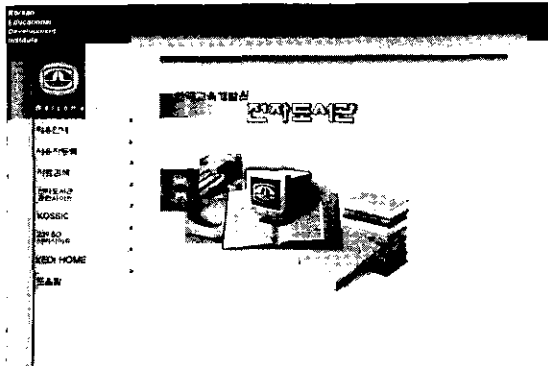
내용 기술에 앞서 밝혀 둘 것은, 본 시스템은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환경에 맞게 customizing한 것이기 때문에 본 시스템을 익힐 경우, 동시에 국가전자도서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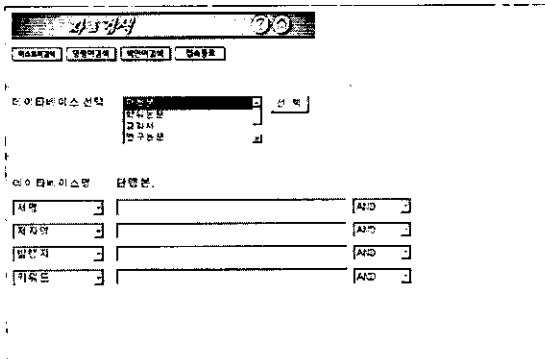
전자도서관 자료검색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다.

1. 빈칸채우기 검색
2. 명령어 검색
3. 색인어 검색
4. 히스토리 검색

1. 빈칸채우기 검색

다음의 화면은 초기화면에 접속 후, 기본값으로 나타나는 검색화면이다. 서명, 저자 등의 검색항목





과 'AND', 'OR', 'NOT' 등 연산자 항목이 이미 화면에 주어져 있다. 이용자는 검색항목을 선택한 후, 검색질의어만 입력하면 된다.

서명 검색항목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검색이 가능하다. 서명 키워드 검색과 서명 완전일치 검색이다. 이것은 검색효율을 생각한다면 유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다. 서명키워드 검색은 완전한 서명이 아닌, 서명의 일부 용어만을 검색질의어로 사용하는 검색이다. 이럴 경우 시스템은 서명키워드로 간주하고 그 단어를 색인어로 갖는 모든 문헌을 출력한다. 예를 들어서 '교사'를 검색질의어로 사용했을 때, '교사의 가치관', '수업이 훌륭한 교사', '교사와 아동' 등의 문헌이 모두 출력된다.

서명 완전일치 검색은 특정 문헌의 완전한 서명을 알고, 그 문헌 하나만의 출력을 원할 때 행하는 검색법이다. 이럴 경우 검색문을 " "로 묶어서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교사는 만능이다"의 검색문을 입력하면 '교사는 만능이다'란 제목을 가진 문헌만 출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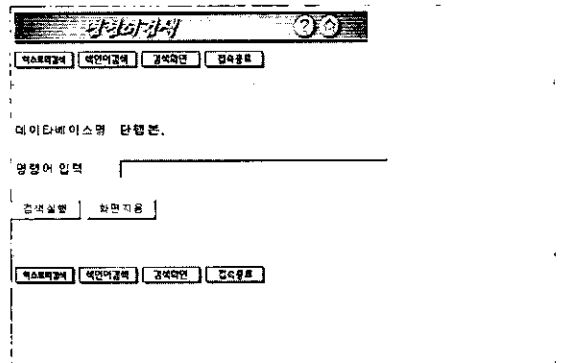
키워드 검색이 갖는 제한점도 알 필요가 있다. 때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검색건수가 0인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유는 키워드필드(653태그)에 색인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하는 문헌을 모두 검색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과 키워드 검색항목을 각각 이용한 검색의 수행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료검색을 수행하기 앞서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 교과서, 북한자료, 검사도구 등 6가지 종류이다. 검색을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둘 혹은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만을 검색하고자 할 때, 3가지의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한다.

2. 명령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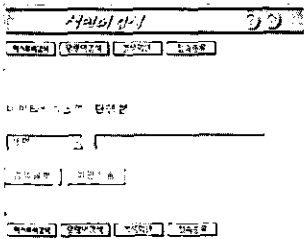


명령어 검색 화면이다. 명령어 검색은 이용자가 직접 검색항목, 연산자항목, 검색질의어를 모두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법이다.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 정보시스템 시절부터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DIALOG 등 온라인 정보검색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이용자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검색법이다. 초보자보다 검색 숙련자에게 적합한 검색법이다. 특징은 검색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검색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용어절단, 불리안연산자 등을 찾고자 하는 필드명, 검색질의어와 함께 탐색문을 작성하여 검색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TI : 학교 & AU : 홍길?>이란 검색식을 사용했다고 하자. 이것은 서명에 '학

교'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저자가 홍길...로 시작되는 문헌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문이다. 검색결과로, 서명에 '학교'라는 용어가 있고, 저자가 '홍길동', 혹은 '홍길우' 등인 문헌들이 모두 출력된다. TI와 AU는 서명과 저자의 필드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따라서 서명(TI), 저자(AU), 키워드(SU), 발행기관(PP) 등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주요 필드명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3. 색인어 검색



색인어 검색 화면이다. 여기서 색인어사전을 이용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 단어가 불확실하거나 정확히 모를 경우에 유용하다. 즉 단어의 처음 몇 글자만 입력하여 검색할 단어 자체를 검색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저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싶는데 성이 "윤"인 것만 알고, 이름을 모를 경우 "윤"으로 색인어 검색을 실행한다. 실행 결과로 성이 '윤'인 저자들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 때 원하는 저자 이름을 클릭하면 그 저자의 저작물이 검색된다.

4. 히스토리 검색

히스토리 검색은 서버에 접속한 후에 실행한 모든 검색의 검색질의어들을 보여 줌으로써, 검색질의어를 다시 입력하지 않고 전에 실행한 검색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은 서버에 접속 후, 실행한 모든 검색의 기록을 남겨 준다. 이용자는 기록된 검색질의어들을 이용해서 다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검색질의어와 조합하여 추가 검색을 실행할 수도 있다.

5. 검색효율을 높이는 검색기법

앞서 네 가지 검색방법을 제시했다. 지금부터는 네 가지 검색을 수행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경우, 검색의 편리성이나 검색 결과를 향상시켜 주는 검색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KEDI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검색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가. 용어절단을 사용한 검색기법

용어절단이란 검색질의어로 사용하는 용어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검색질의어로 쓰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입력된 부분적인 검색질의어와 일치되는 부분을 갖는 모든 문헌이 검색된다. 예를 들면 'librar*' 검색질의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했을 때 "librar"로 시작되는 모든 단어, 즉 library, libraries, librarian, librarianship 등을 갖는 문헌이 모든 검색되어 출력된다. 또 용어부분의 절단 위치에 따라 우측절단과 중간절단이 가능하다.

용어 절단표시 부호로서 "*", "?" 등 두 가지를 사용한다. 절단표시 기호 "*"는 절단되는 문자열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일 경우에 사용된다. 앞서 제시한 "librar*"의 경우다. 단수, 복수와 다양한 어미를 갖는 용어의 검색에서 유용하다.

절단표시 부호 "?"는 절단되는 문자들의 갯수가 정확하게 고정된 경우에 사용된다. 용어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의 문자를 표시부호 "?"로 표시하면, 부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와 일치되는 부분을 갖는 문헌이 출력된다. 예를 들면 "working wom?"이란 검색질의어를 사용하는 경우 "working woman"이나 "working women" 등 복수, 단수 형

태의 단어가 동시에 검색된다. 그러나 KEDI 시스템에서는 좌측절단은 지원하지 않는다.

나. 불리안연산자를 사용한 검색기법

검색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검색 기법이다. 검색어들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불리안 연산자인 AND, OR, NOT으로 표현하여 검색을 실행한다. 연산자는 편의상 간단한 부호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AND를 '&'로, OR를 '/'로, NOT을 '!'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① AND

AND의 경우, AND로 연결된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헌이 검색된다. 검색건수가 너무 많이 출력될 것이 예상될 때 건수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면 '학교'와 '정책'을 AND로 연결하여 검색을 수행하면 '학교'와 '정책'을 함께 다룬 문헌이 검색된다.

② OR

OR의 경우, OR로 연결된 검색어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 문헌이면 모두 검색된다. 예를 들면 'assessment'와 'evaluation'을 OR로 연결하여 검색했을 때 'assessment'이나 'evaluation'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갖는 문헌이 있으면 모두 검색된다. 즉 한 주제어의 관련어, 동의어를 모두 동원하여 OR로 연결하여 검색하면 그 주제어와 관계된 모든 문헌이 출력된다. 유의할 점은 광의의 개념을 OR과 함께 사용했을 경우 검색건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에서의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③ NOT

NOT의 경우, NOT으로 연결된 검색어를 제외한 문헌이 검색된다. NOT으로 연결된 검색어를 포함한 문헌을 제외시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영재교육 NOT 과학'의 검색문을 가지고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을 제외시킨 영재교육을 다룬 문헌이 검색된다. 즉 영재교육 중에서 과학

부문 영재교육 문헌을 제외시킨 나머지 영재교육 문헌이 출력된다.

6. 전자도서관 개발 환경

가. Z39.50이란?

Z39.50은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보검색 표준 프로토콜이다. 검색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프로토콜을 준수할 경우, 원격지간의 도서관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색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해 준다. 클라이언트 서버 기저에 기반을 두고 분산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상이한 도서관 검색시스템간의 통신을 지원한다. 즉 흩어져 있는 여러 검색시스템을 한번의 검색행위를 통해서 여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 Z39.50은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가? 인터넷을 통해 여러 대학교의 DB를 검색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5개의 대학교라고 했을 때 각각의 5개의 DB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 일단 개개 시스템에 접속하는 시간, 시스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익히기 위한 시간, 검색하고 출력하는 시간 등... 결국 이 같은 행위를 5번 행해야 된다. Z39.50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해결책이다. 즉 Z39.50은 5번씩 각각의 DB를 넘나들면서 자료 검색을 실시하는 불편을 덜고, 단 한 번의 검색질의를 사용해서 5개의 DB를 한 번에 검색하여 이용자 모니터에 결과를 뿌려 준다. 따라서 5번 수고와 시간을 단 한 번의 시간과 수고로 단축시켜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자도서관 초기 화면에 'Z39.50 사이트'란 메뉴가 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전자도서관 사이트와 함께 통합색인이 있다. 통합색인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정보개발센터, KAI-ST과학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단 한 번에 검색

하여 검색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시켜 준다.

나. MARC란?

전자도서관 '상세화면'에는 'MARC 보기'가 있다. 검색된 문헌의 레코드 내역, 즉 서지사항 전체 내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구성은 숫자(태그로 지칭된)로 표기된 필드명과 그 내역으로 되어 있다. 서명이 담겨지는 태그는 245이고, 저자 필드는 100과 110이며, 주제어 필드는 653이다. 이것은 전세계가 약속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표준이다. 국제적으로 서명은 모두 245 태그에 입력되고, 주제는 653 태그에, 발행기관은 260 태그에 입력한다. 그 결과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상호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MARC는 Machine Readable Catalogue의 약자이다. 도서관 자료의 서지사항을 입력하기 위해 개발된 세계적인 입력 표준 포맷이다

자료검색의 간략화면과 상세화면에서는 문헌 서지사항의 일부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서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MARC 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다. SGML이란?

목록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표준 포맷이 MARC라면, 원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 데이터 표현 포맷은 SGML이다.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약자이다. 원문의 공유와 교환을 위해,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문서 원문 정보를 공통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준포맷이다.

① SGML브라우저

원문을 SGML로 표현했을 때, 이를 이용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SGML브라우저가 필요하다. 이 브라우저는 전자도서관에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SGML브라우저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 열기 ◆

SGML문서를 디스켓에 파일로 가지고 있을 때

'열기'로 파일을 불러서 볼 수 있는 기능

◆ URL열기 ◆

인터넷을 통해 다른 URL에 들어가서 SGML문서를 불러서 볼 수 있는 기능

◆ 저장 ◆

SGML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 스타일저장 ◆

SGML문서의 글자 크기나 문자 형태, 위치 등의 문서 스타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 쪽설정 ◆

SGML문서의 일부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프린트할 페이지를 설정하는 기능

그 밖에 인쇄기능, 인쇄하고자 하는 페이지 미리보기 기능, SGML 문서의 특정문자 찾기 기능, 문서의 글자 크기, 형태 등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다.

라. 이미지뷰어

이미지 원문 정보는 이미지화일 형태, 즉 TIFF 화일르 원문 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그러므로 이미지화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미지뷰어가 필요한데, 이것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뷰어는 웹브라우저에 플러그-인 방식으로 동작하고 TIFF 형식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미지뷰어는 이미지를 축소·확대하고, 회전과 저장, 인쇄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자도서관 (<http://elfs.kedi.re.kr>) 이 9월에 오픈되었다. 현재는 목록정보 DB만 구축되어 있고, 구축 중에 있는 원문(full-text) 정보 DB는 극히 일부만 제공되고 있다.

활동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활동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 유인종)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각종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하여 12개 청소년상담센터를 1997년 3월에 개설한 이래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상담 및 민원 안내 이외에 폭력 신고와 불법과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징계 받은 학생에게 특별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9월 말 현재 인적 구성은 상담교사 51명,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전문상담원 33명, 정신과 의사인 특별상담원 24명으로 되어 있다. 상담 실적은 1997년 3~12월 27,090건, 1998년 1~9월 34,86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특별적응교육 대상자는 1998년 3~8월 719명에 달하고 있다. 상담센터 이용자 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으며 상담센터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원장 : 홍성구)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1998년 9월 현재 상담자료 70종 235부를 배부하였으며, 직무 연수를 8회에 걸쳐 연 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PC통신(천리안, 에듀넷 및 미래텔)에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각종 상담은 물론 폭력 신고와 불법과의 신고를 받고 있는 등 상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 '98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개최

본원에서는 98학년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23

개교와 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49개교의 시범운영 보고회를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아교육, 안전교육, 방과후교육, 열린교육, 인성교육, 인터넷 활용교육 등 다양한 영역 및 시범과제로 1년 또는 2년 기간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현장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수업을 공개한 후 수업 협의와 워크숍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학교 환경과 보고회 참관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부산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부산교육' 287호 발간

본원에서 계간지로 발행하는 '부산교육'이 가을호인 287호의 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호는 '학교폭력 예방지도 방안과 실제'라는 기획 주제로 학교 현장의 우수 실천사례는 물론, 새로운 교육이론 및 정보 제공과 부산교육 중점시책 구현방안 홍보 등을 다루고 있다.

12월에 발간 예정인 288호는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학습방안과 실제'를 기획 주제로 삼아 실천 사례를 공모한다.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 '98.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체육대회 개최

'98년 10월 14일(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공단 남동 베1호 공원에서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4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담자원봉사자의 인화단결, 사기양양 및 체력단련을 위해 '상담봉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 '진로상담정보' 3호 발간, 보급

본원에서는 지난 10월 1일(목) '진로상담정보' 3호, 3,700부를 발간하여 인천광역시 초·중·고교 및 전국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 수준별 개별학습 자료 개발, 보급

본원 연구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중학교 1학년 수학과 수준별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이 자료는 학습자가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보충·심화과정의 세 수준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기본 학습과정에서 공통 필수 내용을 학습한 후에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보충과정과 심화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보충과정은 기본과정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나 난이도가 낮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에서 습득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적용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클럽활동 지도자료 발간, 보급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덕·체·예·기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 활용하도록 클럽활동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관내 중학교에 배부하였다. 일선 현장의 인적·물적자원의 부족과 지도 자료의 미비점을 감안하여 '96학년도부터 25개 부서를 선정, 지도자료를 개발한 데 이어 금년도 8개 부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각 부서의 지도목표, 방침, 연간 지도 계획, 활동과정안, 차시별 활동내용, 부서별 참고 자료 등을 내용으로 담았으며, 각 학교의 여건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면 클럽활동 운영의 내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 '열린교육의 성공전략' 발간

본원에서는 10월 30일 '열린교육의 성공전략'을

발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경기도 교육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erinet.re.kr>)에 탑재하였다.

열린교육이 학교현장에 급격하게 확산·보급됨으로 인하여 과급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열린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입안자, 학교 경영관리자, 학급담임이 부담 없이 열린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론과 실천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 현장연수자료 '교단가꾸기' 91호 발간

본원에서는 9월 15일 '교단가꾸기' 제91호를 발간, 보급하였다. 이번 호에는 '진로교육'을 주제로 여학생 진로교육의 실천적 의미, 진로상담 교사의 자질과 역할, 학생의 자아의식 발달과 정체성 확립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생활지도, 진로교육의 기초적 이해와 지도방법,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선택과 활용, 특별활동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 상담활동의 과정과 기술, 진로상담실 운영의 실제, 가정에서의 자녀 진로지도, 심리검사의 효율적 활용방안, 감성지수(EQ)를 높이는 진로교육 등을 내용으로 편집하여 교단 교사들에게 진로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 제67회 '교단교육 강좌' 개최

본원에서는 10월 26일 도내 초·중등 교사, 관리자, 전문직 등 총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7회 '교단교육 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강좌는 '과학의 본성과 과학교육'이라는 주제로 학교현장에서의 과학교육의 문제점과 과학교사의 책임, 수업방법 및 자료활용 방법 등에 관해 한국교원대 권재술 교수의 강의를 있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 '98. 제29회 '강원도 교육자료전' 개최

제29회 본도 교육자료전시회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교육연구원 특별전시장에서 열렸다. 시·군 예선대회를 거쳐 도덕·윤리교육 등 15개 분야에서 106점이 출품되었고, 이 중 특상 35점, 우수상 36점, 장려상 35점 등 총 106점이 입상되었다. 특상 35점 중 분야별 1점씩 총 15점을 10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교육자료전에 출품하였다.

이번 도 교육자료전의 특징은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반화시키기에 용이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시상했다는 것과 대체적으로 수준별, 능력별, 개별학습을 고려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출품 유형은 컴퓨터를 이용한 작품이 66점,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작품이 6점 등 첨단매체를 통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다수 출품되어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활용면이 더욱 발전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106점 중 KERIC(강원도 교육연구정보센터 net)에 탑재할 가치 있는 작품은 모두 탑재해서 일선 선생님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초·중등 진로 및 상담자료 개발, 보급

본원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용 '가정교육의 지혜 Ⅲ', 중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고등학교 심성수련 교재로 '고등학교 학교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연이어 출간하였다.

학부모 계도자료는 인성교육편과 진로교육편으로 나누어져 있어 바른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으며, 중학교 교사용으로 펴낸 '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학년별·영역별 진로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편집되었고,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올바른 학생지도를 위한

심성수련 교재는 만남, 친교, 결실, 적용 프로그램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하여 학생들의 상담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 제1회 교육자료 공모전 개최

본원에서는 '제1회 교육자료 공모전'을 충청북도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관한 '제2회 선진 열린 수준별 교육 S/W 전람회'와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전람회에는 교육부 정보화지원 관계관을 비롯한 도내의 모든 교직원과 타 시·도의 교원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 직원 등 많은 관람자가 참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다수 참석함으로써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이 공모전은 지난해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공모전으로, 자료 출품 영역은 도덕·윤리 교과 외 12개 영역으로 하고, 자료 제작 분야는 슬라이드, 녹음, TP, 비디오, CD의 5개 분야로 제한하여 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사한 후 계획서 입선자 77명이 6개월간 자료 제작 기간을 거쳐 최종 완성한, 정선된 교육자료들이 출품되었다.

□ '신바람 나는 열린교실' 영상자료 자체 제작, 전국 보급

본원에서는 '98. 전국 시·도 교육(과학)연구원 공동자료로 교육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확산되고 있는 열린교육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바람 나는 열린교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자료 11편(240분)을 제작하여 도내 초·중등학교와 전국 시·도 교육(과학)연구원과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이 자료는 본원에 신설한 스튜디오와 영상 편집 시설을 이용하여 자체 기술로 제작한 것으로, 본 자료 제작을 위해 본 도내 초·중학교에서 열린교

충청남도 교육연구원



육에 가장 열의가 있고 열린수업에 모범이 되는 교사를 선정하여 열린수업에 따른 실제 수업을 전개하였으며 이들 장면들을 영상자료화함으로써 열린수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특히 본 영상자료의 내용 구성은 열린교육 환경의 구성과 학습내용 조직 방식에 따라 교과분리형, 교과연합형, 교과초월형으로 구분하여 수업 전개 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집하였기 때문에 열린교육, 특히 수업전개에 자신이 없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실시

본원에서는 지역사회의 교학력 인력자원 활용과 진로상담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생상담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130명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23일에는 청주지역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협력학교 소속 상담자원봉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명의 강사가 '청소년의 심리상태와 미래', '상담실 운영의 실제', '신세대 자녀의 이해와 상담' 등의 주제로 강의를 하였으며 12월에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책으로 엮어 보급하게 된다.

□ 열린교육자료 전시회 개최

본원에서는 '98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교육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우수교육자료의 일반화를 통해서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교육자료 제작 활동의 풍토 조성을 통해 열린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충청남도내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이 참가하는 행사이다.

출품 현황은 영상자료 92편, 교과·교구자료 221편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1등급 21편, 2등급 42편, 3등급 58편이 입상하였으며, 우수작품 15편은 전국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회에 출품한 경향을 살펴보면 영상자료 분야에서는 매체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VTR, TP 자료가 증가하였고, 촬영의 기교보다 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둔 작품이 많았다.

그리고 교과·교구자료는 학습의 개별화를 위한 수준별 자료가 증가하였고 인성교육 및 열린교육 학습자료 제작과 멀티미디어 활용이나 지역화 자료의 개발에 힘쓴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

□ 연구·시범학교 운영 공개자료 DB화

본원(원장 : 류근우)은 98년도 연구·시범학교 운영 공개자료 일체를 교육정보센터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선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본원이 협의·지도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 중 98년 10월과 11월중 공개보고회를 갖는 학교는 교육부 지정 6개교(초등 1, 중등 5)와 도 지정 25개교 등 모두 31개 학교다. 에너지 절약 교육을 비롯한 환경교육, 순결교육, 성교육, 봉사활동 등 범교과 학습에 대한 영역과 초등영어교육, 교수매체,

체육교육, 복식학급, 교육과정 연구 등 교과와 특수과제 영역 등에서 2년 동안 시범·연구해 온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금년도 보고회의 중점은 외형적 낭비 요인을 지양하고, 교육현장에서 직면하는 교육문제의 해결과 교실수업의 혁신을 위한 검증 수업에 두기로 하였다. 아울러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생산된 보고서를 비롯한 참관 안내, 일반화 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 TP 자료 등을 디스켓이나 CD-ROM에 담아 제출토록 하여 정보관리실에서 이를 정리, 인터넷에 올려 일선학교나 교사들이 교육연구 정보를 공유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정보 활용 능력 연수 열기 고조

본원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직원들의 정보활용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컴퓨터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교육 정보화의 기반 조성은 물론 일선학교의 업무 처리와 수업개선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8년도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멀티미디어, 컴퓨터 통신, 저작도구,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컴퓨터 일반 등에 걸쳐 모두 680명을 연수시킬 계획이며, 직무연수 과정으로 초·중등 교장과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320명을 연수시킬 계획이다.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중등 전문직과 교감 등 40명이 본원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해서 컴퓨터 운영체제, 문서작성, 기본활용에 대한 일반연수를 받았다. 한편 전라북도 교육청은 '99년도 승진 예정 교감 및 교장 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 과학 및 수학 영재 발굴

본원에서는 과학 및 수학 영재의 조기발굴을 위한 '98. 청소년 과학경진대회를 10월 27, 28일 양일간 도내 초·중등학생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과학 및 수학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월성을 높이며,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진대회는 과학실험 경진대회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 36명이 참가했으며, 과학과 단원중 응용문제 중심의 실험 과제를 제시하여 실제 실험계획과 실험과정, 보고서 작성 등을 관찰평가 30%, 실험보고서 70%로 평가를 실시했다. 수학경시대회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 144명이 참가하여 수학실력을 겨루었다. 이들 학생들은 14개 지역교육청에서 선발된 대표학생들이며, 경진 결과 금상 6명을 비롯한 은상, 동상, 장려상 등 모두 114명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했다.


한편 전라북도 교육청은 영재아의 발굴과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를 '99년도에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 교육정보화 세미나 일선 호응 커

본원이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정보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세미나가 많은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교직원들의 교육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높이고, 정보기기의 사용 및 응용 방법, 학교 정보실 운영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현장을 찾아가 공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내 지역교육청별로 연 2회씩, 총 720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고 있다.

참가 교원들의 연수 요구를 미리 받아 실시하는 세미나에서는 홈페이지 제작법, 배너 만들기, 나모 웹에디터,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비롯한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개선의 실제 등을 프로그램 시연 및 질문·토의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10월 중에는 정읍, 고창, 부안 지역에서 교육정보화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 자료명 | 정가 | 대행출판사 | |
|-------------------------|---------------------------|---------------------------|------------|
| 배우며 생각하며 (초등학교용) | 배움책 (1-2) | 4,800 대한 | |
| | 배움책 (3-4) | 4,000 교과서 | |
| | 배움책 (5-6) | 3,700 (주) | |
| | 지도서 (1-2) | 3,300 (02) 3475 | |
| | 지도서 (3-4) | 3,600 -3800 | |
| | 지도서 (5-6) | 3,200 | |
| 생각하는 수학공부 (초등학교용) | 1학년용 | 2,600 | |
| | 2학년용 | 2,700 | |
| | 3학년용 | 3,300 | |
| | 4학년용 | 3,700 | |
| | 5학년용 | 3,700 | |
| | 6학년용 | 3,900 | |
| 민주시민 교육자료 |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학생용) | 35,000 | |
| |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지도서) | 3,300 | |
| | 우리와 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용) | 1,300 | |
| | 우리와 나 (초등학교 1-2학년 지도서) | 2,200 | |
| | 우리와 나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용) | 1,600 | |
| | 우리와 나 (초등학교 3-4학년 지도서) | 2,600 | |
| | 우리와 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용) | 1,600 | |
| | 우리와 나 (초등학교 5-6학년 지도서) | 2,400 | |
| |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학생용) | 1,600 | |
| |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지도서) | 3,100 | |
| | 성교육자료 | 아직도 아기라고요 (초등학생용) | 2,500 |
| | | 어른이 되나봐요 (중학생용) | 3,000 |
| | |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 3,400 |
| | 초등학교 영어학습 자료 | 3학년용 | 12,000 삼화 |
| | | 4학년용 | 12,500 출판사 |
| 교사용지도서 | | 2,400 (02) 776 -6687~8 | |

| 자료명 | 정가 | 대행출판사 | |
|-----------------------------------|------------------------|-------------------------|-------|
| 우등생0 되기 위한 글읽기 (초·중등학생용) |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 1,800 삼화 | |
| | 자기점검 학습전략 | 1,200 출판사 | |
| | 관계짓기 학습전략 | 1,200 (02) | |
| | 정교화 학습전략(I) | 1,700 776 | |
| | 정교화 학습전략(II) | 1,900 -6687 | |
| | 읽기학습전략 훈련지침서 | 1,200 ~8 | |
| 환경교육자료 (초등학교용) | 즐거운 환경탐구 (1, 2학년용) | 1,900 | |
| | 재미있는 환경탐구 (3, 4학년용) | 2,000 | |
| | 보람찬 환경탐구 (5, 6학년용) | 2,300 | |
| |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 3,900 | |
| | 영재교육자료 | 이야기나라 (초등학교 3, 4학년용) | 1,400 |
| | | 추정의 세계 (") | 1,200 |
| 사람들이 사는 곳 (") | | 1,700 | |
| 자식에 관한 연구 (") | | 1,100 | |
| 미술감상 (") | | 1,600 | |
| 교사용 지도서 (") | | 2,500 | |
| 신문기사 (초등학교 5, 6학년용) | | 1,000 | |
| 화불의 신비 (") | | 1,100 | |
| 우리나라의 풍습 (") | | 1,400 | |
| 깨끗한 물 (") | | 1,100 | |
| 동요만들기 (") | | 1,800 | |
| 교사용 지도서 (") | | 3,300 | |
| 에너지와 우리생활 (중학생용) | | 1,400 | |
| 전기와 그 이용 (") | | 1,200 | |
| 인간과 생태계 (") | | 1,000 | |
| 바다의 신비 (") | 1,100 | | |
| 우리가 사는 지구 (") | 1,300 | | |
| 교사용 지도서 | 2,800 | | |
| 수학과 학습자료 (중학생용) | 수학문제 해결의 지혜 (1학년용) | 4,100 | |
| | (2학년용) | 3,500 | |
| | (3학년용) | 3,500 | |
| 영어능력 신장자료 (중학생용) | 영어 읽기 | 3,800 | |
| | 영어 쓰기 (1) | 3,100 | |
| | 영어 쓰기 (2) | 2,500 | |
| | 영어 쓰기 (3) | 2,600 | |

| | 자료명 | 정가 | 대행출판사 |
|-----------------------------------|------------|---------|----------------------------------|
|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 초등학교용 (A형) | 950 | 한국적성 |
| | 초등학교용 (B형) | 950 | 연구소 |
| | 중학교용 (A형) | 950 | (02)515- |
| | 중학교용 (B형) | 950 | 5722 |
| | 고등학교용 (A형) | 950 | (02)515- |
| | 고등학교용 (B형) | 950 | 5725 |
| | 대학교용 (A형) | 1,100 | |
| | 대학교용 (B형) | 1,100 | |
| | 초등학교용 추가검사 | 1,100 | |
| | 중학교용 추가검사 | 1,100 | |
| | 고등학교용 추가검사 | 950 | |
| | 진로성숙도검사 | 중·고등학생용 | 750 |
| 아동용 개인 지능검사 (KEDI -WISC) | 만5세~만15세 | 104,000 | 도서출판 특수교육 (02)812- 0348 |

| | 자료명 | 정가 | 대행출판사 |
|--|---------|--------|--------------------------------------|
| 교실에서 세계로, 세계를 교실로 -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 - | | 6,500 | (주) 홍익 미디어 (02)761- 0650 |
| | 열린교육 입문 | 10,000 | 교육 과학사 |
| 한국교육 평론 1997 | | 15,000 | (02)716- |
| 열린교육을 위한 초등 교육과정 재구성 - 4학년 2학기 학습지도안 수록 | | 21,000 | 5361 |
| - 국난극복과 21세기 재도약을 위한 교육 전략 - | | 6,000 | (주) 현 대 문학 (02)3472- 8151~5 |
|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 | | |

【KEDI 도서회원】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87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회), '한국교육'(연 1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15~20종(익년도 3월) 우송

2. 연도별 회원제

회원 자격은 1년간 주어지며, 가입 연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익년도 3월 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회비(1구좌당)

* 가입 연회비 : 70,000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 홍보·출판팀(전화 : 3460-0411, Fax : 577-5117)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입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를 보게 되면

그 중에 한두 번쯤은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들이 불이 붙어 있는 둥근 고리 속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대개의 동물은 원래 불을 싫어합니다.

털이 긴 동물일수록 거의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그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이 동물을 불이 붙은
고리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뛰어든 후에 이루어지는 보상이나 혹은
뛰어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내모는 가혹한 훈련이 아니라,

바로 동물과 조련사 사이에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동물에게는 여태껏 조련사가 훈련시키는 대로 해서
목숨이 위협했거나 손해를 당한 적이 없었다는 믿음.

나에게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여는 한국교육개발원
